

박 사 학 위 논 문

한겨레신문의 창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언론민주화 운동의 관점에서

고 려 대 학 교

사회학과

고 승 우

2002년 4월

임 희 섭 교수 지도
박사학위 논문

한겨레신문의 창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언론민주화 운동의 관점에서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고 려 대 학 교
사회학과
고 승 우
2002년 4월

고 승 우의 문학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02년 4월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문제제기	1
제 2절 연구의 과제,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과제와 범위	4
2) 연구방법	5
제 2장 이론적 논의	6
제 1절 관련이론 고찰	6
1) 권위주의 체제하의 언론의 성격	6
2) 시장경제하의 언론의 성격	8
3) 정치적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	16
4) 사회운동의 동원 화 과정	21
제 2절 연구의 분석 틀	33
1)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	34
2)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과정	38
3) 한겨레신문 정체성 확립과 창간운동의 결과	42
제 3장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	45
제 1절 권위주의 정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관계	45
1) 박정희 정권	46

2) 5공화국	50
3) 노태우 정권	59
제 2절 권위주의 정권하의 언론의 생존전략	62
1) 언론의 독과점적 특혜	63
2) 언론의 상업주의와 광고의 영향	68
3) 언론기업의 모순 심화와 민주화 운동.....	72
제 4장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과정	78
제 1절 창간과정에서의 집합행동의 기회	78
1) 억압/촉진	78
2) 권력	81
3) 기회/위협	85
제 2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언론 민주화 및 대안언론 운동.....	90
1) 언론민주화 및 대안언론 운동	90
2) 새 언론 창간 필요성제기.....	101
제 3절 한겨레신문 창간 운동의 전개	103
1)조직화	104
2)동원화	115
3)제도화	131

제5장 한겨레신문 창간 운동의 결과	135
제 1절 한겨레신문의 정체성	135
1) 창간사, 윤리강령 분석	135
2) 편집전략과 편집국, 신문체제 구성	140
제 2절 창간의 정치 사회적 영향	149
1)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149
2) 언론기업의 카르텔 파괴와 경쟁심화	155
3) 새 신문의 기존언론계 편입과정	157
제 3절 창간이 언론문화 등에 미친 영향	163
1) 한겨레신문 보도특성	163
2) 새 신문이 언론문화에 미친 영향	174
제 6장 결론	181
제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81
제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0
참고문헌	192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권위주의 정부체제 하에서 언론의 사회적 의미는 왜곡되고 언론조직은 정치 권력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 權言유착 또는 經言유착 관계가 형성, 강화된다. 그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억제되고 수용자의 정보 획득 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는 일방적이 되고, 언론조직은 영리를 보장받거나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독과점적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권력과 언론의 결합현상 속에서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주장하는 사회운동 또는 언론민주화 운동이 출현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는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언론자유통제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기능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경제적 이해 등을 둘러싼 상호갈등관계로 나타났다. 권력이 체제 순응적 언론에 제공한 반대급부 성격의 각종 법률, 행정적 특혜는 궁극적으로 언론의 상업주의를 심화시켰으며 기업적 언론의 상업주의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가로 보장받은 경제적 이윤추구는 언론사간 카르텔 형성과 그 유지, 주·월간지 발행을 통한 이윤창출 등의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정치적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동구권의 변화 등은 대안언론의 창간운동과 그 조직화, 그리고 동원화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새 신문 창간 당시의 시장은 전통적 언론매체에 광고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언론을 상업주의에 예속시켰고 언론사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광고주의 기업이익 증대에 봉사하는 상업주의 언론으로 전락했다.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 등을 추진했지만 권력에 예속된 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 보도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더 거세지고, 상업주의 언론에 반발한 언론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의 담론을 지원할 언론매체가 절실했으며 그것은 결국 정치적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언론민주화 운동 또는 대안언론 운동이 역동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과정은 창간운동의 조직화(organization), 집합행동을 위한 동원화(mobilization), 창간결과로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창간의 정치·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영향 등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창간운동의 출현과 그 조직화가 이뤄진 과정은 창간운동 주체세력의 창간운동 선언과 그 실천을 위한 단계적 조치, 그리고 새 신문 편집관련 조직체제 형성 등으로 구분된다. 자원동원과정은 창간기금 모금과 내부 노동력 충원을 위한 인력 동원 등이 포함되는데 창간기금 모금은 새 신문의 소식지나 발의자 또는 기존 일간지 등을 통한 선전, 홍보와 지역주주조직들의 모금운동, 기존일간지를 통한 모금광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간운동의 결과는 합법적 대중매체를 이행기 위한 제도화 추진으로 나타나고 이념, 편집, 인적 구성, 경영 등에서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창간의 파급효과를 보면, 당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와 언론계의 비민주적 성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위주의 정부는 새 신문 창간 등으로 대변된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제한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일환으로 언론사의 창간, 복간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기존 언론에 영향을 미쳤다.

한겨레신문 창간 운동은 5공화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

항 운동이 직선제를 관철하고, 그에 따른 민주화 공간의 확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겨레신문 창간은 1987년 6월 항쟁 후 시도되어 다음해인 1988년 5월 그 결실을 맺어 대안언론 또는 제도권 언론의 하나로 자리 매김 했으며, 그것은 전체 사회의 변동 속에서 많은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새 신문의 창간이 신문 창간직후 제한적인 민주화 공간의 확대, 언론사 창간과 복간러시라는 언론시장 변화와 함께 동구권 붕괴 등의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한겨레신문 창간 후 십여 년이 지난 뒤 그 창간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 신문의 탄생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회운동의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있다. 본 논문은 한겨레신문이 지닌 다음과 사회학적 의미를 규명코자 한다.

첫째, 이 신문의 창간은 정치적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또는 그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둘째, 이 신문 창간운동은 언론 자체의 민주화, 즉 언론민주화 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셋째, 상업주의적 언론과 구별되는 시민 또는 국민주주 신문으로서 창간되어야 했던 당위성, 즉 대안언론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다.

넷째, 새 신문 창간운동은 기존언론이 지닌 보수적 성향을 개혁·진보적 성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시민운동의 방향성이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했었다.

본 논문은 한겨레신문의 창간이 80년대 후반 우리 시민사회의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언론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라는 복합적인 역사성을 지니는 것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의 과제,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과제와 범위

이 논문의 연구 과제 및 범위는 한겨레신문 창간 배경과 창간과정, 그리고 창간 결과와 파급효과 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있다.

새 신문 창간배경은 권위주의 통치 속에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기존 언론에 의해 조성된 불평등한 정보 자원의 생성과 배분에 대한 갈등의 심화와 언론민주화 운동, 6월 항쟁으로 조성된 민주화 진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창간과정은 시민 사회와 한겨레신문 창간기금 모금이 집합행동으로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이어 창간 조직화 과정, 새 신문의 편집전략과 기자들의 지향성, 창간기금 모금 등 자원동원과정, 창간 이후 제도권 언론으로 진입해 정착하는 과정과 그 영향 등을 점검한다. 결국 이 논문은 1980년대 후반 창간된 한겨레신문이라는 대안언론운동에 대한 역사사례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연구기간은 이 신문의 창간운동의 배경이 된 5, 6 공화국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 및 언론운동 발생상황과 창간 작업이 완료되어 제도권 언론으로 정착하기까지로 국한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안언론 성격의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삼은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와 범위를 설정했다.

첫째, 한겨레신문이라는 독특한 신문의 창간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배경을 규명코자 한다.

둘째,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추진이 가능했던 정치과정, 특히 집합행동의 기회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하는 과정을 자원동원론 과정에서 고찰코자 한다. 그 같은 고찰을 통해 운동의 추진세력, 운동의

추진을 담당했던 조직, 이념, 물질적 자원의 동원, 인적 자원의 동원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겨레신문 창간 결과 및 그로 인한 제반 파급효과 등을 연구코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권 신문사 창간, 신문사의 조직과 이념 및 윤리강령의 성격과 함께 이 신문 창간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치적 및 언론 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코자 한다.

2) 연구방법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 신문의 창간이 사회운동, 언론민주화 운동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역사사례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창간 과정 등에 대한 본격적 연구사례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과정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사용코자 한다. 1차 자료는 창간 과정에서 나온 기금 모금을 위한 발의자 성명이나 소식지, 사회 유력 인사 지지선언 등의 자료를, 2차 자료는 관련 연구 논문, 신문, 잡지 등을 활용코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관련 이론 고찰

1) 권위주의 체제하의 언론의 성격

언론과 국가의 이상적인 관계는 언론이 기득권을 가진 지배집단과 변화를 추진하는 피지배집단 사이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¹⁾. 즉 지배집단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것을 피하고, 피지배집단에 경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의 창출과 전달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²⁾. 여기에서 국가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 결성된 존재로서, 언론의 사회적 위치를 올바르게 확보해 주기 위해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제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지향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지배세력이 언론의 자율성과 시민사회의 삶의 본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와 공식언론매체의 사회적 역할이 훼손되면서 대안언론이 등장하면서 저항세력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가져오는 사회적 생산성은 큰 차이가 있다(유일상, 1988, 24-25).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정부의 조정을 받거나 통제하에 있다는 징조만 있다해도 언론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³⁾. 이 같은 상황에서 대

1) 매스미디어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시도한 언론체제의 유형화는 F. Siebert와 T. Peterson 등이 시도한 언론의 4가지 이론이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역사적인 제도의 변동과정에 관련해 언론체제에 대한 모델을 권위주의적 이론, 자유주의적 이론, 사회적 책임론, 공산주의이론 등으로 나누었다.

2) 계도성을 목표로 하는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 특정의 신념 또는 계획이나 목표를 위해 보도와 선전행위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 특정 가치의 지향목표나 대상이 아니라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유일상, 1987, 86-88).

3) 오늘날 서구 등의 매스미디어 산업에서는 여러 매체를 한 자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소유집중이 일어남으로써 그 통제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을

안언론이 출현하고 저항적 언론문화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왜곡과 언론의 제도적 변형현상이 발생한다. 언론조직은 정치 권력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 거대한 수용자 집단을 정보전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킨다. 이 같은 언론과 권력 그리고 자본과의 결합은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권언유착 또는 경언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강화해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억제하고 수용자의 정보 획득권을 제한한다. 이 경우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는 일방적이 되고, 언론조직은 영리를 보장받거나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의 언론에 대한 물리적 제재에 대해 물러는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이강수, 1999, 96-105). 강제 - 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부가 매스 미디어와 교육제도에 공개적으로 개입해 언어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그것은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으로 일컬어진다. 억제적 커뮤니케이션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사적 집단이나 정부기관이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손을 대거나 제한을 가했을 때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정치권력은 그들 체제에의 동조 또는 체제유지를 위해 억제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데, 그같은 방법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합리화해 버린다. 제약적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 관계하는 능력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데, 이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표명할 능력이 없을 경우 나타나는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취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일 경우 언론은 권력에 종속된 상태가 되고 언론이 그 같은 상황에 안주하느냐, 저항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언론이 권언유착의 상태에서 안주할 경우 독과점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법률적으로 신규언론의 등장을 억제하는 방식, 언론사 경영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반대급부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언론기관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해서도 권력 쪽에서의 혜택이 주어져 언론인을 샐러리맨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로는 한국의 5 공화국이 대표적인 바 당시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제도언론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언론문화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의 언론이라 해도 부당한 권력의 간섭에 저항하는 미디어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언론과 권력 관계는 첨예한 갈등관계로 규정된다. 그 같은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는 해당 언론기관이 굴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가 문을 닫는 쪽으로 진전되기도 한다⁴⁾.

2) 시장경제 하의 언론의 성격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해진 매스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크고 복잡한 사회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신문, 시사잡지, 일반TV 등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언론을 환상과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문화적 생산의 도구로서, 또한 오락의 제공자로서 보는 것이다⁵⁾. 마르크스나 네오 마르크스 그리고 포스트모던주

4) 이강수는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논문들도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일방적인 것으로만 보고자 했고, 상호갈등의 복잡 다양한 측면을 경시했고, 권력 자체의 분석에 소홀했다고 지적한다.(김영선, 1995, 10-11).

5) Laswell은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 즉 감시(surveillance) 기능,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 안을 제시하는 합의성취(consensus) 기능, 그리고 사회적 유산을 한 세

의자들은 지배적인 문화는 사람들의 비판력을 마비시키고 기존의 사회 조직과 권력구조를 합리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데, 언론이 바로 지배적 문화를 창조하고 배포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의 하나라는 것이다.

학자들은 미디어가 문화와 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독점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언론은 기존의 권력, 계급구조를 강화 재생산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미디어를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대신 미디어를 세계의 대변자로 받아드린다는 점에 주목한다(John Gibbins & bo Reimer,1999, 24).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미디어가 어떻게 문화적 모순을 초래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문화적 모순이 미디어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편이다.

서구 사회의 신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언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부르주아 토론기구 또는 공론의 장(public sphere)으로 출발했다. 봉건지배세력과 신흥부르주아의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신문은 급진신문 단계를 거친 뒤 문화 산업 또는 이데올로기 기구로 변모한다(김해식, 1994, 36-42). 신문은 부르주아지가 봉건국가 및 후기 봉건국가의 지배체제에 대해 만든 정치적 투쟁 수단의 의미를 지닌다. 부르주아지가 봉건군주와 귀족의 통제 및 검열에 대해 투쟁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과정이 신문의 성립과정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봉건세력은 신문에 대해 특허제도와 검열제도로 통제했으며, 18세기 들어 인지세의 부과를 통한 경제적 통제를 실시했다. 부르주아지는 절대주의 국가권력의 언론통제에 대해 언론활동을 벌이면서 정치투쟁을 전개해 언론자유라고 하는 시민적 권리를

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시키는 전수(transmission) 기능, 또는 사회화(socialization)기능으로 나뉘었는데, C. Wright는 여기에 오락제공(entertainment)기능이라는 네 번째 기능을 추가했다(LittleJohn, S.W., 김홍규 역, 1996, 422).

확립했다. 19세기 초 최초의 대중신문의 형태인 급진신문이 출현해 구지배층을 공격하고 국가제도의 정당성에 도전했다. 급진신문은 노동계급의 운동을 급진화시키는 사회비판을 행하면서 갈등 또한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선동비방법의 발동과 인지세의 부과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 통제는 실패했다. 신문세의 종식 이후 언론시장의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후 언론에 대한 통제는 국가통제에서 시장통제로 바뀌었다. 즉 신문 영역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확립되고 신문은 그 이윤을 광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같은 과정에서 신문은 전반적으로 정론지에서 상업지로 변했다. 이는 부르주아지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문제를 언론이 취급할 필요성이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머독과 골딩은 매스 미디어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가능한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대규모 영리기업이라는 매스 미디어의 위치와 체계적으로 연관될 때, 그리고 이러한 연관이 역사적으로 검토될 때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olding, 강상호, 이원광 편, 1986, 72). 간헐도 매스 미디어가 상품 생산과 교환을 통한 잉여가치 창출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및 다른 상품 생산 부문에서 광고를 통해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적 실체라고 주장한다. 언론사 내부에서는 언론경영층의 상업주의 우선에 따른 이윤추구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데 따른 정상적인 보도 기능의 위축과 왜곡 등으로 인한 시민사회와의 갈등 현상이 발생한다.

오늘날 서구 등의 매스미디어 산업에서는 여러 매체를 한 자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소유집중이 일어남으로써 그 통제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⁶⁾.

6) 언론의 경영과 편집간의 갈등관계는 경영 쪽에서 편집 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매우 심각해지기도 한다. 김경근은 권력과 대자본의 언론기관 통제를 외적 언론자유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와 언론매체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다⁷⁾. 즉 광고 자체는 인간의 경제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고, 매스 미디어도 광고료에 의존치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⁸⁾. 광고주는 미디어를 사용해 광고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이 있고 독자와 시청자들은 광고가 지닌 뉴스 적이고 정보 적인 내용을 필요로 한다. 광고는 또한 소수집단의 태도, 의견, 불만 등을 전달하기 위한,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가 대중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중요한 통로, 전달수단이 된다(서정우 등, 1978, 192). 그러나 상업주의 언론제도하에서 언론자유 또는 편집권 침해는 권위주의 권력에 의한 것과 함께 언론매체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간주하는 데 자본에 의한 경우가 매우 심각하다. 매스 미디어가 전문인으로서의 편집인보다 기업인으로서의 경영진에 의해 통제를 더 받게 됨에 따라 언론매체와 시장의 관계는 광고주 또는 재계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이다. 언론매체들은 흔히 잠재적 또는 현재적 광고주들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반잡지가 젊고 수입이 많은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를 많이 내거나, 신문이 중산층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편집하는 것은 독자층 확보와 함께 광고주를 의식하는 대표적인 경

라 한다면 편집권과 매체 소유주 또는 경영진간의 갈등을 내적 언론자유 문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한다(김경근, 1986, 212)

- 7) 언론매체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과 최대한의 이윤 추구라는 상반된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사의 이윤추구는 순수한 사적 행위이며 객관적인 정보전달과 공정한 여론형성의 기능은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언론이 영리추구에 치중할 경우 정당한 언론매체의 기능이 약화되며 반대로 공적인 역할에 충실할 때 영리추구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진다(김경근, 1986, 210).
- 8) Jouet는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주장하면서 “매스미디어는 문화적 지배와 사회적 통제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의 거대 기업(business)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생산과 자본주의적 기업 사이의 공유영역(interface)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분석한다. 즉 매스미디어는 토대와 상부 구조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근거한 경제적 기업이면서 비물질 상품이라는 메시지를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Jouet, J., 1981, 86).

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디어들은 메시지 내용보다 독자와 광고주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편집내용의 조화가 상실된다. 이런 현상은 TV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중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점이 TV사업주의가 우선 시하는 대표적 판단요건의 하나이다.

언론매체 경영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 원가절감과 이윤극대화가 가능해지면 광고주에게 그 매체는 매우 매력적인 광고수단이 된다. 이 과정에서 광고 수입은 언론기관 경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또 다른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서 광고주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디어에 행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디어는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과 통제에 대해 광고를 거부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 같은 일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처럼 언론기관과 광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에 의한 언론의 통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서정우 외, 1978, 185-193). 첫째, 광고주는 광고 자체를 통해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는 바 신문지면의 약 60%, 방송시간의 10-20%를 광고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광고가 메시지를 통제하는 경우이다. 광고가 늘면 기사가 줄어들거나 광고와 관련된 기사가 분산되거나 광고가 나오지 않는 다른 면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수용자인 일반 대중은 매일 수백 개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광고의 내용은 현대 사회의 문화현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둘째, 광고주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PR기사가 신문기사로 나오거나 방송내용 가운데 교묘한 방식으로 선전하는 경우이다. 셋째,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광고주의 회사나 상품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식으로 신문 기사나 방송 내용을 꾸미는 일이 적지 않다. 넷째, 광고주가 스폰서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언론매체와 광고는 서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언론의 상업주의로 규정된 그 같은 측면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언론 내부의 각성과 함께 신문 윤리규정 등을 통해 언론의 공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부 대안언론의 경우에 국한하지만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신문 구독료에만 의존해 신문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있고, 신문 제작에서 기사와 광고란의 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론은 정치학에서 흔히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의견,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의견 그리고 사적인 소규모 집단보다는 오히려 집단으로서의 일반적인 공중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약된다. 여론이란 개인이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공공연히 표명해야 되는 태도 또는 행태이다. 즉 여론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입장에서 존중해야 하는 어떤 입장이나 가치가 내재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나 소외의 위협을 받는 상황하에서 최소한 자기의 분명한 행동을 타협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사회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분별력이다.(Littlejohn, S.W., 김홍규 역, 1996, 425-427). 여론은 개인적인 관찰과 미디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에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들은 매스 미디어의 효과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람들 사이의 토론들은 더욱 더 미디어로부터 얻어진 견해와 자신의 견해사이의 차이를 분간치 못하게 되어 미디어의 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고 또 변화된다는 개연성 때문에 여론의 조정 수단으로 선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차배근, 1976, 472-473). 여론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효과도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매스 미디어는 대중의 의견을 통합 조정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 부정적인 측면은 매스 미디어는 정치권력의 정권유지와 신장의 수단이 된다. 현실에 매스미디어는 여론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그 정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스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은 매스미디어의 영향, 즉 개인들 사이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사고를 구조화하는 능력이다 (.LittleJohn, S.W., 김홍규 역, 1996, 430-431). 의제설정은 공중의 마음에 중요한 쟁점이나 이미지를 형성해 준다. 의제설정은 매스미디어가 뉴스를 보도하는데에 선택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보의 gatekeeper로서 뉴스 보도국이나 편집국은 보도해야 할 내용과 그 보도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공중의 상황인식은 대체로 매스미디어 gatekeeper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⁹⁾. 의제설정 기능은 3개 부분으로 된 선형적 과정으로 나뉘는데, 첫째 매스미디어 또는 매체의의제(media agenda)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슈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매체의의제는 공중이 생각하는 것, 즉 공중의의제(public agenda)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작용하며 마지막으로 공중의의제는 정책입안자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작용한다. 이같은 의제설정이론은, 매체의의제는 공중의의제에 영향을 주며, 공중의의제는 다시 정책의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9) 정보와 지식생산을 담당하는 기자 전문직의 자율성이 노동과정의 효율화라는 조직의 목표에 의해 위축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특히 객관보도 또는 여론형성이라는 보도 양식은 경영진으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그리고 기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직 이데올로기로 성립된 측면이 있다(강명구, 1993, 164).

대중매체에서 제작되는 뉴스는 일정한 작업 공정을 거쳐 흘러가는데 그 공정의 과정에서 권력의 언론 검열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gate-keeper의 행동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밝혀졌다 : 언론사의 고용주의 권위와 그가 피고용인들에게 제기하는 금지사항, 대중매체 전문가들의 규범과 윤리, 개개 gate-keeper들의 개인적 가치와 그 사회적 배경, 대중매체 동료들의 비공식적 영향력, 대중매체 소비자들의 요구와 반응, 공동체와 사회적 구조로부터 오는 대중매체에 가해지는 압력, 뉴스원을 포함한 준거집단으로부터의 압력(고원, 2001, 134-135).

의제설정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매체가 공중의제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어떤 조사기간동안 공중에 똑같은 의제가 유지되는지 여부, 매체의제가 공중의제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는 설득(persuasion)효과의 정도에 대한 것이다.

언론 환경이 민주주의 정부일 경우 언론은 정치권력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정치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으로 부각되면서 그에 따른 언론문화가 출현한다. 언론이 무제한적인 보도의 자유를 주장할 경우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앞세워 보도행위를 할 경우로 대별된다. 무제한적인 보도자유를 주장할 때 그로 인한 명예훼손과 경제적 불이익 등이 발생해 그에 대한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에서 공인을 경우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느냐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자칫 특정 사항을 선별적으로 보도하는데 따른 사회적 마찰이 발생한다. 이때 언론은 언론 고유의 보도의 자유를 앞세우기도 한다. 한국처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제도언론으로 폄하되던 기존언론이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주어진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바로 위와 같은 언론 행태에 해당한다. 한편 언론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도행위에 임하는 경우 건전한 언론문화가 정착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현실 사회에서 구미의 언론을 제외하고 그리 흔치 않은 듯하다¹⁰⁾.

10) 언론인의 직업의식의 많은 요인들은 조직 내 통제를 받게 되어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언론문화에 기여하는 주요요소로 작용한다. 즉 대중매체 조직내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직업상 지위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언론인들은 자신이 속한 대중매체 생산품의 질이 낮다해도 자신들의 능력은 훨씬 뛰어나다는 신념을 지니는 자기 합리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대중매체의 창조적 작업자들은 자신을 더욱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지닌다. 넷째, 언론인의 전문화는 언론사 조직이 행하는 통제에 대한 강력한 대항무기로 작용한다. 언론인들은 저널리스트의 지위와 전문성을 보호하는 노조 등에 가입하기도 한다. 다섯째, 언론인의 직업의식은 때로는 자신의 창조성을 제약하기도 하다, 저널리즘은 이른바 뉴스 가치에 의존하는데, 이 같은 가치판단은 유사한 사건을 과거 경험에 기초한 지식으로 판단함으로써 때로는 큰 실수를 저지

3) 정치적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

언론의 책임은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 조직의 지향하는 목표와 언론인의 가치관 등에 의해 그 내포하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지향목표가 중립성이나, 다원성이나, 계도성이나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차이를 나타낸다. 즉 중립성을 강조하는 언론은 현실 반영체로서의 성향이 강화되지만 획일화와 규격화의 위험성이 있고, 다원성을 지향할 경우 가치지향이 모호해지고 언론 조직 자체의 능동적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도성을 목표로 하는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 특정의 신념 또는 계획이나 목표를 위해 보도와 선전행위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 특정 가치의 지향목표나 대상이 아니라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유일상, 1987, 86-88). 공익은 그 의미가 다양하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이 유린되거나 공동선이 전체주의적 이익에 의해 굴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상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첫째, 언론조직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 개인을 위해 권력의 위협이나 회유에 맞서 개인의 알 권리를 대행할 의무가 있으며 둘째, 언론조직은 그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구조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사회적 규범과 현실적 상황 등에 따라 그 역할 범위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그 역할은 더욱 비대해 지고 있다. 즉 언론시장에 진입해 지배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고

르게 된다. 여섯째, 언론사 내의 통제에 대한 언론인들의 반응은 다른 매체의 언론인들과 은밀한 거래를 주고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조직 내에서 가해지는 낙중이나 오보 등에 대한 질책과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일곱째, 언론인은 창의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하는 방식 등을 택한다. 이는 상업방송이 도입된 후 방송사에서 중대되는 고용의 형태이다(고원, 2001, 139-146).

도의 자본력과 know-how를 갖춘 조직체들의 시장 과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언론시장을 장악한 조직은 시장진입장벽을 높이 쌓는데,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협조하는 반대급부의 형식으로 신규 자본이나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같은 권력과 언론의 결탁현상 속에서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주장하는 사회운동 또는 언론민주화 운동이 출현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제한적인 정보배분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사회변동을 추구하는 세력 간에 갈등과 경쟁, 타협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나타난다. Althusser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언론조직에 대한 해계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언론은 교회나 학교처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것이다(오갑환, 1974, 20-22)¹¹⁾.

서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분화 과정은 도시화 → 과학화 →공업화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¹²⁾.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서구와 달리 공업화 →도시화 → 과학화의 추세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역사적 변화양식과 통합 정도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사회 위에 군림해 강제적 기계적 통합이 이뤄

11) Graham은 Althusser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 매스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에 대해 “ 연구의 시각을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서의 매스미디어 개념으로부터 관심을 옮겨서 매스미디어를 상품 생산과 교환을 통해 잉여가치 창출자로서의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및 다른 상품생산 부문에서 광고를 통한 간접적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제적 실체로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rnham, N., 1983, 이상희 편, 100)

12) 시민사회 개념은 서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다. 그것은 사적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들 스스로 다양한 조직을 창출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생활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에 일종의 상호의존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국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집단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게 되거나 정당과 같은 결사체를 만들어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한배호, 1992, 65-67) .

지는 폭력국가, 폭력국가가 민주적 지배정당성을 획득한 권력국가로 대체 되는 단계, 권력국가가 보다 성숙된 합리화 단계로 진입해 국가가 사회의 법적 구성체로 인식되는 상황 등이다(배동인, 1992, 37-60). 최장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및 정치대립의 구조를 시민사회 - 정치사회 - 국가의 3층 모델로 파악하고 정치사회라는 중간층위에 대해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 또는 독자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정치사회를 다시 제도적 수준에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제도권과 그에서 배제된 비제도권으로 나눴다(최장집, , 1991, 333).

1970년대 후반 전지구적인 새로운 추세로 나타난 민주화 운동은 곧 시민사회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군사독재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권에서 자율적 시민사회공간이 부재했거나 아주 허약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라는 역사적 현실은 서구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베버는 시민사회 형성의 모체가 된 시민계층의 발생은 도시와 관료제적 행정, 자본주의적 이해집단들과의 결합, 권력을 둘러싼 경쟁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한다. 서양사회와는 대조적으로 동양사회에는 시민계층 개념 또는 도시 공동체 개념이 존재치 않았다. 헤겔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대립적 관계로 보았고, 맑스는 시민사회를 과거의 신분제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역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람시는 국가란 강제력에 의해서만 지탱되고 재생산되는 정치영역이 아니며 시민사회를 국가의 윤리적 기반으로 보았다.

시민사회와 언론매체의 관계를 문화 비판론적 입장에서 고찰키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시민사회, 대중사회와 언론매체의 관계는 매스컴의 역기능 심화, 그에 대한 사회적 시정 요구 비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중 사회를 시민사회의 전 단계로 파악할 경우 그 사회에서의 매스컴의 대표적인 역기

능으로 사회조직의 파괴, 사회적 마취 등을 손꼽는다(김경근, 1986, 91-94). 즉 매스컴은 획일적인 정보로 사회를 하나의 전체주의 형태로 만들고 언론은 그 도구로 전락하며, 일정한 방향감각이 잡혀있지 않은 정보홍수는 정보수용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줘 적극적 행동 대신 정신과 행동을 마비상태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매스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직·간접적인 저항적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 간접적인 저항방식은 미디어 비평의 강화와 구독 또는 시청거부 운동으로 나타나며 직접적인 대응방식은 미디어감시를 목적으로 한 각종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 반론권 청구 등 미디어 접근권 적극 행사나 광고 지면을 활용한 의사표시 등의 형식을 취한다(서정우 외, 1978, 195-246).

(1) 매스컴과 대중사회

문화비판론적 관점에서의 매스컴의 특성은 정신적 산물인 전달내용을 기술적 전달수단을 통해 분산적 대중에게 공개적, 간접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김경근, 1986, 80-94). 매스컴은 세분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을 보다 빠른 속도로 세분하고 분산하며 전체 사회구조로부터 수시로 분리시켜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매스컴은 인간대 인간의 직접적인 대화형식이 아닌 신호, 언어, 행위, 문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서 개개인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며, 타산적으로 되어버리고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매스컴의 일방적 전달은 인간을 독단적이고 차가우면서 이기적인 성향을 갖게 한다. 이같은 대중사회의 특성은 사회분위기를 획일화하고, 생산과 소비의 대량화와 표준화를 초래하며 외부자극에 지배당하고 조작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2) 시민사회의 매스컴에 대한 저항적 대응

시민사회의 대중매체에 대한 저항적 대응은 미디어의 주인은 그 소유주가

아니라 수용자인 대중 자신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것은 대중매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미디어 수용자는 미디어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편집인·신문사·방송국 등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경제적이고 분별력 있는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한다(William L. Rivers & Wilber Schramm, 1969, 249-252). 수용자의 간접적인 저항방식은 수용자의 집단적인 매스컴에 대한 시청거부와 구독거부, 상담 또는 대중적 압력의 행사, 비평, 좋은 프로 등에 대한 시상으로 매스컴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적극적인 저항 방식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독자 투고 등을 통한 신문 제작 비판이나 TV좌담 프로 참석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표시, 의견광고 등이 있다.

(3) 대안언론운동

대안언론 운동은 미디어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하나로 그것은 수용자 자신이 송신자가 되는 것이다(서정우 외, 1978, 241-245). 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사나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확보, 언론사 법적 등록 등이 선결과제가 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서구 사회의 경우 대안언론은 특정 정파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의 창간운동이 일반적 형식이며, 권위주의 정권아래서는 사회민주화 운동의 한 형식으로 언론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대안언론 창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기관의 설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달키 위한 방식으로 서구의 경우 소비자 단체의 기금이나 소비자의 주식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있다. 매체의 성격으로 보아 잡지나 출판사가 좀 더 쉽게 대안매체를 창간할 수 있다. 대안언론의 대표적인 경우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스페인의 엘 파이스와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등인데 이들은 주식 공모를 통해 설립자본금을 마련하고, 사원지주제 등을 통한 외부의 압력으

로부터 안정적인 언론사 경영권의 확보했으며 창간이후 정체성 문제에 봉착한 것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4) 사회운동의 동원화 과정

사회운동의 개념은, 공유된 집합적 정체성에 기초해 정치적, 문화적 갈등에 참여하는 개인, 집단, 조직들간에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고 정의된다. 또한 사회운동조직은 사회운동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개별조직을 의미한다(조대엽, 1999, 50-53). 푸랜스는 주체성(identity), 적대성(opposition), 전체성(totality)의 3개 기본요소를 사회운동의 분석 틀로 사용했다(이시재, 90년대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의 방향,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1992, 한울, 451-458). 즉 행위 당사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며, 적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성, 적대성, 전체성을 규정한다. 사회적 갈등은 객관적인 존재조건, 혹은 사회적 속성에 의해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스스로를, 적대자를, 해결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사람들의 생산관계, 계급관계 등의 객관적인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자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계급적 지위,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위치 등의 객관적 속성은 사회운동 분석에 있어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사회운동 분석은 이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 함께 투쟁의 장, 구조 수준, 상호 매개성 등 3개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투쟁의 장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종래의 노동운동, 계급운동과는 투쟁의 장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노동과 계급운동은 기존의 경제구조라는 '시장'내에서 발생하며 사회학도 경제학적인 주요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한다. 욕구충족, 역할과 지위, 집단과 조직 등 시장

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는 시장 내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나타낸다. 시장 밖의 영역에 위치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과 같이 시장매커니즘에 대항하는 운동이며 도시주민운동, 반핵운동 등은 정부에 대항하고, 여성운동, 교육운동은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에 대항한다¹³⁾. 다음으로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의 어떤 부분을 변경시켜 기존의 사회를 변동시키려 하는 가를 고찰하는 구조수준의 문제다. 뚜렌느는 사회운동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경을 시도하는 세가지 구조수준으로 조직, 제도, 역사성을 든다.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사회구조의 수준은 운동의 성격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평화운동, 반핵운동은 조직수준, 제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와 가치와 관련된 운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역생활운동은 체제 변혁을 표방하는 수준의 운동은 아니다. 끝으로 상호 매개성은, 사회운동 과정에서 대두되는 시장, 생활, 환경 등의 각 영역은 상호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밀접히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대량 생산 소비 시스템 속에서는 생활의 교란, 환경 파괴가 극심해 시장은 물론, 생활과 환경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과 같은 경우이다.

13) 하버마스는 신사회운동과 관련,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복지국가형의 제도화된 갈등과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갈등이 서구사회에 출현했다고 강조했다. 신사회운동은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경향성에대한 저항이라는 것으로 그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새로운 갈등은 더 이상 물질적 재생산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정당이나 자원단체를 통해 혹은 물질적 보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갈등유형은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사회화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둘째, 행복복합체의 성장이 생활세계의 침해를 야기한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성장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는 중심부 계층과 그 외의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주변부 계층 사이의 전선이 형성된다. 셋째, 군사적 파괴의 잠재력, 핵발전소, 핵폐기물, 유전공학,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주의 위기들은 생활세계에 침투해 생활세계의 여러 차원들을 파괴시킨다. 저항운동은 일상생활에 강요되는 이런 추상체를 향해 발생한다(Habermas J, 1981, Telos 49, 정수복 번역, 1993, 68-77).

(1) 사회운동의 집합행동의 기회

사회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행동의 단계는 집합행동의 기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집합행동의 기회는 C. Tilly의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approach)에서 제시된다. 정치과정론은 운동조직 뿐 아니라 통제기관도 포함하는 정치과정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illy는 정치과정을 연구주제로 삼아 조직/기업가론을 주장한 McCarthy와 M. Zald 등과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좀더 진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과정론은 조직/기업가론이 비판받는 거시적 분석 시각 미비 등의 결점을 보완해 일상생활 사이의 유사성과 함께 그 미묘한 차이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를 재 도입하고 운동의 성과를 주목하는 등 조직/기업가론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을 도입했으며 권력이나 행정기회(정치기회) 등의 정치과정의 중심적 요인도 포함시켰다(서수원, 1978).

Tilly는 폭동이나 군중의 소요를 그저 사회적 일탈행위의 범주에서 설명하는 뒤르케임주의를 비판하고 사회변혁을 사회계급간의 갈등으로만 논의하려는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의 가능성과 베버 주의자들의 행위자 중심논의를 함께 수용하면서 정체 모델과 동원 모델을 기본모델로서 설정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정체 모델에서는 일정한 영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정부, 다수의 권력경쟁자 그리고 연합세력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권력과 이익 점유를 위한 상호 행위관계가 분석이 되고 있다. 정체 모델(polity model)의 구성요소로 주민(population), 정부(government), 다수의 권력 경쟁자(contender), 정체(polity), 연합세력(coalition)을 상정한다. 정부는 주민들 내부에서 주요한 강제수단을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체를, 권력경쟁자는 일정기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축적된 자원을 이용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권력 경쟁자는 도전자와 정체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정부가 통제하는 자원에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닌 권

력경쟁자를 말하며 도전자는 구성원이 아닌 그 밖의 다른 권력경쟁자를 뜻한다. 또한 정체는 일정한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집합행위로 구성되며 연합세력은 권력경쟁자들이나 정부가 서로 집합행위를 전개하기 위해 조정하려는 경향(tendency)을 의미한다. 동원모델은 권력경쟁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동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여 혁명으로 전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한 집단의 동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집단의 조직. 다른 집단의 경쟁자와의 연관 관계에서의 이해, 일정 시점에서의 집합행위의 기회/ 위협 그리고 해당 집단이 받게 되는 억압/촉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Daniel A. Foss & Ralph Larkin, 1986, 임현진 역, 1991). 동원모델은 신념이나 습관, 세계관, 권리, 의무들이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는 대신 그것들은 이해, 조직, 동원, 억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합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 동원모델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성격을 갖는다. 동원모델은 집합행위를 양적으로 설정하며 조직화도 일정한 양적 규모로 구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톨리의 사회운동 동원모델은 집합행동의 핵심부분인 동원은 이해와 조직, 그리고 억압/촉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집합행동은 동원과 권력, 그리고 기회/위협에 의해 결정된다(임희섭, 1999, 88-89).

권력 경쟁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집합행동의 요인들 가운데 이해(Interests)는 다른 주민들과의 다양한 상호행위로 인해 집단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하고, 조직(organization)은 주민들로서의 개인들 사이의 공통된 일체성이나 통일된 구조화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과정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일체성이나 통합구조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동원(Mobilization)은 권력경쟁자들의 집합적 통제하에 놓여 있는 자원의 크기를 의미한다. 과정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자원의 증대나 집합적 통제 수

준의 증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원의 감소나 집합적 통제 수준의 감소는 동원 해제라고 할 수 있다. 억압/촉진(repression/facilitation)은 다른 집단과의 상호행위의 결과로 권력경쟁자가 집합행위에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억압은 다른 집단이 권력경쟁자의 집합행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집단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행위는 촉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다른 한편의 당사자가 정부라면 이를 정치적 억압 또는 정치적 촉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억압성은 항상 선택적이면서도 억압과 관용과 촉진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행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정부가 부가하는 억압의 정도도 커지게 된다. 이 경우 규모라는 것은 집합행위에의 참가자 수, 지속기간, 지리적인 범위, 조직력, 동원력 또는 이들 요인의 가중적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억압의 수단은 통신차단, 시위진압, 지도자 체포, 중벌부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억제 등이 포함된다. 촉진은 합법화, 벌과금 경감조치, 정보나 전문가의 협조 제공, 반대세력으로 부터의 보호 등이 있다(Tilly, 1978, 100 - 106). 권력(power)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 결과가 다른 집단의 결과보다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권력의 획득은 그 같은 결과의 긍정적 성격을 증대시키는 반면 그 감소는 긍정적 성격의 감소를 의미한다. 권력은 집합행동의 규모와 집합행동 그룹의 힘이 억압/촉진을 초래하는 바, 집합행동의 규모가 크면 억압이 강해지고, 그 그룹의 힘이 강하면 억압이 약해진다. 특정 그룹의 power는 상대그룹의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해관계와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은 정부에 의해 전개되는 상호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회/위협(Opportunity/threat)은 집합행동 과정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한 그룹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쪽이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다른 쪽의 실현 가능성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회

/위협은 주민들의 이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상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즉 집합행동이 성공하게 되면 권력경쟁자의 이해 실현을 촉발시키게 되는 새 요구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집단이 약하게 반응하는 정도, 또는 정부와 다른 집단이 권력경쟁자의 이해 실현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요구를 강요하면서 권력경쟁자에게 위협을 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집합행동의 출발점은 집단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이해관계이고 다음으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갖추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되면 집합행동에 나서게 된다. 경쟁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행동(joint action)을 취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는 집합행동의 기회는 억압/촉진, 권력, 기회/위협에 의해 결정된다(임희섭, 1999, 89).

(2) 사회운동의 동원

사회운동에 대해 고전모델은 구조적 긴장에 의해 발생된 단기간의 불만이 증대하는 현상을 강조한데 반해, 자원동원모델은 불만은 이차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킬리, 젠킨스, 페로, 오버샬 등은 불만이라는 것은 사회적 제도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인 이익갈등으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요소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은 집단의 자원, 조직, 집합행위의 기회 등의 장기적인 변화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불만은 운동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권력관계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거나 아니면 구조적 이익갈등의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카시와 잘드는 사회운동의 기업가론적 관점에서 그 형성을 설명했다(Mcarthy & Zald, 1973, 13). 즉 사회운동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원의 이용가능성, 조직간부와 조직설비의 측면이다. 이런 점에서 불만은 구조적으로 주어진 것이거나 운동기업가들의 자원동원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동시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된다. 많은 연구가들은 사회운동의 출현이 불만보다 조직, 자원, 기회구조의 장기적인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자원동원모델은 동원화(mobilization)를 특정집단이 집합적 행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 집합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집단에 의해 통제 가능한 자원이며 이 자원은 동원화의 시도에 우선하고 나아가 추구하는 사회변동을 위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일부 학자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를 통제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원들이 가진 용도에 기초한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로저스(Rogers, M. 1974, 79)는 실제적인 운동을 시도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인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과 이런 도구적 자원을 조건짓는 기반자원(infra-resource)으로 구분했다. 쟈킨스(Jenkins, J.C. 1982)는 집합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권력자원(power resource)과 이러한 권력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갖추어진 설비요소를 가리키는 동원자원(mobilizing resource)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용도에 기초한 분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자원이 다차원적인 용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운동에서 높은 빈도로 동원되는 자원의 목록들을 단순히 열거했다. 즉 매카시와 잘드는 돈, 시설, 노동, 정당성을 주장했다(McCarthy & Zald, 1977, 82). 그리고 톨리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적 전문지식을 강조했다(Tilly, C., 1978, 69). 한편 프리만은 돈, 시설,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을 유형자원(tangible assets)으로 규정한 뒤 이를 사회운동에 더욱 핵심적인 기반을 이루는 무형자원(intangible assets), 혹은 인간자원(human assets)과 구별했다. 무형자원은 조직적, 법률적 수단과 같은 특수 자원과 지지자들의 일반적인 노동을 포함한다. 매카시와 잘드는 1960년대

와 1970년대의 사회운동이 대학생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풍요로운 중간계급의 양심적 구성원(conscience constituency)을 동원했고, 사립재단이나 사회복지제도, 매스 미디어, 대학, 정부의 담당자, 기업체로부터 제도화된 자원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성공적인 사회운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Wilson, W.J., 1979). 첫째, 집단의 연대와 도덕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적 유인(collective incentives)을 제공해야 한다. 즉 집합적 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운동 지지자들은 자기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 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나 감정의 맥락에 따라 행동한다. 즉 동원화의 주된 과제는 집합체와의 연대성을 확보하고 도덕적 실천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셋째, 집단의 동원 능력은 기존의 조직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집단 성원에게 배타적인 그리고 강력하고 특징적인 동질성과 긴밀한 개인간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집단은 높은 수준으로 조직화되고 쉽게 동원된다(Tilly, C. 1978, 62-63). 이같은 동질성과 네트워크는 더욱 강한 연대성과 도덕적 실천력을 수반해 집단적 유인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넷째, 각각의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충원은 개인간의 네트워크에 더욱 깊숙이 연관되어있는 개인들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Pinard, M. 1971). 다섯째, 사회변동을 지지하는 정치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변동에 관여된, 나아가 구조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선별된다¹⁴).

14) 신사회운동의 행위양식은 협상과 타협, 개량과 개선, 조직적인 전술이나 압력을 통해 점진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 그들과 우리들, 바람직한 것과 참을 수 없는 것, 승리와 패배,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등과 같은 극단적 대립의 관점에서 다른 정치행위자나 정치적 적대자에게 접근한다. 신사회운동은 두 가지 측면, 즉 집합체의 구성을 위해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내적 행위양식(internal mode of action)과 외부세계 및 정치적인 적대와 대항하는 외적 행위양식(external mode of action)으로 구분된다(Offe, 1985).

(3) 사회운동의 조직화

사회운동조직에 대한 논의는 집중화된 관료적 조직모델(*centralized bureaucratic model*)을 중요시하는 학자들과 탈집중화된 비공식 조직모델(*decentralized informal mode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뤄졌다. 전자는 분업화된 공식적 구조가 규정된 역할을 통해 업무수행을 확대 가능케 함으로써 동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집중화된 의사결정구조가 내부갈등을 경감시킴으로써 외부와의 투쟁을 위한 예비태세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Gamson, 1975, 89-109). 후자는 최소한의 분업구조를 갖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통합되며 더욱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탈집중화된 운동조직으로 연대성을 만들어내고 이데올로기적 참여를 강화하는 광범위한 개인간 유대를 제공함으로써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대엽은 이상과 같은 논의는 몇 가지 오해에 의해 지나치게 진행되어 왔다면서 사회운동 조직은 전형적으로 복합적인 사회운동조직의 특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즉 다양한 조직형태의 공존을 인정하는 복합조직모델(*multi-organizational model*)이 특정의 단일한 사회운동에 관련된 조직을 파악하는데 훨씬 유용하다면서 틸리와 그 동료들에 의해 시도된 집합적 행위의 근대화(*the modernization of collective action*)에 관한 분석을 제시한다(조대엽, 1999, 87).

틸리 등은 공동체 조직과 결사체 조직간의 고전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소규모 비공식적 연대집단(혹은 공동체)의 단기간에 걸친 반동적 행위에서부터 대규모의 전문화된 목적을 가진 결사체 집단에 의해 추구되는 장기간의 전향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지난 4세기간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Tilly, 1978). 첫째, 그 기간 동안 탈집중적이고 비공식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운동에서 집중화되고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운동조직으로 변화했다. 그 변화는 광범위한 사회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자본주의 발전과

현대국가의 형성은 소규모로 연대된 집단들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더욱 확대된 전국적 수준의 정치영역에서 집단들이 경쟁토록 만들었다. 그 같은 수준에서는 다수의 인원과 조직의 관료적 구조가 운동의 성공에 핵심적 조건이 되었다. 셋째, 도시화와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대규모 동원화의 비용을 경감시켜 관료제적 결사체가 더욱 유용한 위치를 점하게 만들었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특히 대중적인 선거참여는 많은 수의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운동조직에 걸맞는 환경을 제공했다. 다섯째, 전통적인 공동체집단이 근대적인 관료제적 결사체로 대체되면서 행위의 목표 및 형태가 변화했다. 즉 공동체 행위자(communal actors)는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도 불사하는 타고난 급진주의자(instinctive radicals)들이고 반면 결사체 조직은 더욱 완결적이며 주어진 정치 환경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전자는 현존하는 권위체계로부터 비교적 틀에 박힌 행위유형들을 만들어내지만 후자의 경우 서로 다른 행위들을 시도할 수 있어 유리하다. 여섯째, 전문적 참모진, 외부의 자원, 목적달성을 위한 유연한 작업조직 등을 갖춘 전문사회운동조직(profess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은 일반적인 사회변천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다. 일곱째, 실제적인 사회운동조직들은 관료제적 조직모델과 탈집중화된 조직모델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다. 한편 시민운동을 통해 볼 때 공유된 이데올로기와 목표에 기초한 서로 다른 사회운동조직들간의 비공식적 공조체제는 탈집중화의 이점을 얻음과 동시에 관료제화의 이점 또한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집중화된 연합을 허용한다¹⁵⁾.

15) 자원동원론과 달리 신사회운동의 기본적 단위는 독립적으로 조직된 자원적 집단으로, 집단의 연결은 구성원의 중복이나 조직이념에 의해 때에 따라 형성될 수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신사회운동 조직은 정당 및 여타 공식적 사회운동조직과 비교할 때 그 이데올로기 및 가치에 있어서 서열적 관계가 아닌 참여민주주의적 이다. 통제와 조작의 가능성은 가능한 한 배제하여 의사결정은 집단토론에 기초하고 전통적 의미의 지도자는 없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신사회운동의 조직은 반엘리트주의적 민주적 관계를 조직에서 실천하려한다(양현아, 1992). 결국 신사회운동 조직은 조직이기 보다 하나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쪽에 더 가깝다(Nedelmann, 1984).

(4) 사회운동의 결과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언론운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이론은 사회운동의 결과에 대한 풍부한 연구결과를 응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여러 행동들과 그 행동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결과들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경우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정한 사회운동이 목표로 삼았던 특정한 사회변동(예컨대 가치, 규범, 정책, 제도, 혹은 권력관계에서의 크고 작은 변동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반드시 사회운동의 행동만에 의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변동은 사회운동의 활동 이외에도 수많은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임희섭, 1999, 182-183).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겨레신문 창간이라는 사회운동의 결과는 자원동원론의 관련부분과 함께 신문사 조직원의 정체감과 조직의 상징성 또는 대표적 표상의 보전전략과의 관계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고전 모델에서는 사회운동의 결과에 대해 폐쇄체계적 발전모델(closed system model of development)을 적용했다. 즉 사회운동은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사회운동의 소멸에 이르든지 아니면 관료제도화되어 제도적 적응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동원모델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방체계적 접근을 시도한다. 즉 사회운동 결과들은 더욱 확대된 정치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입장이다.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의 결과는 전략적 선택의 측면 뿐 아니라 정치엘리트의 입장, 기존 이익 조직 및 다른 사회운동들의 지지 및 반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와 사회적 통제의 균형은 지배연합의 변화, 체제구조의 변화, 체제위기를 발생시키는 전체사회적 변화 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¹⁶⁾.

갬슨은 1800 - 1945년 사이의 미국의 사회운동 조직 가운데 무작위로 선 발된 53개 운동조직을 상대로 그 성공과 실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류했 다(Gamson, 1975). ①완전 성공(full success) : 관료적이고 한정된 목표를 추구했고 선택적 유인을 이용했다. 또한 후원의 혜택을 받고 폭력을 포함 한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다. 정치사회적 위기기간 동안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 ②흡수(cooptation) : 사회운동 조직이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기존 조직에 의해 수용되지만 어떤 이익도 없는 경우다. 이렇게 흡수된 조직은 더욱 확대된 멤버십과 공식적 구조를 갖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조직은 전 쟁기간 동안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도 했다. ③우선 매수된 조직 (preempted organization) :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이익은 확보되지만 공식 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다. 이런 조직은 전형적으로 소규모이고 중앙집 중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위기기간에 덜 활동적이었다. ④실패 : 사회운동조 직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다.

한편 피븐과 클로워드는 빈민연구를 통해 갬슨의 이론에 대해 반박했다 (Piven & Cloward, 1977). 이들은 빈민운동이 오직 대중저항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지속적인 멤버십을 가진 조직의 구축은 그 반대의 결 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들었다. ①빈민운동은 더욱 부유한 계층의 운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조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조직 건설이 오히려 탈동원화를 초래할 수 있 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식적 조직은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 전략적 유연성 을 극대화하는 효과 보다 대중적 저항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정치엘리트 들에게 대화의 창구를 제시해줘 상징적 위안을 제공하게 되어 탈동원된 대

16) 일반적인 조직의 조직원이 지닌 정체성(identity)과 조직의 대표적 표상의 유지, 확산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체성이 확고한 집단의 성취목표는 그 달성도가 높은 것이고 정체성이 약하거나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겪는 조직의 목표달성은 목표달성 전 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내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식이며 그것은 자기가 소속한 내집단(we-group)을 외집단(out-group)과 구별하는 사회 심리적인 기준이다(김경동, 현대의 사회심리학, 박영사, 1980, 298).

중 저항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대엽은 공식적 조직과 대중저항이 양립할 수 없다는 피브과 클로워드의 주장은 오류로 규정하면서 공식적 조직과 과격한 대중저항은 양립할 수 있고 대부분의 운동의 성공은 이 양자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원동원모델에서 사회운동의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사회운동집단으로 하여금 정치적 접근을 가능케하는 조건에 관한 것이다. 릴리는 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Tilly, 1978, 213-214). 이는 정치적 접근의 기회를 가능케하는 정치권력의 일상적 변화를 개혁적 운동과 연관시키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정치적 접근은 광범위한 여론의 변화, 지배결합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권자연합의 동원화 등에 의해 조정된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기회를 구성하며 정치적 기회는 사회운동영역의 확산과 축소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분석 틀

이 논문의 연구의 분석 틀은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과 한겨레신문 창간운동 전개 과정, 창간결과로 3원화 시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듯 하다. 구조적 배경은 한겨레신문 창간의 필요조건을 제공한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설명키 위한 것이고 새 신문 창간운동 전개과정은 대안매체 성격의 신생매체 결성이라는 단일 사안의 설명으로 그 분석 차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간운동의 과정과 창간 결과를 분리시킨 것은 창간이전은 사회운동의 단계인 반면 그 이후는 사회운동의 단계를 벗어나 제도권 편입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배경에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당시 기존언론의 성격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히고, 기존 언론의 생존전략이 상업주의에 경도 됨으로써 언론과 그 환경간에 구조적 모순이 발생, 결국 정치적 민주화 및 언

론민주화 운동의 발생을 촉발한 과정을 설명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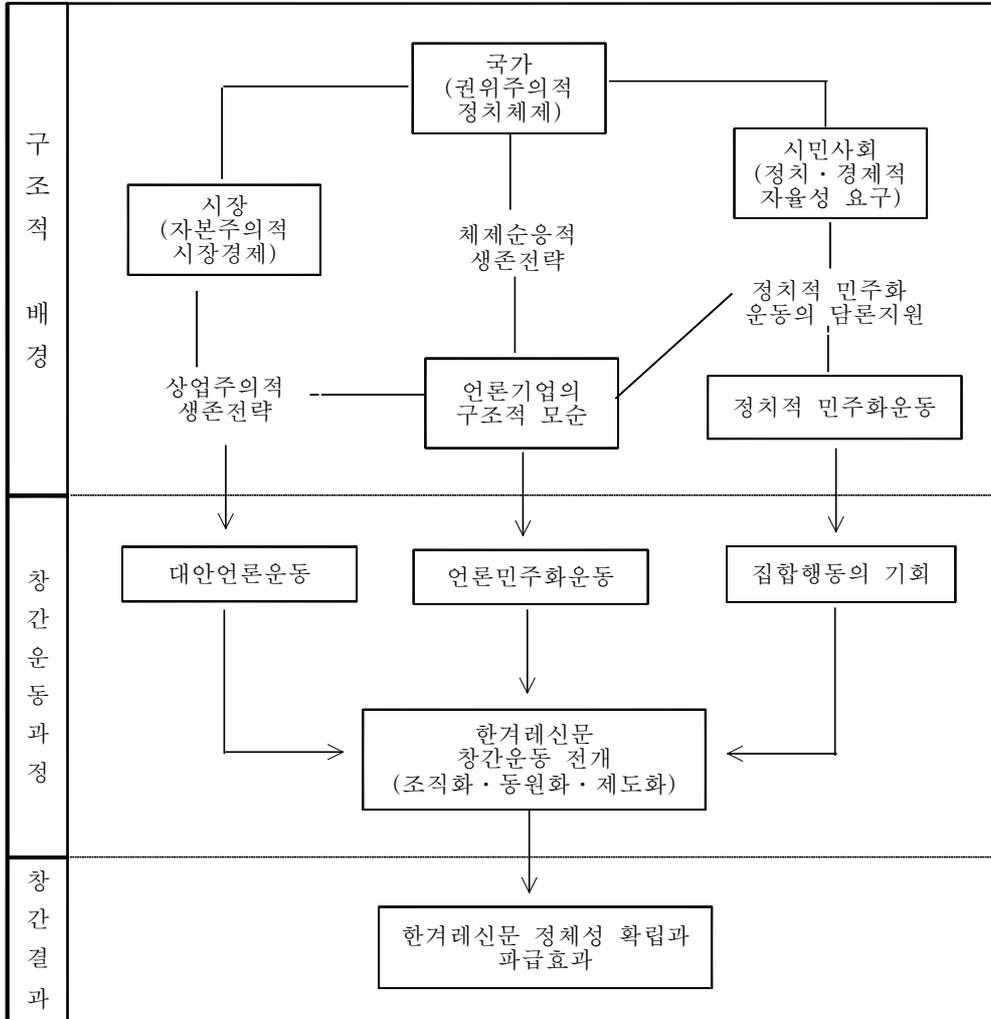
창간운동의 전개과정은 언론기업의 구조적 모순이 언론민주화 운동의 필요조건이 되고, 언론의 상업주의적 생존전략이 대안언론운동을 어떻게 추동 했는지를 규명키로 한다. 이어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을 가능케 한 집합행동의 기회를 설명하고, 창간 운동의 구체적 전개과정으로 조직화, 동원화, 제도화과정을 분석한다.

창간운동의 결과 부분에서는 새 신문의 정체성 확립과 창간이후 제도권에 진입한 한겨레신문이 미친 정치·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한다. 이상에서 약술한 분석 틀을 도식화 하면 <표2-1>과 같다.

1)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시 기존 언론을 둘러싼 환경 요인이 어떻게 언론기업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민주화 운동의 담론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전통적 언론매체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상업주의가 심화되고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외면하면서, 결국 대안언론운동과, 언론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같은 사회운동을 가능케 한 집합행동의 기회가 발생할 여건을 성숙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언론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 정치체제였던 국가에 대해서는 체제순응적 전략으로 대응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상대로 이윤을 극대화할 상업주의적 전략을 채택하면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지향하던 시민사회와는 갈등관계에 빠진다. 기존 언론의 환경대응 전략은 결국 공식 언론매체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하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어 언론 분야의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국가는 시장에 대해 경제개발의 특혜를 주는 대신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 일부를 배분하

<표 2-1> 한겨레신문 창간과정 분석 틀



면서 그 자율성을 억압했다¹⁷⁾. 또한 국가는 전통적 언론매체에 대해 그 자

17)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근대시민사회가 성립하기 전에 일제 식민지 지배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억압기구와 이데올로기 기구에 의한 제약으로 그 활동영역이 크게 제한 받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국가 권력과 그 자율성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즉 50년대의 국가는 원조와 재정정책을 통해 자본가 계급을 육성해 시민사회의 하부구조를 다지는데 기여했고 60년대는 경제성장정책으로 산업노동자를, 70년대 이후에는 산업노동자와 함께 중간계층, 특히 신중간계층도 크게 성장했다. 국가는 이들 여러 계층을 성장이데올로기로 포섭, 통합하려 하고, 성장의 잉여가치 일부를 시민사회의 상층부에 분

유를 제한 통제하면서 언론카르텔 형성의 이익을 보장해주었다. 기존언론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광고수입의 대가로 상업주의 언론의 부정적 특성이 비대해지고,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료라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다. 이상과 같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통적 언론매체의 관계는 대안언론운동과 언론민주화 운동, 집합행동의 기회라는 필요조건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언론기업의 구조적 모순을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국가와 언론

한국에서 해방이후 한겨레신문 창간 시기까지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는 대체로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언론자유통제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언론은 생존을 위해 체제 순응전략을 채택했다. 권위주의 정부는 언론의 생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내용이 지배이데올로기에 해당토록 조정하거나 통제했고 그 같은 과정에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기능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경제적 이해 등을 둘러싼 상호갈등관계로 나타났다. 권력이 체제 순응적 언론에 제공한 반대급부 성격의 각종 법률, 행정적 특혜는 궁극적으로 언론의 상업주의 심화를 강화시켰다. 기업적 언론의 상업주의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가로 보장받은 경제적 이윤추구는 언론

배해 체제속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처럼 국가는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면서도 시민사회를 철저히 근절시키지 못했고 국가의 권력정당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시민사회의 두 주체인 산업노동자층과 중간계층을 육성시킨 셈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적 기본권 운동을 펼치고 중산계층이 자유인권적 기본권 운동을 전개하려 하자 국가 권력은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강화된 국가권력에 비례해서 시민사회 세력도 잠재적 도는 비공식적으로 강해졌다.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1987년 6월항쟁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6월의 학생 및 중간계층의 항쟁과 동년 7,8월의 노동자 투쟁은 정치 및 사회민주화 운동으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층과 중간계층 및 학생들이 추진했던 일종의 시민사회확장운동의 의미를 지닌다. 당시 노동자들은 계급투쟁보다는 시민사회의 주체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이후 6월 항쟁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억압적 권위주의 국가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축시켜오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운동을 봉쇄해왔다. 그러나 6월 항쟁이후 언론의 자유는 크게 신장되고 공포억압정치 형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

사간 카르텔 형성과 그 유지, 주·월간지 발행을 통한 이윤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확보된 정치적 자유화 조치, 동구권의 변화 등은 대안언론의 창간운동과 언론민주화운동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2) 시장과 언론

기업적 언론의 상업주의는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윤추구를 보장받는 언론사간 카르텔 형성과 그 유지, 주·월간지 발행을 통한 이윤창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머독과 골딩은 매스 미디어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가능한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대규모 영리기업이라는 매스 미디어의 위치와 체계적으로 연관될 때, 그리고 이러한 연관이 역사적으로 검토될 때 비로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olding, 강상호, 이원광 편, 1986, 72). 간헐도 매스 미디어가 상품 생산과 교환을 통한 잉여가치 창출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및 다른 상품 생산 부문에서 광고를 통해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적 실체라고 주장한다. 언론사 내부에서는 언론경영층의 상업주의 우선에 따른 이윤추구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데 따른 정상적인 보도 기능의 위축과 왜곡 등으로 인한 시민사회와의 갈등 현상이 발생한다.

5.6 공화국 당시의 시장은 전통적 언론매체에 광고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언론을 상업주의에 예속시켰다. 언론사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광고주의 기업이익 증대에 봉사하는 상업주의 언론으로 전락했다. 당시 시장은 고도성장정책 속에서 각종 특혜 등으로 이윤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했다.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난 기업행위는 정부의 비호아래 가능했으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국민들이 떠 안았다. 독재권력의 형태로 나타난 국가와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는 고도경제성장정책의 일부 해

택을 시민사회에 분배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개약 등의 방법을 통해 침해당했다.

(3) 시민사회와 언론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 등을 추진했지만 권력에 예속된 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 보도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권익과 직결된 정치 경제 관련 정보를 언론은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더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담론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 같은 기제 속에서 기존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져 시청료 거부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저항운동이 실행되었으며, 새 신문 창간이 시민사회의 지원으로 가능해지는 사회변동이 진행되었다.

2)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과정

사회운동과 관련을 맺는 결사체들의 생성과 성장 등의 과정은 전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전체 사회와 특정 조직체는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활동하게 된다. 사회운동으로 표출되는 그 활동상은 조직 내부의 제반 능력과 외부 사회와의 친소 관계 등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사회운동의 형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단기적으로 조직내부가 어떤 상태이며 조직이 추구하던 많은 목표 가운데 무엇이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즉 어떤 조직이 내부 역량과 외부활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일시에 이루기는 어렵다. 사회운동의 목표가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달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조직체의 목표설정과 그 추구노력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창간운동의 과정은 대안언론운동, 언론 민주화 운동, 집합행동의 기회가 구체적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에 기여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창간운동의 조직화(organization),

집합행동을 위한 동원화(mobilization), 창간결과로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로 나뉘 분석할 수 있다.

(1)대안언론운동

한겨레신문 창간이라는 일회성 사례의 분석은 그 필요조건으로 작용한 구조적 배경에서 등장한 기존언론의 모순이 어떻게 창간운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에서 전개된 정치적 민주화 운동은 체제 순응적, 상업주의적 기존언론의 대체물로 역할 할 새 신문 창간운동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의 담론을 지원할 언론매체가 절실했으며 그것은 결국 정치적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언론민주화 운동 또는 대안언론 운동이 역동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2)언론민주화 운동

언론민주화 운동은 기존언론의 부정적 성향에 대항적 성격을 지닌 세력이 구체적으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언론활동을 전개한 것을 의미한다. 이 운동의 주체세력은 기존언론의 모순을 부각시켜 비판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 담론을 지원하거나 대안매체 창간운동 등을 제시했다. 5공화국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전개된 언론민주화 운동은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획득함으로써 한겨레신문 창간에 필요한 조직화, 동원화 등을 단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

(3)집합행동의 기회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의 사회변동은 결국 한겨레신문 창간을 가능케 한 집합행동의 기회를 제공했는 바, 그에 대한 분석은 C. Tilly가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approach)에서 제시한 집합행동의 기회 개념을 적용키로 한다. 경쟁자(contender)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행동(joint action)을 취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는 집합행동의 기회는 억압/축진, 권력, 기회/위협 등의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창간운동의 전개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는 창간운동의 조직화, 동원화, 제도화로 나눠 분석기로 한다.

① 창간운동의 조직화

사회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즉 조직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주체세력은 집중화된 조직의 형식을, 주체세력의 지원세력은 탈 집중화된 비공식 조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신문 창간의 경우도 유사했다. 즉 창간 주체세력은 소규모의 창간준비사무실이라는 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 집행했으며 유명 종교인, 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를 망라해서 성명서나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간운동에 대한 공신력 부여와 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출현과 그 조직화가 이뤄진 과정은 창간운동 주체세력의 창간운동 선언과 그 실천을 위한 단계적 조치, 그리고 새 신문 편집관련 조직체제 형성 등으로 나뉜다. 새 신문의 조직화 과정이 전체 조직의 형성과 편집체제의 구성으로 시도된 것은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새로운 대중매체의 출현이 갖는 중요성과, 새 신문이라는 단일 조직내에서 언론영역을 직접 담당하는 편집관련 조직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매체를 사회의 한 부분으로 고찰할 수 있는 광의의 시각과, 언론매체라는 단일조직은 편집과 비 편집 등 다소 이질적 조직의 합성체라는 협의의 시각이 병존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먼저 새 신문 창간에 필요한 언론사 전체의 조직화과정을 보면, 창간 언론민주화운동 세력은 새 신문 창간을 위한 첫 단계로 창간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간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정보 확산을 통한 시민사회 지지획득을 시도하고 이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동원한 창간발기인대회를 통해 창간운동에 대한 공신력 부여와 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

했다. 다음 단계로 창간주체들은 새 신문 주식회사 설립 등기, 일간신문 등록신청, 새 신문 창립총회, 사원모집 등을 통한 회사조직 정비, 신문판매와 광고전략 및 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제도권 언론의 형태를 갖추었다.

새 신문의 편집관련 조직체계 형성과정을 보면, 기존언론과 차별성이 있는 편집전략의 공표, 이를 통한 새 신문의 정체성 확립과 그 실천을 위한 조직화라는 특성을 지닌다.

② 창간을 위한 동원화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집단에 의해 통제 가능한 자원인 것처럼 한겨레신문 창간에서도 역시 자원의 확보가 그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다. 동원 대상인 자원은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그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해 돈, 시설, 노동, 전문지식, 조직 등이 거론된다. 한겨레신문 창간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자원동원과정은 창간기금 모금과 내부 노동력 충원을 위한 인력 동원 등이 포함된다. 창간기금 모금은 새 신문의 소식지나 발의자 또는 기존 일간지 등을 통한 선전, 홍보와 지역주주조직들의 모금운동, 기존일간지를 통한 모금광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외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등도 한겨레신문 창간기금 모금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전문 인력 모집은 공개채용과 비공개 채용 등의 방식이 혼용되었다.

새 신문 창간을 위한 기금목표액은 당시로서는 전체 사회운동의 어느 부분에서도 달성이 불가능하게 여길 정도의 거금이였다. 6월 항쟁이전의 한국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이나 권위주의 국가의 사회운동 결사체 결성저지 또는 통제로 인해 과거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거액의 창간기금을 국민 주주 모금 형식으로 가능했던 것은 언론민주화 운동 세력이 80년대 중반부터 말 지 발행과 보도지침 폭로 등을 통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유형, 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체

사회의 자원 기회구조 등의 변화를 의미했는데, 새 신문 창간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가능했던 것은 언론민주화운동이 8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 속에서 매우 활발했으며, 여타의 사회민주화 운동부문에 비해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시민사회에서의 신뢰가 축적될 수 있었다는 점과 기존언론의 반 언론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언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등했다는 점등이 주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③제도화

사회운동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경우 그것은 Gamson의 분류한 완전 성공(full success)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통해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언론조직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회운동의 과정의 종식이면서 제도화 속으로의 편입을 의미했다. 합법적 대중매체를 지향한 새 신문은 창간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속을 이행키 위한 제도화를 추진했으면 그 결과 이념, 편집, 인적 구성, 경영 등에서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3) 한겨레신문 정체성 확립과 창간운동의 결과

새 신문 창간으로 인한 제반 파급효과는 창간 당시의 시대상황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나탄낸다. 즉 한겨레신문 창간은 당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와 언론계의 비민주적 성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 정부는 6월 항쟁과 그 여파 속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합법성을 획득한 군부정권의 성격이었으나 한겨레신문 창간 등으로 대변된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제한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일환으로 언론사의 창간, 복간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언론은 정치권력의 지배 대신 독점 자본의 지배를 받는 상황 변화를 겪으면서 언론

계 오래된 관행인 카르텔이 파괴되고 경제활성화의 덕택으로 광고수입의 증대가 가능했다. 이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한겨레신문은 객관적으로 그 존재가치가 규정된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며 창간 후 언론문화 등에 미친 파급효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새 신문의 정체성 확립

한겨레신문의 정체성 확립은 시민사회로부터 집단적인 지지를 유인해 낸 구체적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집단의 강력한 동질성이 집합적 유인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창간을 주도한 주체세력은 새 신문의 정체성을 창간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이 제시된 창간사와 윤리강령에서 구체화시키고 이어 새 신문의 편집전략과 편집국, 신문체제 구성에서 다중에게 확인시켰다.

(2) 새 신문의 파급효과

한겨레신문의 파급효과는 새 신문이 창간이후 기존 언론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신문은 창간이후 기존 신문과 일정부분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존전략을 펼쳤으나 기존 신문은 새 신문의 등장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영향은 편집제작에서 기존언론과 달리 개혁 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과거 언론이 외면했던 분야에 대한 집중보도를 통해 소외계층의 커뮤니케이션 소외감을 해소하고, 민주·민중·통일 가치를 추구하는 보도태도를 보여주었고, 정부 비판과 민중 지향적 논조를 강화했으며 학생과 노동자세력에 비중을 둔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 여러 분야의 민주화와 개혁을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되었다. 새 신문은 언론노동운동의 활성화, 공정보도를 위한 편집, 편성권 독립주장 등에도 기여했다.

이상과 같은 3단계의 분석 틀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창간운동의 배경, 창간운동 과정, 그 결과를 설명코자 한다. 이에 따라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에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언론의 성격, 언론의 생존전략과 시장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창간운동의 과정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및 언론민주화 운동, 창간과정에서의 집합행동의 기회를 설명한다. 이어 창간 조직화 과정은 창간 발기 추진위원회, 창간발기인대회, 창간발기인의 의의 및 계층별 분석, 창간을 위한 행정절차, 새 신문 창간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 등을, 간운동의 동원화 과정은 주주의 납입 및 직업, 종교별 특성 분석, 창간기금 모금을 위한 동기부여 등을 분석한다. 한겨레신문 정체성 확립과 창간 운동의 결과는, 한겨레신문의 정체성을 창간사, 윤리강령 분석, 편집전략과 편집국, 신문체제 구성의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이어 창간의 정치 사회적 영향은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 언론기업의 카르텔 파괴와 경쟁심화, 새 신문의 기존언론계 편입과정에 이어 창간이 언론문화 등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키로 한다.

제 3장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

제 1절 권위주의 정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관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언론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성격과 함께 정보전달이라는 미디어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¹⁸⁾. 이 때문에 언론은 미디어라는 상품을 생산 분배하는 산업적, 상업적 하부구조에 속하며 정보라는 관념적 상품의 생산, 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상부구조, 즉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 80년대 한국의 기존 언론은 권력의 억압구조와 언론자본의 상업주의 속에서 지배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의 전파에 기여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지배 피지배 구조의 특성은 해외자본과 그에 결탁한 국내의 독점자본의 지배,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 민중의 경제적 배제, 군부 세력의 정치권력 장악 등으로 요약된다(정해구, 1986, 82 ; 이옥경, 1983, 261). 그 같은 상황에서 언론의 생존전략은 경제적 이익의 확보라는 상업주의에 집중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관계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 등을 추진했지만 권력에 예속된 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 보도했으며 정치 경제 관련 정보를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했지만 시민사회는 대안언론이 존재치 않은 상태에서 알 권리를 침해당했

18) Terrou와 Soral은 모든 정치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는 전제아래 언론은 정치권력에 완전히 예속된 상태와 비예속적 상태의 양극 사이에 무수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존재하는 갈등관계에 있다고 정의한다(Terrou and Soral, 1951). Zechariah Chaffe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언론활동을 통제 또는 제약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정부는 보다 긍정적인 언론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셋째, 정부는 언론을 매개로 삼아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한 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haffee, 1947, 3-4.7).

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특성 속에서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더 거세지고, 상업주의 언론에 반발한 언론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6월항쟁으로 정치적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상황은 대안언론의 창간운동과 그 조직화, 그리고 동원화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한겨레신문이 창간을 전후해 상업주의 언론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구입하는데 대한 시청자 반발운동이 일어났다. 언론사 내부의 경영과 편집의 갈등구조는 언론계 특유의 문화를 조성한다. 그같은 기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편집·편성권 독립 요구로 나타났다. 주로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들 문제는 언론사 노조 결성과 공정보도 보장 요구 등의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이어졌다.

권위주의 정부는 언론의 생산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내용이 지배이데올로기에 해당토록 조정하거나 통제했고 그 같은 과정에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기능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경제적 이해 등을 둘러싼 상호보완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적 언론의 상업주의는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윤추구를 보장받는 언론사간 카르텔 형성과 그 유지, 주·월간지 발행을 통한 이윤창출 등으로 압축된다.

본 논문은 한겨레신문 창간 운동의 구조적 배경을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대까지로 삼아 고찰키로 한다.

1) 박정희 정권

한국사회에서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5·16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집단의 산업화 과정으로, 이 때부터 자본가계급은 중소 자본가 계급을 장악한 경제적 지배계급으로 성장했으며 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업자본을 형성했다(임영일, 1992, 183-188). 당시 국가는 경제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재정과 금융,

차관 도입을 통한 투자재원의 조달자로서 독점 자본의 형성 혹은 성장의 직접적인 물적 기반을 제공했다. 중화학 공업은 선진국 독점자본과의 수직적인 국제분업 연관 속에서 추진되었고 영세소기업은 대자본의 공세에 밀려 급속히 몰락했다. 60-70년대의 독점자본가 계급은 국가 주도하의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유보하고 정치집단에 예속된 대가로 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당시 정치사회는 50년대의 정치구조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강권적 국가권력의 수직적 통제와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다. 야당의 역할을 맡았던 신민당 또한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계급적 사회세력이나 집단을 지지와 충원의 기반으로 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대학과 종교계, 문화 언론계의 진보적 인텔리 계층이 주도하던 '재야'라는 정치세력은 시민사회 내의 노동자, 농민층의 초보적 계급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 70년대 말까지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은 재야 세력과 야당, 노동자, 농민층의 연계를 차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YH여공사건, 사북 탄광사태 등이 발생했다.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은 쿠데타에 성공한 뒤 군부 권위주의 지배를 강요하고 정착시키면서 4·19이후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보이던 시민사회에 대해 보다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통제를 실시했다(한배호, 1992, 72-79). 박정권은 공업화를 골자로 한 근대화를 추진해 집권 초 수입대체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대치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 정권의 정당성 기반을 상당히 보충, 강화했다¹⁹⁾. 박정권은 한일 국교정상화, 월남전 참전 등을 통해 대내외적 지지기반을 굳혔고 공업화를 통한 사회구조변화를 촉진시켰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도 자본주의 산

19) 경제적 지배계급이면서도 국가권력의 통제하에 있던 독점자본도 국가 개입으로부터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급진적 민주세력을 비판하는 양면전략을 펴게되었다 (정태석 등, 1995, 273).

업화가 진전되면서 미숙한 수준이지만 시장, 개인주의, 다원주의 등의 시민 사회 선행조건들이 집권세력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출현했다²⁰⁾. 공업화의 진척은 임금 노동자의 급증에 따른 계급분화가 발생해 소득 분배를 놓고 대립하는 기업집단과 노동단체의 갈등, 이념 사상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지식인 집단의 저항 등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전문화의 진전으로 화이트 칼라층과 중산층이 급증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왜곡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이 강두는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제국주의 정권의 그것과 유사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이강수, 1999, 308 - 315).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강제 - 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는 선전 장치, 혹은 커뮤니케이션 조직기구의 확대설치, 법제적 통제의 강화, 언론사 정리 또는 통폐합, 사전검열, 언론인 구속과 해직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조작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히틀러 나치 정권이나 일제 언론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지침을 들었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에 순응하는 언론인을 정치권력층에 포섭, 신분 상승이동을 시켰는데 61 - 63년 사이에 23명, 72년 - 73년 38명으로 집계되었다(김지운, 1989, 18).

5공화국 독재의 뿌리가 된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부터 언론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폈으며 그 결과 언론계는 점차 위축되어 67년 이후 기자의 구속·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보도조차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언론의 무기력증에 대해 67년 선거를 고비로 대학생과 독자들의 비판 및 언론계 내부의 자성이 잇따랐다. 즉 71년 4월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 수

20) 70년대 이후의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은 중산층에 의해 선도되고 있으며 그 전개과정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다. 즉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일정기간 역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정치적 의지에 따른 경제적 결정이라는 특성을 지녀 국가가 자본가를 만들어내고 지배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우위가 분명했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통제도 강화되어 1970년대 유신체제 성립은 시민사회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의미했다(김성국, 1992, 154 - 157).

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해 10월 제2의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군부는 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켜 언론탄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0월 유신헌법이 등장하자 언론은 유신체제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다²¹⁾. 박 정권은 기자 신분증 발급제도를 통해 행정적인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즉 기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언론인 자격 유무를 사전 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정권은 이어 '언론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내쫓았다. 즉 8개 지방지가 3개로 줄어들고 전국 기자 수는 6천3백여 명에서 3천4백여 명으로 감소했다. 73년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윤리위원회가 자율기구에서 법적 기구로 바뀌어 검열기능이 커졌다.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박 정권은 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선포에 이어, 다음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긴급조치를 양산했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75년5월은 인도지나 반도가 공산화되고 국내에서 개헌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었다. 군부는 긴급조치 9호로 개헌논의 금지, 집회·시위금지와 함께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행위도 금했다(언론을 극도로 위축시킨 긴급조치 9호는 4년7개월이 지난 79년12월에야 해제되었다. 9호 해제는 10.26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긴급조치아래에서 정부의 언론탄압이 더욱 노골화되자 기자들의 자유언

21) 당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분단, 외래문화 지향, 상업적·소비지향적 이데올로기로 대별된다. 분단이데올로기의 경우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적 대립상태의 한국적 표출로,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 안보지상주의를 표방하는데 활용되었다(고성국, 1985, 261). 분단이데올로기는 국민 대다수에게 노동운동을 비롯한 여타 사회계층의 사회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정착시켜 이들 사회운동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 외래문화 및 소비지향적 이데올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외의존성과 정치, 사회적 예측 상태라는 객관적 구조 속에서 발현한 것으로 선진자본국가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소비지향적, 향락적 상업문화의 전파를 민중 부문을 탈정치화하는데 기여했다(신홍범, 1983, 48).

론 수호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서 노조결성이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리고 7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일어났다. 75년 언론자유운동에 앞장섰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무더기로 해직되었고 이 운동을 지원하던 기자 협회보가 폐간되었다. 이후 10.26까지 4년여 동안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유린당했다. 정보기관원은 언론사에 전화 한 통화로 가시를 줄이고 뺄 수도 있었다. 물론 권력에 편입되기를 바라던 어용 언론인의 자발적 협조도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했다.

2) 5공화국

10.16박정희 피살사건, 80년 '서울의 봄' 등은 기존의 계급세력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나 본질적인 연관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최장집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유신체제의 몰락은 반체제세력이 정권을 붕괴시킬 잠재적 역량을 갖추지 이전에 발생했고, 집권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가용한 모든 강권적 국가권력의 자원들을 남김없이 동원할 수 있기 전에 발생했다 ... 이들 적대적 세력의 직접 충돌은 박정희의 사망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권력의 공백기에 이뤄진 것이다(최장집, 1989, 195). 그 결과 전두환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짧은 기간동안 격심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위기 속에서 손상받지 않았던 강력한 국가기구를 동원해 다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전 영역을 장악했다. 당시 정치위기가 체제위기로까지 증폭되지 않은 것을 임영일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 계급의 역량증대에 있다고 지적한다(임영일, 1992, 190 - 192). 비약적으로 증대된 독점대 자본가층의 물질적 자원동원력은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당시의 정치위기를 수습할 간접적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80년대초 신군부와 독점자본가층과의 관계는 양면적인 것이었던 바, 우선 독점자본가층은 신

군부에 대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자본축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계기를 확보했다. 신군부가 집권한 80년대 들어 한국의 독점대자본가계급은 지배계급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은 70년대까지의 경제적 지배계급에서 사회적 지배계급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일, 1992, 192 - 198). 즉 한국 독점자본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학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도 그 헤게모니 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었다. 80년대의 정치위기 심화과정에서 자본가계급은 점차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부문의 권력 테크노크라트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있었다. 자본가계급은 80년대 중반이후 재야 민중운동권에서 표출되던 급진적 사회변혁 이데올로기를 경계했으며 이는 노태우 후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지배층을 동반자로 선택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 이전 한국에서 노동자 계급이 계급정치의 주요 변수가 된 적은 없으며 60년대 이래 한국에서의 격렬한 정치변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전개된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탄압적 개입의 특성을 나타냈다. 60년대 이후 70년대를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점차 거대한 사회층으로 성장한 노동계급은 그 잠재적인 구조적 역량에 비해 주체적, 이념적인 역량의 성장 정도는 지극히 미미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노동은 자본에 의한 포섭, 국가에 의한 노동의 배제와 탈정치화로 요약된다. 당시 공식적인 노조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할 뿐 노동운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87년이전까지 노동운동은 한국노총이 아닌 소수의 단위노조들에 의해 일어났을 뿐이고 도시산업선교회라는 진보적 기독교 조직에 의한 지도를 받았다. 도시산업선교회는 80년대 초까지 국가와 자본에게 위협적인 유일한 친노동자적 조직이었다.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신군부는 강권통치를 통해 정치,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학생, 재야, 야당 등으로부터 집중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일부 야당 세력과 재야는 노동자 농민과 도시빈민층 등을 주축으로 한 민중세력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조직적 저항세력으로 등장했다. 의회와 제도정당의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는 5공화국에 결정적 질곡이 되었고 해체과정을 밟던 정치사회와 활성화 과정의 시민사회의 접점에서 민주/반민주 전선이 형성되었다.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발전의 출발점은 광주민주항쟁에서 비롯된다. 유신체제를 승계 하려는 신 군부 독재체제의 재편 기에 나타난 광주민주항쟁은 공수부대의 진입과 양민학살에 대한 국민의 무장저항, 군부의 무차별 진압으로 전개되었고, 이 광주항쟁을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조희연, 1990, 15-25). 광주항쟁을 통해 확인된 80년대 사회운동의 특성을 보면, 광주항쟁을 통해 지배권력의 폭력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부각시킨 의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군부세력에 대한 지원의 확인을 통해 반외세자주화역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군사정권은 군부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화 추진세력에 대한 탄압, 와해 노력을 벌이게 되고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80년대 사회운동이념 및 실천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83년 들어 군사정권이 체제의 재정비와 권력의 공고화를 마친 뒤 민중적 불만을 체제 내로 수렴키 위한 유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사회운동 세력들은 확대된 합법적 활동공간을 활용, 사회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촉진키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84년 11월 민정당사농성사건, 85년 5월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모순으로 잠재되었던 민족문제가 전면적으로 공론화 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의 경우 85년 8월 서울노동조합연합(서노련)이 창립되어 사회구조적 변혁을 전제한 정치투쟁을 지향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의 연계를 위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85년 3월 결성되어 전국적인 공개적 사회운동조직의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84 ~ 85년 시기의 한국사회운동의 전반적 지향성은 ‘민족, 민주, 민중혁명’으로 압축되었지만 각론의 부분에서는 운동세력들간의 대립이 발생했다. 85년 후반기부터 군사정권은 그이전의 유화정책을 거둬들이고,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정책을 시행하게되고 그에 대해 사회운동진영의 투쟁이 지속되면서 87년 2월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이 발생해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반군사독재투쟁에 합류하면서 6월 민주화대투쟁이 일어난다. 6월 항쟁으로 군사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체제가 균열되면서 노동대중의 광범위한 투쟁이 7~9월동안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즉 전국 4천여개 기업체에서 27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시위에 참여했고 6·29이후 10월까지 신규노동조합이 1,100여 개에 이르렀다. 민중들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 고양되자 지배층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6·29선언을 내놓게 되어 9월이후 정국은 대통령 선거국면으로 들어간다. 민중운동진영은 선거혁명을 통한 군부독재 종식을 시도했으나 양 김씨의 분열 등으로 결국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태우의 당선은 합헌적 형식을 통한 군사정권의 재생산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80년대 언론에 대한 국가와의 관계는 정권의 언론통제와 혜택의 제공, 즉 채찍과 당근을 구사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980년 5·17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각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박정희 정권의 그것보다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방식이었다(김해식, 1994, 188-191). 10.26이후 선포된 계엄령에 따라 언론은 사전검열을 받게 되고 군부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억눌린 민주화 주장이 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검열을 이용했다. 당시 계엄사 검열단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사실의 보도 여부는 물론 기사내용까지 수정 또

는 삭제됨에 따라 많은 유언비어가 발생했다.

군부는 공적 언론을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군정을 연장하려는 저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드러냈다. 즉 민주화운동의 확산을 막기위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차단, 축소, 왜곡했다. 반면 군부는 막힌 언론에 갈증을 느끼는 사회정세를 역이용해 유언비어 형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흘려보내 사회적 반응을 떠보기도 하도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다. 유언비어의 생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던 군부는 5공화국 내내 '유언비어 작전'을 폈다. 즉 권력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위협적인 유언비어를 흘려보내는가 하면 권력자의 자애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감격적인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언론계의 젊은 기자들은 4년 동안 언론을 짓누르던 비상조치 9호가 해제된 79년 12월을 전후해 유신시대 언론을 반성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나 이런 언론자유운동은 계엄사 검열단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 현실, 특히 민주화 추진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그 한계가 명백했다. 이 때문에 검열철폐 주장이 제기되어 기자협회는 80년 5월20일을 기해 전국 언론사가 검열을 거부토록 의결했다. 군부는 언론을 비롯한 대학가, 재야 등에서 불어오는 민주화 열풍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80년 5월17일을 기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군정연장을 위한 탄압책을 썼다. 이는 결국 광주항쟁을 유발했고 민간인 대량 살상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현지에 특파된 기자들이 보낸 기사와 외신보도에 담긴 군의 파괴적 행위에 반발해 5월20일 경부터 전국 언론사가 부분적인 검열 및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문·방송·통신은 간부들이 제작에 참여, 제작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언론의 군부에 대한 항거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광주항쟁기간 동안 광주 일원을 제외하고 군부에 저항한 세력은 언론계가 유일했고 그 때문에 광주를 점령한 신군부의 언론탄압도 자심

했다. 군부는 내란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 1300여명의 언론인을 강제해직하고 40여개의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언론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기본법을 만들었고 5공화국 출범이후에는 매일 보도지침을 언론사에 보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았다.

5공화국을 전후해 자행된 언론 탄압을 합법, 불법적 형태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법률적 통제로는 헌법, 국가보안법,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계엄법, 반공법,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 집시법 등이었고 행정적 통제로는 기자 신분증제 실시, 정부 각 부처 대변인 제 도입 등이 손꼽힌다. 불법적 탄압은 보도지침을 통한 규제,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 임의동행 형식의 언론인 불법 연행조사, 기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언론통제를 통해 정부에 유리한 기사와 대통령 기사는 크게 다루어지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축소·왜곡, 삭제되었다. 또한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고속성장정책을 펴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경제현장의 보도는 철저히 억제되었다. 군사정부는 이 시기에 언론에 대한 탄압과 함께 언론의 상업주의적 속성을 이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혜로 언론을 권력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다(고승우, 1998, 84-93). 즉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간편화하기 위해 언론인 숙청, 언론사 통폐합을 통해 언론 구조를 단순화했다. 즉 비판적인 언론인을 언론 현장에서 몰아내고 대대적인 신문 방송 매체의 통폐합과 방송공영화 조치를 취했다. 언론에 대한 감시기구로 기존의 문공부 외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연구원,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법정 언론유관기관을 만들어 언론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했다.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사를 통폐합하고 주재기자제도를 폐지한 후 연합통신만이 지역기사를 취재토록 했다.

행정적 통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 체계인 언론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문공부 장관에게 행정적 판단에 따라 언론사의 정간 또는 폐간을 명할 수 있었다. 이 법의 등록조항은 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신문사의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자본가만이 언론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즉 자본이 부족한 변혁운동은 원천적으로 언론을 소유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았다. 이 법은 1987년 폐지되고 대신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 법도 등록기준, 시설기준, 문공부장관의 발행정지권한과 등록취소 심판청구권, 발행인과 편집인의 자격제한 등이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인 것으로 지적받았다.

일상적인 언론통제를 하기 위해 문공부의 홍보조정실에서 '보도지침'을 하달했다. 보도해야 할 기사와 말아야 할 기사, 크게 부각시켜야 할 기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보도지침의 이행율은 중앙종합일간지의 경우 70-80%가 되었다(김동규, 1988, 168).

언론사 통폐합은 살아남은 언론에게는 큰 혜택의 의미가 있었다. 정부는 1960년대 이래 지속된 구독료와 지면수에 대한 신문 카르텔을 묵인했고 운전기를 수입하는 신문사에 감세혜택을 주었다. 신문사들은 권력의 허용으로 출판업을 확장해 많은 잡지들을 창간했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상업인쇄, 부동산임대, 스포츠 사업, 문화 사업등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당시 언론인에 대한 특혜를 보면 우선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도 주었다. 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해외연수,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행해졌다. 이 같은 공식적인 혜택 외에도 언론인 출신의 정치권 충원, 촌지 제공 등이 행해졌다.

86년 9월 보도지침이 폭로되어 5공화국의 야만성과 기만성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국·내외에 가해진 충격은 컸다. 5공화국에서 문공부 장관을 지냈

던 이광표씨는 88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보도지침의 70%는 지켜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군부통치 기간동안 공식 언론이 권력에 의해 차단되고 왜곡되면서 비공식적 매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 현상이 발생했다. 즉 각종 유인물과 테이프, 미등록 주,월간지 등이 가려진 사실과 진실을 전달했다. 유인물은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한 복사기 등을 통해 대량 제작이 가능했고, 녹음기의 대중화로 테이프를 통한 각가지 노래 등을 보급해 민주화 운동을 촉진할 정보전달이 활성화 되었다. 또한 해직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말'등의 매체는 공식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각가지 국.·외 정보를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권력의 횡포가 자심할 수록 보완적 기능을 하는 정보전달 수단도 개발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5공화국 중반이후 대량 보급된 복사기는 정보전달 매카니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복사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등사기와 인쇄업소의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찰 등 권력기구의 단속이 용이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복사기의 등장은 공식언론이 침묵하는 사실들을 단시간안에 광범위한 대상에게 배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정보전달을 용이케 하는 전자기기의 보급은 군사정권의 정보를 차단 왜곡할 여지를 크게 좁혀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군부는 언론탄압 과정에서 교묘한 당근정책을 병행해 언론사들의 상업주의적 이윤을 크게 해주고 언론인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언론은 위축되었지만 언론사는 비대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은 80년 통폐합조치이후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고 윤전기 도입관세가 20%에서 4%로 인하됐다. 광고물량은 4배로 늘어났지만 신문사가 줄어들어 광고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신문업계는 카르텔을 형성해 물품구입과 판매 영업 등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고속성장의 계기를 만들었다. 5공화국 기간동안 6대 중앙일간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87년 성장율은 81

년에 비해 3백%에 달해 일반 제조업의 성장율을 웃돌았다. 동아일보의 경우 자본총계가 81년에 비해 87년은 4.5배로 늘었다. 또한 5공 정부는 언론인들에게 집권 5년 동안 3백억원의 특혜를 주었다. 즉 1,313명의 해외시찰에 44억 원, 자녀 학자금 177억 원, 해외연수 235명, 기자월급 가운데 취재수당 20%면세, 9천명에게 주택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했다. 5공화국 기간 동안(80년 -87년) 정치권력으로 이동한 언론인은 55명으로 이는 61년부터 87년까지 정치권으로 신분상승한 전체 언론인 188명의 약 30%에 달했다(김지운, 1989, 18).

정치군인들에 의해 요리된 5공화국 언론은 보도지침에 조종되어 반언론적 보도관행을 되풀이 한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5공화국의 폭정과 기만술에 대한 민중적 분노는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 군부독재를 끝장내지는 못했으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군사정권은 6월 항쟁이후 언론기본법 폐지, 보도지침 폐지 등을 공언하면서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KBS와 MBC는 교묘한 영상조작, 방송시간 차별 등의 방법으로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득표공작을 한 것으로 두 방송사 기자들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군부독재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제도언론'의 반사회적 행위와 그에 대한 반발, 그리고 수많은 민주투사와 언론운동가들의 활약은 한겨레신문 창간에 6만여 명의 국민 주주가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새 신문 창간에 필요한 2백억 원의 창간기금이 모아진 것이다. 제도언론에 대해 이태호는 체제, 즉 통치체제 꼬는 언론통제 체제 속에 함몰된 언론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신체제의 말기에 그 본성을 드러낸 이런 언론형태는 자유언론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태호, 1984, 13-15).

3) 노태우 정권

한국사회 변혁운동은 1987년 6월 항쟁과 노태우 정권의 등장 이후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전환국면은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종오, 1992, 427 - 439). 조희연은 6공화국이 그 본질에서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성격이었지만 강경책과 유화책의 배합 등을 통한 형식적인 민주체제로서의 형식을 갖추려 했다고 본다. 선거혁명의 노력이 실패한 사회운동세력은 일시적으로 민주화투쟁의 목표점과 구심점을 상실해 소강상태에 빠졌지만,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의 활성화, 노동조합운동의 확산 등을 통해 변혁적 대중운동의 흐름이 확장되었다(조희연, 1990, 25-30). 87년6월 직선제 쟁취를 구호론 내건 전국민적 시위운동은 1960년대 이래 최대였으며 그것은 최후의 대중적인 민주화운동의 형태로 평가된다. 그러나 6월항쟁은 과거청산이 생략된 채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제한적 성공으로 귀결되었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해인 1988년의 5공화국 청문회 또한 그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87년 민주후보의 단일화 실패는 군사정권의 실질적 연장이라는 성격을 지닌 노태우 당선으로 귀결되면서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87년 대선은 야당후보의 단일화와 민중운동의 독자후보를 추대하자는 비판적지지, 후보 단일화, 독자후보의 세 가지 입장이 공존하면서 사회운동의 분열을 초래했다. 노태우 후보의 당선, 야당과 사회운동의 패배는 사회운동의 위축과 방향상실을 불가피하게 했다. 유신이래 정치적 목표였던 대통령 직선제는 실시되었지만 그 결과는 사회운동의 패배와 지배권력에 대한 정통성의 부여였다. 노태우 정권, 6공화국의 성격규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는데, 하나는 노 정권을 파시즘 정권으로 규정하고 비타협적 투쟁의 연속을 주장하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6공화국은 5공화국과 차이가 있으며 과거에 비해 더 커진 정치공간을 활용해 합법적, 제도권내에서의 투쟁을 주장하는 입장

이었다. 그 다음으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후 국제질서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지면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권 변혁과 함께 사회운동은 문화, 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교육운동, 지역문화운동 등이 활발히 대부 되기 시작했다. 지배구조는 독점자본 위주로 재편이 이뤄지면서, 사회운동 은 과거 반 독재 저항운동에 결집했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대변하던 사회운동 집단들이 87년 이후 급속히 분화, 재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변화는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에 모아졌던 대중 적 지지와 열기가 민주언론이라는 비정치적 슬로건을 내건 한겨레신문 창 간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정도를 고양시켜 단기간 내에 창간기 금 모금과 창간조직화 성공, 그리고 창간을 가능케 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 다.

노 정권 출범 당시의 사회운동 흐름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통일운동의 출현이다. 학생운동과 재야에서 자주적 교류, 방북, 공동올림픽 추구 등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의 영향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관계 증진 주장으로 나타났다. 87년 7,8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 운동의 대중적 조직화 특히 노동조합운동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다. 지역 과 업종별 협의회와 이의 전국적 조직체로서의 전노협의 결성 등이 이뤄지 면서 노동운동은 더욱 추진력을 얻게된다. 즉 그해 12월 마산창원지역노동 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되고 90년 12월 전국노동조합연합회(전노협)이 결성되 었다. 농민운동은 87년 2월 가톨릭농민회(가농), 한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기 농)가 발족한데 이어 89년 3월 가농, 기농을 중심으로 한 전국농민운동연 합회(전농연)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 결성되었으며, 88년 4·26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서 진 행된 광주청문회, 5공 비리 청문회는 대중들의 정치이식을 발전시키는 주

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6공화국은 89년 2월 보수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중간평가공약사항을 무화 시킨 뒤 문익환 방북 및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감행했다.

6공화국들어 5공화국까지 철저히 억제되던 신문사 창간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겨레신문 등을 비롯해 수많은 매체가 전국적으로 등장했다. 정부수립 이후 억제되었던 언론사 노조가 결성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신문과 방송사의 파업으로 비화되었다. 언론자본의 무한경쟁이 벌어져 신문업계의 완강하던 카르텔이 깨지면서 증면, 중앙과 지역 동시인쇄 등이 꼬리를 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일부 신문은 폐간되기도 했다. 이런 언론계 내부의 경쟁격화와 정치사회적 보수화 물결속에서 언론 노조운동도 '자사이기주의'의 한계를 극복치 못하는 등의 한계 속에서 소강상태에 빠졌다. 87년 11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 다음해 일간지 등록 요건이 완화된 뒤 88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의 일간지가 문공부 등록을 마쳤으며 그중 21개 신문이 발행되었다. 그 결과 기존 30개의 일간지를 합해 모두 51개 신문 1천만부가 발행되었다. 87년 10월 한국일보가 최초로 언론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88년말 현재 42개 언론사 노조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88년11월26일 전국언론사 1만여명의 권익을 대변할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편집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제도적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일보는 언론사상 최초의 파업 끝에 편집국장 후보 추천제를 쟁취했고 한겨레신문과 충청일보는 편집국장 직선제를 제도화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를, KBS와 MBC 등은 보도국장 추천제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1990년 3당합당 이후 여소야대 구조가 깨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치·사회적 민주화 추진 작업이 중단되

면서 언론운동 또한 그 힘을 잃어갔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던 상황에서 언론자본과 그 경영권이 언론노조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공정보도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편집권과 편성권을 둘러싼 언론내부의 갈등은 다수의 해직언론인을 양산했다. 또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 방송구조 개편작업이 강행돼 방송사 파업이 일어났다.

6공화국이 시작된 뒤 정치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5공화국에 비해 그 방법에서는 훨씬 세련된 모습을 나타냈다. 즉 88년 12월 중순 폭로된 문공부의 언론인을 상대로 한 매체조정활동은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인 88년 3,4월에도 권력의 언론조작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매체조정은 언론통제를 위해 상설적으로 운영되어 기사내용과 크기를 조정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5공화국의 보도지침은 주로 전화를 통한 요구의 형식을 취했으나 6공화국의 신중보도지침은 협조와 조정을 가장한 교활한 언론통제 형식을 취한 것이다. 즉 그것은 문공부 부 이사관 급 공무원들이 언론사의 사장, 주필, 편집국장, 부·차장, 평 기자 등을 고급 음식점, 골프장, 호텔, 요정 등으로 불러내어 1인당 최고 20만원씩의 향연을 베푸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공부는 매월 5백~6백만 원씩의 국민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은 신문과 방송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 권력이 못마땅해하는 기사와 방송프로를 빼거나 축소 보도·방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 사주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아 '미리 알아서 기는 식'의 자기검열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제2절 권위주의 정권하의 언론의 생존전략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언론기업은 이윤추구의 최대화를 보장받기 위해 기업 목표추구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

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과점적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대신 정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80년대의 기존언론의 생존전략은 제도언론으로 비하될 만큼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재벌경제구조의 특성을 지닌 일반시장과는 광고주의 이윤 창출 논리에 영합하는 상업주의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요약된다. 기존언론의 부정적 특성은 한겨레신문 창간의 구조적 배경의 하나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기존언론의 특성은 우선 80년 초 언론사 통폐합 조치이후의 언론사 카르텔 형성과 그에 따른 독과점적 특혜제공 등으로 압축된다. 이어 언론사 성장의 직접적 자양분이 된 광고와 언론의 상업주의, 그 과정에서의 언론통제 현상을 분석했다.

1) 언론의 독과점적 특혜

언론통폐합에 의해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소수 언론기업은 정부의 특혜화 광고 수입 증대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김해식, , 1994, 228, 267-270). 신문기업은 80년대 동안 자재비용이 물가안정 효과로 안정적인 반면 매출액의 급격한 신장으로 수익의 누적적 증대가 가능했다.

5공화국 하에서 언론은 각종 세제혜택까지 입으면서 재벌그룹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8대 언론기업의 81년 총 매출액은 3,078억원이었지만 87년에는 7,692억원이었다(김승수, 1989년 12월, 136). 6년 동안 매출액은 약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매체별로 보면 6대 신문기업은 81년 1,457억원에서 87년 3,750억원으로 늘어났고, KBS와 MBC는 81년 1,620억원에서 87년 3,942억원으로 증가했다. <표 3-1>은 4대 일간지의 80~89년 매출액 증가추이를 보여준다.

<표 3-1> 4대지 80~89년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신문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조선일보	161.3	264.3	335.0	405.8	475.4	543.0	572.2	690.2	914.4	1056.3
동아일보	265.4	312.6	373.1	451.5	519.7	556.1	611.3	710.8	885.7	939.7
중앙일보	214.7	294.0	375.6	441.2	534.2	655.1	736.9	830.3	1018.3	1224.1
한국일보	217.1	304.0	343.6	419.1	479.1	465.6	501.3	564.1	713.7	800.5
계	858.5	1174.9	1427.3	1717.6	2008.4	2219.8	2421.7	2795.4	3532.1	4020.6
성장률(%)		36.85	21.48	20.34	16.93	10.53	9.10	15.43	26.35	13.83

<출처 : 기자협회보, 1990년 7월6일>

80년대 4대일간지의 매출액은 858억 5천만원이었으나 89년에는 4,020억 6천만원으로 약 4.69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은 2.5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언론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80년 매출액 1백 61억 원으로 4대지 가운데 가장 매출액이 적었던 「조선일보」는 89년까지 무려 6.6배의 성장을 한 것이다.

80년대 한국 언론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는 법인세 납부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80년 26억원의 소득으로 전국 기업 중 62위를 차지했고, 81년, 82년에는 각각 77위, 80위를 기록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82년 신고소득 28억여 원으로 법인세 납부순위 87위, 83년 85년에는 각각 65위, 77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의 신고소득은 82년 28억여 원에서 83년, 84년에는 60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언론기업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이른바 다각경영을 함으로써 복합기업화 되어갔다. 언론기업은 외국 유명무용단이나 관현악단 등을 초

대하여 공연수입을 올리기도 하며 문화센터의 문화사업, 출판물의 인쇄대행, 부동산 임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기도 한다. 그리고 특히 여성지, 시사종합지 등의 잡지 출판을 통한 수입은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 각 신문사는 신문수입 이외에 다각 경영을 통한 부대사업이 전체 수입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언론과 시장의 관계를 보면, 신문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경쟁을 유보하고 상호 공존하는 카르텔이 지속되었다(김해식, 1994, 238, 288). 신문사 카르텔은 언론의 과당경쟁이 정부관련 기사의 양산이나 비판논조의 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정치권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 카르텔의 존속으로 언론사들의 이익이 일정하게 보장되었다. 신문 카르텔은 언론사간의 담합행위에 의해 지면수와 구독료는 물론 신문 판매, 신문 수송, 광고단가를 사전에 책정했다. 이같은 신문 카르텔은 신문기업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신규 신문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한국언론의 획일화와 상업주의를 심화시켰다.

신문기업은 신문협회의 이름으로 발행 면수의 제한에서부터 휴간일의 조정, 구독료의 결정, 더 나아가 판매에서 공동운송체제로까지 발전했다. 이 카르텔은 62년 신문사간 지나친 경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사정부가 조장한 제도이다. 이것이 8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되어 신문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불공정 담합행위로 굳어졌다(박인규, 1989년 1월, 211).

정권은 언론에 각종 면세 혜택을 주기도 했다. 신문협회는 81년 말, 관세법의 부칙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하여 4%로 대폭 감면해주었다. 이 기간에 전국 12개 신문사에서 30여대의 윤전기를 도입, 수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또한 정권은 84년 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수수료로 조성한 공익자금에서 80억원을 무이자 9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연합통신에 대부해 부지 3,500평을 매입토록 했다. 87년 2월 연합통신은 거기에 새 사옥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중 2,200평을 한국일보사에 팔았다. 정권은 이 과정에서 연합통신이 내야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10억원, 한국일보가 내야할 취득세와 등록세 4억원을 면제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자금으로 직접 언론기업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기독교 방송에 47억 5천만원(81~88년), 연합통신에 2억원(86년), 코리아헤럴드에 19억 7천 2백만원(85~88년), 극동방송에 2억 7,500만원(87년)이; 지원되었다. 그밖에도 전두환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만든 경향신문사 부설 정경문화연구소에도 9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노조, 1989, 25, 제 39호, 2).

문공부는 각 신문기업에 잡지발행을 허가해주었다. 5공시절 문공부는 언론통제의 일환으로 잡지발행을 극도로 억제했다. 잡지등록이 어려워지자 잡지발행이 이권화 했다.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잡지등록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도 있었다(한국잡지협회, 1990년 1월, 12). 문공부는 이기간에 경향신문 3종, 동아일보 3종, 서울신문 2종, 조선일보 4종, 중앙일보 4종, 한국일보 3종, 한국경제신문 1종, 연합통신 3종, KBS 방송사업단 2종 등의 잡지를 등록해주었다.

또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반상회보, 사보 등 연간 약 600억원 어치의 인쇄물을 신문기업이 수주하고 있다. 이것도 언론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다. 인쇄업은 중소기업고유업종이므로 대기업 언론은 참여할 수가 없다. 서울신문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권을 주고 있다. 시내버스와 좌석버스의 외부에 붙이는 광고는 연간 수익금이 120억 원에 달한다(한겨레신문, 1989년 12월 8일). 이 가운데 50%가 광고대행

사인 서울신문사의 몫이다.

정부는 당시 단일 광고주로서는 최대광고주였다. 정부광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85년이후 연간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광고는 87년 147억원, 98년에는 317억 6,800만원이나 된다. 반면 89년 최대광고주인 삼성전자는 262억 2천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따라서 광고에 의한 언론기업지원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내무부는 87년부터 88년까지 2년 동안 주민계도 명분으로 1백47억 원을 들여 서울신문, 경향신문 및 지방지를 구입하여 무료로 배포했다.

언론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는 권력과 언론자본과의 유착을 더욱 강화한다. 언론은 자연 권력의 시혜에 보답하게 된다. 그리하여 독재권력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홍보기관구실을 한다.

그 외에도 정부는 취재기자들에게 각종 보도자료 등의 관급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한다. 언론기업은 그 관급 자료를 통하여 취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언론기업은 언론상품의 생산비를 낮추게 되고, 정부는 언론생산물의 내용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정권은 언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언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크게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언론인 순치를 위해 썼는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81~87년에 모두 38억 원을 들여 1,124명의 언론노동자들을 평균 2주일간씩 '해외시찰'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냈다(장윤환, 1989, 47). 또한 전국 언론인 자녀 18만 4천명에게 학자금 117억 원을 대주었다. 그리고 언론인 금고에도 주택자금 36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17억 원을 출연 모두 9천명에게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언론연구원은 공익자금으로 언론인 해외연수사업을 주관했다. 81~83년 사이에 모두 252명의 언론노동자가 6개월 내지 1

년간 외국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광고공사는 81~88년까지 언론인 자질향상이라는 명목으로 208억 1,500만원, 언론인 복지후생증진이라는 명목으로 196억 3,300만원을 사용하였다.

한국기자협회는 84년 '언론인 복지'를 내세워 서울지역 기자들로 주택조합을 구성한 뒤 문공부와 건설부의 도움으로 개포동의 토지개발 공사 땅 1만4천평을 불하받고 8백 가구의 기자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1989년 11월 1일, 8).

언론노동자에 대한 면세혜택도 주어졌다. 81년 12월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8조 12항은 "언론기본법에 의한 통신, 방송,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정액 급여의 1백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1989년 8월25일). 그리하여 언론노동자들은 매달 적게는 3~4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다.

이러한 각종 혜택과 복지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식을 약화시킨다. 정권이 제공하는 특혜가 언론노동자 순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언론자본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기도 하다. 언론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언론기업이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제공하는 것은 사적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이다.

2) 언론의 상업주의와 광고의 영향

1980년 언론사 통폐합조치로 재벌이 소유한 언론사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다른 언론사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6·29선언이후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 규제조치의 완화로 신문, 방송, 주간지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5, 6공화국의 연도별 정기간행물 증가추세를 보면 1986년 2,134개사, 1987년 2,412개사, 1988년 3,388개사, 1989년 4,402개사, 1990년 5,183개사 등으로 나타난

다(공보처, 정기간행물 일람표, 1990년 160). 언론사의 창·복간은 물론 규모가 큰 언론기업들은 중앙일간지와 경제전문지 또는 잡지, 스포츠지 등에 다투어 진출해 언론산업의 소유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와함께 재벌그룹의 언론사 인수와 종교자본의 언론사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일정부분 정치권력에서 언론자본 또는 독점자본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직후인 1989년 종교, 언론, 독점자본, 언론자본, 국가 및 종교자본에 의한 언론사 소유집중 및 소유형태는 <표 3-2>와 같다(김승수, 1989, 25~26).

신문이 증면되면서 광고주 등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즉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 언론사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연 광고주의 매체에 대한 영향력은 1988년 광고주협회가 발족해 광고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적인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게된다(김해식, 1994,, 222—225). TV의 영향력이 신문보다 커지면서 광고주들은 광고매체로 신문보다 TV를 더 선호하게되어 신문사는 광고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그 통제력은 강화되었다. 재벌들은 언론 등에 대한 광고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들을 그룹산하에 설립해 경영했다. 1989년 삼성, 럭키금성, 대우 등 재벌들의 광고대행사 소유 및 매출 현황은 <표 3-2>, <표 3-3>과 같다(임동욱, 1990, 137-139). 광고주의 언론통제에 대한 사례를 보면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해인 1988년 파스퇴르 우유기사를 둘러싼 경우이다. 즉 이 우유회사는 자사의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내보낸 신문에만 광고를 싣고 비방 기사를 실은 신문에는 광고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광고가 실린 신문은 이 회사의 제품에 긍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반면 광고가 실리지 않은 신문은 이 회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다. 거대기업 광고주들은 자기 기업을 비판하는 소설에 대한 광고를 신문에 싣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6공화국초 재벌그룹들은 언론사를 인수해 재벌의 이해

<표 3-2> 언론산업의 집중현황 및 소유형태

자본의 성격		소유주체	주요 언론 매체	매체관련 산업	기 타		
사	독점계열자본	삼성그룹	○신문 - 중앙일보, 중앙경제신문 ○잡지 : 10종	○종이 : 전주제지 ○광고 : 제일기획 ○출판 : 삼성문화재단 ○여론조사 : 중앙SVP ○영화상영 : 호암아트홀	○40개 기업 ○연간매출액 (25조)		
		삼양사 경방그룹	○신문 - 동아일보, 소년동아일보 ○잡지 : 5종	○광고 : 연합광고 (주식 20,000주)	○고려중앙학원		
		한국화약 그룹	○신문 : 경향신문 ○잡지 : 3종	○광고 : 삼희기획			
		롯데그룹	○신문 : 국제신문	○광고 : 대흥기획			
		대우그룹	○신문 : 향도일보				
자	언론자본	조선일보 그룹	○신문 - 조선일보, 소년조선일보, 중학생조선일보, 스포츠 조선 ○잡지 : 5종	○인쇄 : 조광인쇄소	○코리아나호텔		
		한국일보 그룹	○신문 -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일간스포츠, The Korea Times, 소년한국일보 ○잡지 : 3종	○출판 - 소년한국 도서,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한주여행사 ○한국조립건물 (부동산임대) 등 10개 기업		
국	정	부	○신문 - 서울신문(재무부 49.9%, KBS 49.9%), 스포츠서울 ○잡지 : 6종 ○방송 - 한국방송공사(12개 TV국, 25개 라디오국), 문화 방송국, 교통방송국 ○통신 : 연합통신	○출판 : 국정교과서 ○광고 - 한국방송광고공사, 연합 광고(45%), 국제문화협회 ○방송사업 - 미주방송국(KTE), 한국 방송사업단 ○금융 : 언론인금고 ○통신 -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 통신으로 민영화), 데이터통신(30%)	○프레스센터 (사옥임대) ○한국문화진흥 회사(골프장업)		
종	교	자	본	통일교그룹	○신문 - 세계일보, 전교학신문 ○잡지 : 3종	○종교단체 5 ○교육기관 20 ○언론기관 12 ○기 업 150	
				순복음교회	○신문 : 국민일보 ○잡지 : 1종	○출판 - 신명출판사, 도서출판 주류, 도서출판 일년 ○인쇄 : 진화인쇄	
				천주교	○신문 : 매일신문 ○방송 : 평화방송		
				기독교	○방송 : 기독교방송		
				불교	○방송 : 불교방송		

<출처 : 김승수, 1989, 25>

<표 3—3> 재벌의 광고대행사 소유 현황

순위	재벌명	광고대행사	창립연도	매출액	인원
1	삼성	제일기획	1973	165,444	492
2	럭키금성	엘지애드	1984	107,749	312
3	두산	오리콤	1979	106,000	309
4	롯데	대홍기획	1982	104,479	250
5	해태	코래드	1981	80,200	267
6	태평양	동방기획	1982	59,513	172
7	현대	금강기획	1983	46,869	158
8	한국화약	삼희기획	1983	39,700	145
1~8	소계			709,954	2,195
9~47	기타인정대행사			232,323	1,573
기타광고비				854,681	-
총광고비				1,564,635	-

(단위: 백만원, 명)

<출처: 임동욱, 1990, 137>

<표3—4> 기사면적 대 광고면적의 점유비율 변화추이

(단위 : %)

신문	면수	12년		16년		20년	
	항목	기사	광고	기사	광고	기사	광고
조선		55	45	55	45	51	49
한국		55	45	54	46	52	48
동아		57	43	57	43	52	48
중앙		54	46	52	48	51	49
평균		55	45	55	45	52	48

<출처 : 김기태, 1990, 134>

관계를 신문에 직접 반영하기도 했다(김주득, 1991, 7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년대 한국 언론의 광고수입의존도 심화는 언론의 내용이 광고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신문의 경우 보도 면과 광고 면의 비중변화다(김기태, 1990,134). <표3-4>에서와 같이 신문의 지면이 12, 16면에서 20면으로 늘어나면서 기사 면적 점유비율은 비율은 줄어들고 광고 면적 점유비율은 늘어난다. 신문의 경우 광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사들이 게재되고 생활정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신문이 매주 한번꼴로 백화점 관련기사, 영화평, 책안내 등을 싣는데 이 또한 광고와 무관치 않다. 방송도 오락, 퀴즈 등의 프로그램에서 협찬 이라는 이름으로 간접광고가 이뤄졌다. 광고주에 의한 이같은 언론통제는 언론의 자정을 주장하는 대안매체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3) 언론기업의 모순 심화와 민주화 운동

80년대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활발히 전개된 민주화 운동과 함께 등장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나팔수'노릇을 하는 기존언론에 대한 배척과 함께 언론자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그 실천운동이다. 5공화국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시민사회의 언론운동은 KBS시청료 거부 운동이었다. 이같은 시민사회의 기존언론에 대한 압박은 자연 기존언론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젊은 언론인들의 자성운동이 KBS, MBC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

정치적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운동세력의 지향성과 그 이념을 알리고 동조세력을 모으기 위한 동원화를 위해 언론은 필수적이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민주주의 억압 및 언론탄압은 동시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대항운동도 정치적 민주주의 쟁취, 언론민주화 쟁취를 목표로 한 부문 운동

으로 시작되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통성 없는 비민주적 공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실천할 제도의 확립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언론자유 운동은 당시 기존언론을 제도언론으로 규정짓고 가려진 진실을 알리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비합법적 매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배포하는 방식을 취했다. 6월항쟁을 이끈 조직의 기반은 재야민중운동세력과 온건시민단체, 보수야당이 연대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연합체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다.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재야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이었던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이 주축을 이루었다. 국민운동본부는 1987년 5월 출범하면서 시·도 본부와 시·군 구 지부 등 지역조직을 만들었다(조대엽, 1999, 126). 이같은 운동은 기존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말지와 같은 비합법적 매체가 그 실상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기존 언론은 권력의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부정적, 또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식의 적대적 논조로 보도했다. 이처럼 기존 언론과 국가권력이 일체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자 민주화 운동세력은 자생적으로 자신들을 홍보선전 매체를 만들었다. 이를 당시에는 민중언론이라 칭했는데, 강태완은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당시 제도언론이라고 비판받던 기존언론이 지닌 반민주, 반민중적 성격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집해 확립시킨 계층별 매체다. 또한 제도언론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자유언론 또는 소규모 커뮤니케이션 매체 등으로 불리는 언론적 현상으로 여기서는 민중언론이란 용어는 주체적인 민중을 강조하는 말이고, 자유언론은 민중언론의 목적을, 그리고 소규모 커뮤니케이션 매체란 표현은 매체의 특성을 강조한 말이다”(강태완, 1985, 102). 이같은 민중언론은 당시 독점자본과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존언론에 세뇌되어 주체성을 상실한 일반대중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 비민주적 제도, 왜곡된 문화형태 등을 정확히 인식시켜

왜곡된 의식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사회로의 전위 역할을 담당케 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적 언론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그 배포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그것을 발행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른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사회각계각층의 정보를 담는 대안매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5공화국의 언론규제는 행정적으로 허용된 공식매체외에는 실정법으로 비합법적 매체로 규정해 그 발행과 배포를 억제했기 때문에 민중매체의 존재는 한겨레신문과 같은 대안매체가 등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단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재야지식인들의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등장한 민중언론은 신문, 소책자, 자료집, 유인물, 대자보 등의 형태를 취했으며 제도권 미디어에 대항하여 사회적 모순구조를 폭로, 비판하고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 지향성을 지녔다(정진홍, 1989, 83-86).

민중언론가운데 노동자 언론활동이 가장 활발했는 바, 민주노동, 청계노보, 노동청년, 서노련신문, 원풍소식, 근로자 함성 등이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발간되었다(김대호, 1986, 69). 노동자복지협의회 기관지 민주노동은 창간호에서 노동언론의 역할은 “노동문제 전반의 ‘진실한’ 보도와 해설, 평론을 하며, 노동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유도하여 노동자적 의식을 고양하고 확산하는데 있게된다”고 밝혔다(민주노동 1호, 1984년4월25일, 2쪽). 또한 노동자 신문의 창간호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 정리하여 현장노동자로 하여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서 올바른 사회의식,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노동자신문, 1985년2월25일).

농민운동 단체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로 전국적인 분회를 가지고 있는 이들 단체는 각각 ‘농민의 소리’와

‘합성’이라는 매체를 통해 농축산물 수입반대, 농산물 가격보장, 종가부채 탕감운동을 펼치고 농촌사회의 제 모순에 대한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실천사업을 전개했다(한은경, 1987, 82). 여성운동, 재야운동, 청년운동의 사회운동은 그 대상을 일반 민중을 상대로 하여, 사회의 각 계층을 망라한 모든 계층의 소식을 전했다. 이는 다른 민중언론이 그 발행 주체들의 권익옹호만을 위한 매체인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

(2) 시민사회의 언론운동 - KBS시청료 거부운동

신군부는 언론 통제합 등으로 언론을 장악했으나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언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왜곡보도까지 일삼았다. 방송매체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했으며, 85년 12대 총선에서 방송의 불공정 보도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KBS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김민환, 한국언론사, 1996, 551).

기존언론이 5공화국의 정통성 없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팔수 노릇을 하는데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은 8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산발적이었으나 해직언론인들이 만든 대항매체 말 지가 비합법적으로 발간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되면서 KBS시청료 거부 운동 등이 다각적으로 전개되는 등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정연우, 1990, 253-254). 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기존 언론에 대한 대항운동은 KBS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었다. 1986년 1월20일 KNCC에서 KBS TV 시청료거부범국민운동본부가 창설되어 종교단체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 운동은 당시 동아일보 등 일부 기존 신문매체의 지지를 받았는데 전국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연결된 것은 87년 민주화 투쟁에서 민주세력의 조직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KBS시청료 거부운동은 1985년부터 3년간 애곡·편파보도로 비판받던 공

영방송에 대한 전국적 단위의 저항이었고 5공화국 언론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다(김민남 등, 1993, 399 - 341). 5공화국은 방송을 홍보기구로 전략 시켰는 바, 80년대 KBS의 프로그램에 그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즉 학생들을 용공, 좌경, 폭력과 극렬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뿌리뽑기 위해 학원안정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방영된 85년 8월6일 보도기획프로그램 학원안정법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86년 12월 10일부터 6회에 걸쳐 방영된 TV특강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반국가적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밤 9시 저녁 뉴스때 9시 시보가 올리자마자 진행 앵커는 뉴스 머리를 “전두환 대통령은...”라고 시작해 항간에서는 이를 ‘땡전 뉴스’라고 비아냥댔 정도였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농촌실정을 왜곡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북완주군 고산면 고산부락 가톨릭농민회와 고산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85년 4월28일 ‘TV시청료는 민정당과 정부만 내라’는 제목의 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이처럼 지역 농민들에 의해 시작된 시청료 거부운동은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86년 1월20일 시청료거부운동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이어 9월15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신한민주당,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켰다. 시청료 거부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88년 시청료 징수액은 785억원 이었는데 이는 84년의 1148억원에 비해 매우 낮았다. KBS시청료 거부운동은 당시 방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컸으며 방송민주화운동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KBS시청료거부운동은 90년 이후 YMCA, YWCA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KNCC언론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언론감시와 비판 운동의 전개의 추동력이 되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87년 6월 항쟁이후 언론사 내부에서도 언론사 내부 부조리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고승우, 1989, 195 - 198). MBC의 경우 보도국 기자들은 87년 9월 발표한 '공정보도와 뉴스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외부 압력과 경영진의 간섭 등으로 MBC 불공정 보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불공정 보도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즉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경우가 4건, 경영진의 반언론적 태도에 의한 압력과 간섭의 경우가 10건이었다는 것이다. KBS 기자들은 1987년 11월 KBS 경영진이 6·29선언이후 노태우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과 방송계획을 수립해 편파·왜곡보도를 은폐하는 고도의 기만성을 발휘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월간조선과 신동아 출판국 기자들은 87년 11월 안전기획부가 이후락씨의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개재하지 못하도록 두 회사에 강요하면서 인쇄소에 요원을 파견해 잡지발간을 중단시킨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민사회의 기존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존언론 기자들은 권력과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으로 정상적인 언론기능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는 기존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언론자본의 내부 검열 메커니즘의 하나로 강조된 위계질서와 기자들의 셀러리맨 화를 둘러싼 언론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즉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되기 위해서 편집권²²⁾·편성권이 보도기능을 담당하는 편집국이나 보도국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해식, 1994, 235).

22) 편집권에 대한 논의의 주체는 1960년대의 경우 편집국장, 편집국의 각 부장과 편집인 출신 논설위원들이었고, 1970년대는 기자협회, 그리고 1980년대는 노조로 변화되었다. 이는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가 일체감을 가지고 연대를 형성했던 시대에서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 사이가 갈등관계로 옮겨가고 마침내 편집진과 기자의 관계도 대립으로 진전된 것을 나타낸다(유재천, 1988, 155-156)

제 4장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과정

제 1절 창간과정에서의 집합행동의 기회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은 언론민주화운동과 창간 주체세력의 창간기금이라는 자원동원, 신문사 조직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처럼 단계별로 이뤄진 집합행동분석은 C. Tilly가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approach)에서 제시한 집합행동의 기회 개념을 적용했다. 집합행동의 기회는 경쟁자(contender)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행동(joint action)을 취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며, 이 분석 틀은 운동조직과 통제기관도 포함하는 정치과정 전체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분석시각으로 한겨레신문 창간과 그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겨레신문의 창간과정이 이뤄지는 집합행동의 기회를 동원모델의 주요변인인 억압/촉진, 권력, 기회/위협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1) 억압/촉진

억압/촉진은 다른 집단과의 상호행위의 결과로 경쟁자가 집합행위에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억압은 다른 집단이 권력경쟁자의 집합행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집단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행위는 촉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창간추진 과정에서 창간운동주체에 대립적인 방향에 위치한 집단은 국가 또는 권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시 국가 또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나 행정집행 행위는 새 신문 창간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창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은 창간일자가 2개월 정도 연기되어 그 비용이 증대되었다. 당시 새 신문사 창간을 규제

한 언론관련법과 행정당국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규제를 보면, 한겨레신문 창간을 추진할 당시 신문 발행에 대한 정부의 허가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5공화국보다 완화되었지만 많은 독소 조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5공화국의 통치에 악용된 언론기본법은 직접 발행의 자유를 억제할 것을 의도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 즉 등록과 시설 기준, 등록취소 등 허가제나 다름없는 조항들이 들어 있었지만 6월 항쟁이후 폐기되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창간에 즈음해 20여개의 신문이 새로 나온다 해서 발행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팽원순 교수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한겨레신문 소식8호 1988년 3월23일) - 발행의 자유를 억제해 온 법과 행정권에 의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언론기본법의 대체법으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등록이나 등록 취소, 시설기준 등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할 수 없고 등록 없이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기준도 일간신문이면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등록 취소도 취소의 경우 그 결정을 법원의 심판에 맡기기로 한 것만 달라지고 발행정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화공보부장관이 3개월내지 6개월간에 걸쳐 그의 재량으로 정기간행물의 정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행정권에 의한 강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88년 이전 20여년 동안 새로운 신문의 발행이 거의 없을 만큼 위력적이었다. 허가제를 규정한 새 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행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도 마땅히 근본적으로 고쳐야한다.

둘째, 행정집행 지연이다. 이는 새 신문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일간신문 등록 지연이 대표적이다. 한겨레신문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 석 달 만에야

발급되었는데 통상 신청 1주일만에 발급하던 관례나 새 신문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발급이 지연된 것은 새 신문 창간 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였다. 새 신문 창간사무국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운전기 등 각종 기자재의 구매 계약, 지사와 지국 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세무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홍보용 TV광고방송 불허조치와 함께 새 신문 창간준비 과정에서 창간주체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겨레신문 창간주체들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기 등 법정시설 요건을 갖추고 문공부에 일간신문 등록 신청서를 접수시켜 약 3개월만에 등록증을 교부받기 까지 송건호 한겨레신문 발행인은 기자 회견 2번, 문화공보부 장관을 3차례 방문했고 한겨레신문 기자, 사원은 2차례에 걸친 시위를 벌여야 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7조3항은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공부 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문공부 장관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켰다. 등록필증 교부가 지연되면서 지사 보급소 계약을 하지 못하고 판매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연 새 신문의 창간은 당초 공약한 3월에서 5월로 늦어지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상과 같이 등록필증 등의 교부 지연 외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새 신문 창간을 억압 또는 축진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겨레신문 창간 사무실에 경찰이나 권력기관 등에서 한번도 그곳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고 창간사무실이 있던 건물 외벽에 창간을 알리는 큰 현수막을 거는 것도 경찰 등에게 제지당하지 않았다. 창간모금 단계에서는 국세청 등에서 기부행위 등의 법률 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수개 은행과 계약을 해 입금구좌를 소식지나 일반신문광고를 통해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모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식지를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했으나

경찰 제지 등의 불상사는 거의 없었다. 창간 사무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직·간접적인 제재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았고 사무실 통신도 표면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당시 야당의 지도자급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의식해 비공개리에 거액을 청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 같은 약속은 문민정부 출범 때까지 지켜졌다.

2) 권력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에서 집합행동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 권력(power)은 언론민주화운동이 국가와 정부 및 기존 언론으로 형성된 기존의 언론구조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창간주체는 권력의 획득을 통해 기존 권언관계 속에서 창간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창간을 가능케 한 권력의 획득은 사회운동세력의 민주언론운동에 대한 지지와 시민사회의 호응의 형식으로 가능했다. 창간주체세력은 새 신문이 진보적, 보수적인 사상적 색채를 띠지 않는 참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참된 신문은 다수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알리고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비판하는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운동세력과 시민사회의 지원을 획득했다. 한겨레신문 창간취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성명과 창간 기금 모금 협력 등으로 형성된 권력이 기존언론구조와의 상호관계에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외부의 지원과 홍보의 경우, 한겨레신문 창간에 대한 사회운동세력과 시민사회의 지지와 지원은 1987년 9월 새 신문 창간 발의자 총회가 열려 전국민적 참여의 주식공모를 통한 새 신문 창간을 다짐하는 발의문과 발의자 명단을 발표한 후 1988년 5월 창간호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되었다. 이어 10월30일 3,319명의 창간발기인들에 의해 창간발기인대회가 서울 명동 YWCA대강당에서 열려 새 신문 사업계획의 기본원칙을 민주주의의 실현, 분단의식 극복과 통일 지향 등으로 삼고 주요 사업으로 일간지 및 도서와 잡지 발행과 판매, 교육, 문화, 사회사업 등을 추진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발기인들을 대표하는 각계 대표 56인으로 창간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추진 현황 및 회사설립 계획에 대한 보고를 확정했다. 기존 언론이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을 외면하자 사회 지도층의 지지성명 등이 발표되었다.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원로 24명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학교수들이 새 신문 발의를 환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지지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새 신문의 창간 발기를 축하하고 범시민적으로 설립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조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지역 후원회를 이끄는 인사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일반시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어 기존 언론에 대한 부정과 함께 새 신문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새 신문창간사무국은 창립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13번의 기금 모금 광고를 기존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 광고 크기는 전면, 7단, 5단 등의 크기였는데 기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존 일간지들은 새 신문 창간 과정에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신문에 한겨레신문의 창간기금 모금 관련 광고를 유료로 실었다. 이는 광고 수입에만 의미를 두었을 뿐 자기 신문 독자들의 알 권리는 외면한 기존 언론의 비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에 난 한겨레신문 광고는 새 신문 창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외국 언론은 새 신문 발의자 총회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창간기금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적 호응이 적극적이라 이를 적극 보도했다. 주요 해외 통신사와 신문 및 TV들인 AP, 로이

터, AFP와 일본의 아사히신문, 프랑스의 리베라시옹, 서독의 타게스차이퉁,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과 미국의 KCBS(LA 지역 방송국), 벨기에 국영방송, 일본의 NHK, 주간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대만의 신신보 등이 한겨레신문의 창간준비 작업을 취재·보도했다. 이는 당시 한국 언론이 보도지침 등을 통해 권력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에 알려졌던 것과 무관치 않으며, 해외에서도 민주적인 새 신문 창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언론이 한국에서 새 언론의 창간에 비중을 두어 보도한다는 것은 기존언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창간주체의 홍보노력을 보면, 새 신문 창간준비사무국은 창간 준비 과정을 알리기 위해 1987년 10월 이후 13회에 걸쳐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 창간 기금 모금 상황과 유명인사의지지 선언, 시민 사회단체의 동조 등을 홍보했다. 이는 한겨레신문 창간의 필요성과 기존언론의 부적절성을 시민사회에 알린다는 적극적 행위였다. 이같은 새 신문 정체성과 창간과정에 대한 공표는 기존언론과 국가 및 정부가 형성해온 언론구조의 변혁을 촉구하면서 새 신문 창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작업이었다. 이같은 소식지 홍보와 함께 발의자와 창간위원, 사무국 요원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당시 사회운동으로 추진된 민주화 촉진과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이 시민사회의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간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지지확보 노력이다. 즉 새 신문은 12월 14일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 선임, 정관확정 등 법적인 요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새 신문은 1988년 1월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내고 사무직과 기자직, 제작 및 광고, 관리 부문 등의 사원을 공채하자 8천52명이 지원했다. 이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사회적 호응도가 매우 높았

던 것을 나타내며 당시 권언유착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새 신문의 편집관련 전략과 인력 충원 원칙, 자본과 편집과의 관련 등에 대한 뼈대는 한겨레신문 소식지 1호에 소개되어 사회적 검증은 시도했다. 이는 기존언론과의 차별성을 밝히는 것으로 새 신문 창간의 필요성을 시민사회를 향해 공개한 의미를 지닌다. 즉 새 신문은 민주주의적 기치와 정의를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민족통일의 지향에 편집의 역점을 두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만을 충실하게 보도하며 상업주의적, 선정적 편집 태도를 배격하고 보도할 가치가 있는 진실만을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보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또한 창간기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주주형식으로 모집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이 바로 서려면 정치 권력에서의 독립 못지 않게 대 자본에서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언론이 몇몇 특권층의 사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소식지 3호는 1987년 12월 창간정신을 구체화시킬 기본적인 편집방향과 편집국 구성, 지면 배정, 신문체제 등에 대해 최초로 공개했으며 이는 종래 국가와 정부가 언론을 종속적 위치로 전략시키고 언론이 경제적 이익을 반대급부로 보장받는데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를 지닌다. 새 신문은 창간을 앞둔 1988년 4월 한겨레신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확정 발표하면서 언론이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실보도와 비판적 기능이라는 언론 본연의 구실을 수행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제정, 채택한다고 밝혔다. 언론자유 수호, 사실과 진실의 보도책임, 언론인의 품위 등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윤리강령은 새 신문 조직원들이 시민사회를 향해 기존언론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내부의 윤리 규범이었다.

창간준비사무국은 1987년11월 창간기금 모금을 위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식모집에 들어가면서 창립 자본금으로 책정한 50억 원을 마련키 위해 1주당 액면 가격을 5천 원으로 하고, 새 신문의 편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출자 상한액이 창립자본금의 1%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창간 설립 기금은 새 신문 창간 발의한 해직, 전직, 현직 기자 2백여명이 1인당 50만원이상씩 낸 창간준비기금 1억여원, 한겨레신문 발기인으로 참여한 각계인사 3천2백여명과 일반주주가 납부 또는 청약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설립 기금, 일반 시민들의 투자 분으로 구성되었다. 새 신문 주식 소유자들의 특징은 이들이 돈 있는 기업인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이며 이들이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언론사의 창간에 직접 참여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존언론이 소수 가족들이 대주주로 구성된 족벌언론이거나 대자본 또는 정부 소유의 언론이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해방이후 지속된 언론사 소유구조의 형태와는 다른, 세계 언론사에 그 유례가 없는 소유 구조의 신문이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것이다.

3) 기회/위협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은 기존의 권언체계(權言體系)와의 상호관계의 과정이고, 그것은 한쪽의 이해는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새 신문의 창간과정에서 기회/위협은, 한겨레신문 창간주체세력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가와 정부, 기존언론을 포함한 권언체계의 기득권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한겨레신문 창간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상황요인들은 다수가 있겠으나 새 신문을 창간하겠다는 사회적인 약속과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의 구조, 신문편집과 제작방식, 조직체의 윤리관 제시 등이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족벌언론 또는 재벌언론의 소유구조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한 보도경향, 촌지수수의 만연현상 등은 새 신문이 시민사회에 약속한 정체성과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자본의 구조를 보면, 한겨레신문이 국민주주 형식으로 주식은 1주당 5천 원, 주주 한 사람의 출자상한은 창립자본금 50억 원의 1% 이내로 제한키로 한 것은 정치권력과 특정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한겨레신문의 소유 구조적 특징은 분명 기존언론의 그것과 구별된다. 1989년 국회 문공위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경우 재단법인 인촌 기념회가 23.8%, 김상만 씨가 15.3%, 김씨의 아들 김병건 씨가 6.09% 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는 방우영씨가 45.0%, 방씨의 형인 방일영씨가 4.22%, 방일영씨의 아들 방상훈씨와 방영훈씨가 각각 30.0%와 10.6%씩을 소유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이건희씨가 21.5%, 이씨의 아버지 고 이병철 씨가 5.3%, 제일제당이 22.0%, 제일모직이 11.0%, 삼성물산이 5.1%, 전주제지가 4.2%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일보의 경우는 장강재 씨가 57.5%, 장씨의 동생 4명이 각각 10.0% 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성격은 소유구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자본가가 대주주인 경우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개인 소유의 신문은 그 개인의 입장을 반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언론사 소유형태는 거의 예외 없이 소수의 손에 맡겨져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가족이나 기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언론사의 최대 관심사는 소유주의 이해관계였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의 구조적 특징은 이 신문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보다 독립적인 언론의 기능을 할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설립기금을 보내온 사람들의 분포는 매우 다양해 적게는 1

만원(2주)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직업별 분포는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온 인사는 물론 의사, 약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나 회사원, 공무원 등이 포함되고 대학생, 노동자, 농민 등 매우 광범위했다. 직장, 천주교, 불교, 대학총학생회,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모금이 이뤄졌으며 일부 노동조합 등에서는 1인당 1주 또는 2주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금한 뒤 대표자 명의로 설립기금을 납부는 경우 신문사가 설립 된 뒤 발행되는 주식은 그들의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창간기금 주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주는 2만7천52명으로, 주주들을 납입금액별로 보면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9천6백44명(35.6%)으로 가장 많고 1백만원 이상 낸 주주는 1천3백68명(5.1%)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4.6%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26.4%로 2·30대가 전체의 61%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2천2백12명으로 8.2%였다. 주주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만5천1백97명(56.2%), 경기도가 9.6%, 경남이 5.4%, 부산 4.7%, 광주 3.8%, 전북 3.7%, 전북 2.9%, 인천 2.8%, 경북과 대구가 각각 2.6%, 충남이 2.5%, 강원 1.4%, 충북 1.3%, 제주 0.5%이었다. 한편 한겨레신문이 창간기금 모금 이후 추가로 자본금을 증액한 이후 전체주주 6만1천616명(2002년 2월 현재)에 대한 통계자료 가운데 연령별 비율을 보면 창간기금 주주들의 분포와는 달리 30 ~ 50대까지의 분포가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간기금에 분포빈도가 가장 높았던 20대는 4.3%에 불과했고 20세 미만도 4.9%로 창간기금 주주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주주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65%인 4만 68명, 여자가 34.6%인 2만1천322명, 성별이 분간되지 않는 인원이 0.4%인 226명이다.

새 신문의 편집과 제작의 기본적인 성격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보도지침과 같은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해 사실과 진실만을 알리는 것

이 다. 새 신문의 독자는 우리 사회의 양식 있고 땀흘리며 일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설정해 대중적 정론지를 지향한다. 기존 신문들은 상업지에 가까울 뿐 취재방향도 대동소이하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겹쳐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두드러진다. 새 신문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온전하게 새로운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언론의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의 가치 척도, 취재원, 지면구성 등 모든 것에 대한 발상이 새로워져야 한다. 즉 새 신문은 기존신문과 같이 정부를 포함한 관변 기사를 해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한다. 새 신문은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굴해 쟁점을 만들어 가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선도한다는 취재의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취재원, 취재대상을 폭넓게 개발해 다변화 시켜 나갈 것이다. 새 신문은 정보 전달에 역점을 두어 가능한 제목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 기사를 충실히 신도록 노력한다. 또한 메시지 없는 사진을 가능한 줄이고 대신 만화나 판화 등 민주화 운동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표현수단의 활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편집국 구성은 기존 신문이 축적해온 경험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새 신문에서 채용하지만 편집국 내부의 민주화가 매우 필요하다. 새 신문은 기존 신문처럼 정치, 경제, 국제정치, 여성, 가정, 생활경제, 문화와 같은 뉴스를 다루는 부서와 함께 독자부를 따로 두어 여론을 수렴하고 별도의 심층취재 부서를 두는 방안도 고려 한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여론매체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할 상설부서가 필요하다. 독자의 반론 권만이 아니라 그 의사까지 지면에 보장할 독자부의 기능도 강화되고 외부 필진도 이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발의자, 발기인, 설립회원들은 다른 신문에 없는 귀한 자산으로 각 분야의 필진과 적극적인 독자, 모니터가 이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새 신문은 창간호에 한글 가로쓰기를 한다고 공개했으며 그 원칙을 실천

했다.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가로쓰기는 반드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창간주체들은 가로쓰기가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물의 대부분에 채택되어 있고, 20 - 30대 젊은 층에게는 가로쓰기가 훨씬 익숙하고 편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기존일간지들은 모두 세로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한민족에 대한 문화적 지배의 수단으로 허용했던 한글신문의 체제를 답습한 것이면서 해방이후 전혀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일제잔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일간지들은 가로쓰기에 대해 읽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적이었으나 새 신문 창간이후 수년이 지나자 모두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조직체의 윤리관으로서 한겨레신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은 새 신문이 언론으로써 그 시대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진실보도와 비판적 기능이라는 언론 본연의 구실을 수행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윤리강령은 언론자유 수호, 사실과 진실의 보도책임, 언론인의 품위 등 14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새 신문사 임직원은 이 강령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호는 한겨레신문사 전 사원의 의무임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겨레신문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리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마련했는데, 이 실천요강은 언론자유 수호와 진실보도를 위해 편집권 독립과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경영권d;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 언론활동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연행 당했을 때 그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 처한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실천요강은 이어 취재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 무료출장이나 유람여행에 응하지 않으며 취재편의

를 위해 선의로 관람표가 제공된 경우가 아니고는 스포츠 경기나 음악회 영화, 연극 등의 공연에 무료로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제 2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언론 민주화 및 대안언론 운동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자들은 강조한다. 80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갈등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 경제민주화였고 당시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언론민주화운동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기존언론이 시민사회의 민주화 추진운동 등의 움직임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운동세력들은 기존언론의 그같은 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들의 투쟁소식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민중언론매체를 만들어서 선전홍보에 활용했다. 그같은 활동은 노동자, 농민운동 단체들의 경우 매우 활발했다. 언론민주화운동세력은 80년대 중반 조직체를 발족시켜 말지라는 대중매체를 만들어 시민사회를 상대로 배포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보도지침'을 폭로해 6월항쟁의 기폭제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6·29이후 언론민주화운동세력은 새 신문창간운동을 시작했으며 말지가 그 창간초기 단계를 선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 언론민주화 및 대안언론 운동

5공화국의 독제와 언론탄압 속에 자생적으로 등장한 민중언론운동은 제도권 미디어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같은 반민중적인 매체를 진정한 언론매체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도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당시 민중언론은 전문성의 결여, 재정적인 빈약함 및 특정계급에 대한 독단적인 옹호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빈약한 재정형편과 열악한 제작환경 속에서, 특정계층 또는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이들 민중매체는 풍부한 자본력과 인적자원 그리고 최신 기법으로 생산되는 기존의 제도권미디어에 대항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시민사회 민주화 운동집단과 언론민주화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 사회운동의 생산성은 사회운동에 호의적인 합법적 매체가 등장하면 급속히 높아질 것이며, 기존언론의 모순을 인식치 못하는 대중의 각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다. 기존언론매체에 대한 대안은 기존언론에서 해직된 전직 언론인과 80년대 들어 활발한 출판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활력소를 불어넣었던 출판계에서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표출되었다. 80년대 5공화국의 탄압 공간 속에서 많은 민주화운동 조직체들은 자신들의 운동이념과 방법론을 알리거나 권력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배포했다. 이 같은 민주세력의 언론운동을 저항언론(resistance communication), 지하언론(clandestine or underground communication), 대안언론(alternative communication), 민중언론, 민주언론 등으로 불렀다. 이처럼 다양한 호칭은 당시 언론운동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안언론은 언론노동자들이 매체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편집, 제작, 편성과 영업을 하는 매체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유럽 등지에서 이를 위한 실천노력이 결실을 맺었다(정용준, 1990, 300). 그 성격상 대안언론의 범주에 속하는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주체들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문화운동, 언론운동 등에 동참

하던 범민주화 세력이었다. 이들은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쌓았던 도덕성과 선명성을 내세워 국민들의 한겨레신문 창간 동참을 설득했다. 새신문의 창간은 당시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일정규모의 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창간자금이 필요했다. 이 같은 법률적 장치는 권력이 신규언론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어 벽과 같은 것이었고, 재야운동세력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일간지의 소유와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6·29를 통한 직선제 개헌 쟁취에 이어 이뤄진 대통령 선거전의 기간동안 당시까지 사회적인 공개 논의 또는 보도가 금지되었던 5공화국의 비리, 폭거에 대한 폭로전이 재야 언론에 의해 이뤄지면서 기존언론의 침묵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켰다. 즉 당시 말 지와 같은 언론운동매체는 기존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거나 침묵 또는 왜곡하던 광주항쟁 진상, 부천서 성 고문 사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운동에 대한 진상,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의혹 등을 보도함으로써 한겨레신문 창간을 가능케 할 사회적 토대를 쌓았다.

(1)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와 민언협 결성

전두환 정권은 전사회적으로 통제와 억압기조를 유지했지만 그 같은 독재는 대내외적인 도전에 시달리게 되었다. 학생과 재야, 민중세력의 저항운동의 거세지면서 사회 각 부문의 자율화 요구가 뒤따랐다. 경제통제에 대한 국제무역기구 통상강대국들의 압박도 가중되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구속된 학생과 민주인사의 수도 전 정권의 비민주성을 대내외적으로 폭로하는 증거가 되었고, 전 정권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1983년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해, 정치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구속학생 및 민주인사들이 석방되었다. 재야와 학생 민주화세력은 그 같은 호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재야, 청년, 노동, 농민 등 각 부분이 조직결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인 민주통일 민중

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김태홍, 1997, 185-220).

재야 공개기구가 결성되면서 제도언론을 견제하고 민주언론을 구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공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언론운동을 담당할 특수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해직언론인들로서, 1975년 언론자유를 외치다 언론현장에서 쫓겨난 동아·조선 양 투위의 해직기자들이 해직언론인 1세대이다. 그러나 해직 이후 수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양 투위만으로는 새로운 언론운동을 담당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언론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론운동 주도 세력의 형성이 요구되었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1천여명이 해직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씨는 언론인을 대거 언론현장에서 추방했는데 각 사에서 언론자유운동을 주도한 해직기자들이 1984년 3월,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창립총회의 성명서를 통해 당시 언론에 대해 “물샬틈 없는 언론탄압은 제도언론, 관제언론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 국민의 언론불신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력의 강압으로 설 땅을 빼앗긴 채 우리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민중의 목탁 이기 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홍보기구로 전략해 있다”고 주장했다(이태호, 1984, 13). 창립선언문은 또한 “민주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침해당한 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회복노력을 지지한다”, “부당해직된 언론인은 즉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결성과 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해직기자들은 김태홍, 정남기, 노향기, 정상모, 전진우, 김동호, 최형민, 정연수, 이원섭, 윤덕한, 박우정, 박성득, 홍수원, 이경일, 표완수, 고승우, 정동채, 백맹종, 현이섭, 이영일, 왕길남, 김상기, 이희찬 등 비교적 젊은 연배의 기자들이었다.

80년에 해직된 언론인들은 민주언론운동 협의회(이하 민언협) 결성의 또 다른 한 축이 되었다. 특히 80년에 해직된 언론인들은 동아·조선 양투위의 해직언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아 민언협 실무역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김태홍 사무국장은 물론 제2대 이후 계속 편집장을 맡았던 박우정 실행위원(전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홍수원(전 한겨레신문 편집부위원장), 총 진행을 책임졌던 박성득(전 한겨레신문 기획실장), 정상모 사무국장(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고승우 편집장(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등 주요 민언협 실무역량은 대부분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에서 배출되었다.

동아·조선 양 투위와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진보적 출판인 대표들은 1984년 12월 10일 서울 청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민언협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발기인 대회에서 해직언론인들과 진보적 출판인들은 민언협 결성을 통한 자유언론운동의 부활을 다짐했다. 그리고 9일만인 12월 19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트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민언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양투위와 19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해직언론인과 사회운동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 민언협은 당시의 상황을 ‘언론 부재의 캄캄한 암흑기’라고 전제하고 “오늘의 언론은 반민중적인 언론기관에 의해 독점되어 권력의 소리만 일방적으로 전달, 권력의 지배도구로 전락했다”고 제도언론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언협 창립선언문은 또 “외부 권력의 언론탄압으로부터 언론을 수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언론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언론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1975년과 80년 죽어 가는 언론을 되살리고자 민주언론을 외치며 싸우던 언론인들을 언론기관 스스로가 대거 수백 명씩이나 언론현장에서 추방한 언론에 의한 언론부정의 극치를 경험했다”고 폭로했다. 민언협 창립선언문은 제도언론을 언론의 자기 부정이 낳은 불행한 결과물로

규정하고 강제된 힘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지배하려는 것이 폭력이므로 당시의 제도언론은 가장 큰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표 4-1>.

<표 4-1> 민언협 임원명단

직 책	이 름	소 속
의 장	송 건 호	동아투위
공동대표	김 인 한 최 장 학 김 태 홍 김 승 균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출판인 대표
실행위원	윤 활 식 신 흥 범 이 부 영 성 한 표 노 향 기 박 우 정 이 호 응 김 도 연	동아투위 조선투위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출판인 출판인
감 사	이 경 일 나 병 식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출판인
사무국장	성 유 보	동아투위
간 사	원 인 옥	주부

<출처 : 김태홍, 1997, 200>

(2) 말지 창간과 '보도지침' 발간

민언협 창립은 우리 언론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언론의 민주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단체가 형성된 것이다. 민언협은 대안언론으로서의 새 언론창간, 민주운동세력과의 연대를 민주화와 통일에의 노력, 제도언론

개선투쟁 등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언론전문 운동단체로서의 자기 위치를 분명히 했다. 민언협은 또한 언론기본법의 폐지, 신문방송의 독과점과 카르텔의 해체, 신문방송의 편집권 독립, 신문사 소유구조 개선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민언협은 당시 기존언론을 제도언론으로 규정짓고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도언론의 특성은 반민주성 이다. 당시의 제도언론은 사물이나 사건을 전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각에서 보는 권위주의적 시각을 지녔다는 것이다. 다음, 제도언론의 반민주성이다. 제도언론은 사대성에 매몰되어 친일, 친미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통일문제도 주체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박 정권의 성장우선주의 정책은 대다수 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지만 제도언론은 그같은 민중적 진실을 외면했다. 1970년대부터 중요 이슈로 등장한 노동자 권익옹호문제,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투쟁, 도시빈민문제, 학생들의 정부비판문제를 제도언론은 외면하거나 왜곡했다. 제도언론이 언론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권력의 홍보에 앞장서자 민중들은 1985년 이후 6월항쟁기까지 자기 표현수단을 스스로 강구, 민중언론의 시대를 열었다. 각 분야의 국민들은 제도언론에 대항해 각기 자기 목소리를 담은 매체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매체들은 여러 대학 학보, 농민신문, 도시빈민신문, 서노련신문 등이었다. 민언협도 1985년 6월 말 지를 창간해 민족, 민주언론의 디딤돌이라는 부제를 단 채 출판했다. 말 지 창간호는 서점에 깔린 지 하루만에 재판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두었다. 전두환 정부와 제도언론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학생과 재야 등 민주화운동세력은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었다. 말 지 성공요인에 대한 민언협의 자체 분석은 아래와 같았다. 우선 말 지를 만드는 주체에 대한 신뢰감으로, 제도언론에 식상해 있던 국민들은 자유언론을 외치다 언론계에서 쫓겨난 해직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음으로는 해직언론

들의 전문성이다. 민중언론의 홍수시대를 맞고 있었지만 당시의 민중언론들은 객관적 언론매체라기보다 선전매체에 가까웠다. 그것들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 매체 작성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말지는 제도언론이 외면하거나 묵살한 진실을 보도했는데 그같은 뉴스는 도시빈민들의 고난과 철거반대 투쟁, 농민들의 소몰이 시위의 진실,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 지역 연대투쟁의 전말, 경제문제, 군비축소문제 등이었다. 민언협 조직이나 상부구조는 동아·조선 양 투위가 주로 이끌어갔지만 말지 제작을 하면서 일선에서 뛰기에는 연배가 조금 높았고 상대적으로 젊은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가 말지를 이끌어 갔다. 말지 창간제작진은 아래와 같다<표 4-2>.

<표 4-2> 말지 창간제작진

창간호	사무국장	성유보	
	편집장	故 김도연	출판인
	편집기자	최민희 우찬제	현 민언협 사무국장 문학평론가
	레이아웃	장진영 이화영	화가 아트디렉터
	영업	도서출판 공동체 대행	
제2호 '분단의 현실, 통일에의 꿈' 이후	사무국장	성유보	
	편집장	박우정 홍수원	한겨레신문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편집기자	최민희 정수웅 이화영 정시진	대학원 재학 정치인
	영업	김태홍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제 3, 4호는 제 2호와 같음.			

<출처 : 김태홍, 206>

1985년 12월 19일 언협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김태홍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회장이 제2대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김태홍 사무국장은 말 지를 격월간으로 정착시키고, 말 지 영업망을 전국적으로 구성해 말 지의 초석을 닦는 한편 민주화운동권과의 연대투쟁도 활발하게 벌여 나가 언협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다. 김태홍 사무국장 체제하의 언협 실무팀 명단은 다음과 같다<표 4-3>.

<표 4-3> 언협 실무팀 명단

제 5, 6, 7 호		제 8호 이후	
사무국장	김태홍	사무국장	김태홍
사무차장	이석원	사무차장	이석원
편집장	박우정 홍수원	편집장	박우정 홍수원
편집기자	최민희 정수용 정시진 김태광	편집기자	최민희 김태광 이근영 한승동 권오상 정의길
영업부장	배시병		

<출처 : 김태홍, 1997, 207>

1986년 9월 6일 민언협이 말 지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을 발간하자 정부당국은 즉각적으로 김태홍 사무국장을 수배하는 한편, 보도지침 전달반을 구성하여 수사에 나섰다. 그해 12월 10일 김태홍 사무국장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민언협 신흥범 실행위원이 연행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씨가 또다시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당국은 언협과 말 지 편집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여 말 지 특집호를 비롯, 보관본들을 압수하는 한편 박우정·홍수원 편집장, 박성득 실행위원(이상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이석원 사무차장, 김도연 전 편집장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연행된 3명의 언론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자 언협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 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 협의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민중문화운동 협의회, 민주교육 실천협의회 등 문화 5단체, 민주화추진 협의회,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등 재야민주화 운동단체들이 민언협의 보도지침 폭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인의 언론이 구속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언론이 보호위원회, 국제출판 자유위원회, 미국·캐나다 신문협회, 바바라 복서 미하원 의원 등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1987년 5월에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현직기자들이 구속된 언론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 해 5월 31일 김태홍, 김주언, 신흥범 3인의 언론인은 가톨릭 자유언론상을 수상했고,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보도지침 폭로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선언했다. 6월 3일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태홍 사무국장에게 징역 19월에 집행유예 2년, 신흥범 씨에게 선고유예, 김주언 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3명의 언론인은 모두 석방되었다. 이후 보도지침 사건 관련공판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재판부는 1996년 보도지침 사건과 사건 관련 언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민언협은 보도지침 폭로를 통해 제도언론의 가면을 벗기고 권력과 언론의 야합고리를 잘라 냄으로써 제도언론에 대한 투쟁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후 민언협은 언론운동이 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언론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보도지침 폭로를 통해 민언협과 해직기저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는 더욱 굳어져 갔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5공 군부독재 체제에 대한 국

민들 저항과 민주화 요구는 6월 항쟁으로 폭발했다. 민언협의 말 지는 제도언론이 외면한 민중적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민주적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민중운동권과 재야 민주화운동권의 투쟁소식과 운동이론의 심화발전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사는 기층운동과 재야운동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 지가 6월 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 군부독재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민족적 실상을 폭로한 데 있다. 말 지는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을 비롯한 5공시절 각종 고문사건과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용감하게 보도한 유일한 잡지였고 말 지의 폭로를 통해 시민들은 군부독재의 실상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도지침의 폭로는 국민들에게 5공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반민주성을 전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항쟁 초기 제도언론은 전국민적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동아, 조선, 한국일보 모두 시위규모를 축소 보도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및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했다. 또한 시민들의 정당한 민주적 요구를 폭력난동으로 몰아붙였다. 민언협은 6월 항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또 하나의 특집호 말 소식지를 격주간으로 발행, 6월 항쟁 현장을 국민대중에게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후 6월 항쟁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타오르자 제도언론의 논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6월 항쟁의 직선제개헌은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게 된다. 제도언론의 논조가 바뀌어 가는 데에도 말 지가 일조 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보도지침 공판결과 김태홍 사무국장이 출소하자 민언협 사무국체제도 재정비되었다. 내외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재정비된 민언협과 말 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상임실행위원 :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 사무국장 : 김태홍 / 총무 : 최민희 / 말지 편집장 : 고승우, 편집팀 왕길남, 한승동, 김태광, 권오상, 정의길, 이근영, 윤부철 / 영업팀 부장 : 배시병

1987년 6·29선언으로 직선제개헌이 받아들여졌고 말 지는 그해 12월에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독재를 끝장내자는 민주세력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종래 격월간 발간에서 격주발간으로 발간주기를 대폭 축소했다. 당시 전국민적 관심사였던 민주후보 단일화 문제와 공명선거 감시운동 등을 유권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말 지 발간주기를 4분의 1로 줄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집팀의 부족한 일손을 80년 해직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메워나갔다. 이렇게 제작된 말 지는 전국 선거유세장 등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야권이 노태우 씨에게 대통령자리를 내주었지만 민주화 요구는 지속되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분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반민주악법이 개정되기 시작했다. 언론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새 언론창설을 제안했던 해직언론인들은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한겨레신문 창간으로 연결시켰다.

2) 새 언론 창간 필요성제기

민언협은 1985년 6월 말 지 창간호 제언 '새 언론 창설을 제안한다'를 통해 민언협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주, 민족, 민중언론의 창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말 지 제호가 <민주, 민족, 민중언론을 향한 디딤돌>로 결정된 것도 해직언론인들의 새 언론 창설의지의 한 표현이었다. 민언협은 말 지 창간호 제언을 통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민중언론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언론기관의 창설을 제안한다"고 전제하고 새 언론 창설제안의 이유를 "민중언론은 민주적, 민족적, 민중의 토대 위에서는 참다운 언론현실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현실적 조건과 제약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찾았다. 그래서 민언협은 "민중언론의 지향과 성과들을 올바르게 수렴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하는

진정하고도 창조적인 언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민언협은 새 언론기관의 소유구조에 대한 기본 골격도 제시하였다. 말지 창간호 제언은 "새 언론기관은 기존 언론기관이 소수 또는 개인의 언론 기업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주언론을 갈망하는 민중 스스로가 출자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움직이는 민중의 표현기관"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말지 14호(1987년 9월 28일)는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 행동인 창간발의자 총회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 언론운동 세력이 합법적 매체 창간 운동을 시작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다. 말지 14호 표지는 9월 23일 열린 새 신문 발의자 총회에서 송 건호 위원장이 많은 해직기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새 신문 창간 발의'라는 붓글씨를 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그 사진 밑에는 "언론의 자유없이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제도언론은 부활된 보도지침과 공권력의 강압적 규제속에 공허한 민주화를 즐기치게 외치고 있다...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불법적 탄압에 국민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새 신문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새 신문의 출현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해직 언론인과 현역 기자들이 착수한 새 신문 창간 작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쟁취되는 언론 자유를 실현하려는 도전과 희생의 첫 걸음이라 하겠다"는 글을 실었다. 이는 공개적으로 말지 독자 등에게 한겨레신문 창간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말지 14호는 이 같은 표지와 함께 '우리는 새 신문을 창간코자 한다'는 제언과 전·현직 기자 196명이 새 신문 발의자 총회 개최에 대한 기사 등을 실었다. 말지 14호의 제언은 기존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민주 언론의 창설에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각 분야의 동참과 협조를 요망했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주화를 추진하는 이 마당에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언

론의 자유요, 제 모습을 갖춘 언론의 출현이다. 언론의 민주화는 언론의 자유이며, 언론의 자유는 곧 발행의 자유이다. 언론의 자유는 만인의 것이고, 누구나 인쇄할 수 있는 것이 당위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는 민주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기능을 살려 본격적인 언론 매체를 창설코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의 사명임을 확신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각 분야 민주인사의 동참과 협조가 요망된다. 이같은 기사는 일부 해직기자들이 7월 중순 송건호 말지 발행인을 방문해 새 신문 창간작업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후 그 문제가 언협실행위원회에 부쳐져 '새 언론 창설연구위'를 구성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말지 17호(1987년 11월20일)는 그해 10월30일 3,319명의 창간발기인들에 서울 명동 YWCA대강당에서 열린 창간발기인대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즉 이날 대회에서는 채택된 새 신문의 사업계획과 창간발기인 명단을 실었다.

말지 20호(1988년 2월1일)는 '한겨레신문 창간작업 순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신문 주식회사 설립과 편집진용 구성 운전기 구입 소식 등을 전했다. 말지 19호 62쪽에는 송건호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의 '말지 독자께 드리는 말씀'을 실었다. 말지 22호(1988년4월1일)은 한겨레신문 발행인 송건호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말지는 새 신문 창간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송 씨가 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설이래 88년 1월까지 협의회의 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제 3절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

새 신문 창간운동은 조직화, 동원화, 제도화 3단계로 나눠 기술한다.

1)조직화

사회운동에서 조직화는 그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인의 하나다. 조직화 초기 단계는 제도권 밖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위세가 크지 못하지만 그 조직이 내세운 이념과 방향성 등이 강한 대중 유인력을 가질 때 많은 동조 세력을 얻어 그 위력이 강해진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금기시 되던 언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간 업무를 직접 추진할 내부 조직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거나 동조적이던 시민사회 지도층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 같은 전략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창간 발기 추진 위원회, 창간발기인 대회 등을 구체화 시키고 그 움직임을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했다.

(1) 창간 발기 추진위원회

6·29선언에 따른 정치적 제도의 변경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75년 언론자유를 외치다 쫓겨난 해직기자들과 80년 언론통폐합조치를 역시 일터를 빼앗긴 해직기자들은 간간이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신문을 만들 필요성을 논의해 왔었다. 이는 당시 민주화 추진 세력의 유일한 언론로 자리잡은 말 지라는 부정기적 간행물만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로 역할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부정기적 간행물이 아닌 정기간행물, 특히 일간지가 최적의 민주화 추진수단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민주화운동을 위해 일간지라는 매체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었다. 이는 당연히 당시 비민주적 정부가 행사하는 억제력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집권층은 민주적 매체가 출현할 경우 민주화운동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판단해 한겨레신문과 같은 매체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같은 노력의 하나는 법률적으로 일간지 등록의 절차를 어렵게 만들거나 필요한 자금의 조성에 제동을 거는 식으로 나타났다. 그 같은 힘 겨루기

가 계속되던 중 6월 항쟁의 거센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고, 7월초 해직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 국민이 한 주씩 갖는 국민주 캠페인을 벌여 회사 설립 자금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해직기자들은 7월 중순 송건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장. 현 한겨레신문 발행인)씨를 찾아가 새 신문 창간작업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언협실행위원회에 부쳐진 끝에 이병주(전 동아투위 위원장. 현 한겨레신문 상추)·정태기(전 조선투위위원장. 현 한겨레신문 상무)·김태홍(당시 언협사무국장. 현 한겨레신문 이사)씨로 하여금 ‘새 언론 창설연구위’를 구성토록 결정했다. 여기서 ‘민중신문(가칭) 창간을 위한 시안’이 나오고, 이것이 ‘국민신문’으로 바뀐 뒤 다시 ‘새 신문’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 시안은 새로운 신문이 띠게 될 형태로 국민적 참여, 편집권 독립, 한글 가로쓰기, 독자의 반론권 보장 등을 들고 있다. 그해 9월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에 50평짜리 창간사무국이 들어섰다. 이어 창간발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송건화)가 1백 96명의 전·현직기자들에 의해 결성됐고, 1인당 50 ~ 1백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창간 발의기금을 내고 창간발의 동의서에 서명했다. 9월2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빌딩 602호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새 신문 창간발의자 총회가 열렸다. 해직언론인과 현직기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키 위해 진실과 용기, 긍지를 바탕으로 전국민적 참여의 주식공모를 통한 새 신문 창간을 다짐하는 발의문과 발의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총회는 새 신문 발의문을 통해 새 신문 창간의 방향성 등과 관련해 “새 신문에 대한 어떤 세력의 간섭과 폭력도 용납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모든 가치의 온전한 실천,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 분단의식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지향을 최대 이념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치권력, 대자본, 광고주로부터의 독립을 확고히 할 제도적 장치와 경

영·편집진의 혁신적 구성 방침을 정한다. 국민적 자본 참여를 통한 편집권 독립실현, 선정주의 배격, 광고지면의 정보화 지향,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는 주주 한사람이 출자액을 창립자본금 50억원의 1%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발의자 총회 바로 다음날 창간발의준비위는 창간발기추진위원회로 개편됐고 이어 대규모 발기인단 구성에 들어갔다. 창간 발기추진위원회는 새 신문 창간 작업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9월23일 열린 발의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창간 준비작업에 대한 종합기획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했다. 창간 발기위원회 중 매일 사무국에 나올 수 있는 위원 10명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매일 상오 10시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임위원은 임 재경, 강 정문, 권 근술, 김 태홍, 신 흥범, 이 병주, 이 원섭, 정 태기, 조 성숙, 홍 수원이었다.

10월 1일 위원회는 새 신문 창간 준비 사무국 요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정 태기 (국장), 홍 수원(사무 차장, 기획 조정), 이 원섭(대변인, 홍보, 섭외), 안 정숙(경리), 현 이섭(총무), 이 병효(기획, 조정), 이 상현(홍보, 섭외), 신 동준(발기 대책), 김 현대(발기 대책), 조 병욱(서무), 박 옥숙(서무).

10월 2일 열린 회의에서는 경상비 예산 승인, 제호 검토 등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위원회(위원 : 이병주, 이경일, 상한표)를 구성했는데 재정위원회는 납입금 현황 파악 및 회계 감사 등을 맡았다. 새 신문의 제호를 발기인 대회 전까지 결정키로 하고, 10월 16일까지 공모를 했다. 제호를 공모하기 전까지 유력한 제호는 독립신문, 민주신문, 자주민보 등이었다.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새 신문의 제호를 ‘한겨레신문’으로 결정했다. 공모된 제호는 한겨레신문, 민주신문, 자주민보, 독립신문 등으로 압축되었

고, 위원회는 발기인들과 청장년층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겨레신문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호 도안은 유연복씨의 목판화 '백두산천지'를 배경그림으로 하고 '오륜행실도'의 글씨를 조합시켜 최종결정을 보았다.

위원회는 발기인 선언대회가 끝난 뒤 시작될 국민적인 모금에 '주주모집 후원회'를 결성해 주주모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즉 발기선언대회가 끝나면 발의자와 발기인이 1차로 후원인회의 구성원이 되어 각자 5명의 후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5명의 후원인을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2) 창간발기인대회

87년 10월30일 3,319명의 창간발기인들에 의해 창간발기인대회가 서울 명동 YWCA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새 신문의 사업계획의 기본원칙을 민주주의의 실현, 분단의식 극복과 통일 지향 등으로 삼고 주요 사업으로 일간지 및 도서와 잡지 발행과 판매, 교육, 문화, 사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 신문은 현 언론산업의 낙후성 극복과 대중정보 시장의 수요공급체제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창간을 준비중인 일간지, 일요판 신문, 월간지의 편집과 제작 방침을 확정했다. 일간지는 전국 종합지 석간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조·석간을 지향하며 주 72면 (현 일간지 크기), 1일 3판으로 발행한다. 일요판 신문은 일반 주간지 성격으로 일간지 크기의 36면으로 하고 월간지는 시사 종합지 국판 320면을 목표로 한다. 이같은 간행물의 편집 원칙은 제도언론의 타성적 편집 태도와 획일주의를 극복, 취재원을 권력기구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이동하고 가로 쓰기, 독자의 반론권 보장에 두기로 했다. 또한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과 편집자의 특권 의식과 독단주의 배격에 주력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기사만 중점, 심층 보도하기로 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업계획은 새 신문의 총체적 경영 전략

의 성격을 띠고 있다(말지 17호 1987년 11월20일).

한편 홍성우 변호사는 창간 발기인대회에서 발기인단을 대표해 “오늘의 언론은 몇 사람의 사유물이 되거나 권력에 예속된 제도 언론으로 전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참여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문의 창간을 공식 선언한다. 새 신문의 출범은 이 땅에 언론매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르고 용기 있는 언론이 없기 때문이다”는 요지의 발언을 통해 새 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한겨레신문 소식 2호, 1987년 11월24일). 이날 대회에서 박형규 목사, 변형운 교수, 송월주 스님, 문익환 민통련 의장 등이 축사를 했다. 대회장에는 강정문 작사, 김도향 작곡의 ‘한겨레신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한겨레신문 창간발기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발기인들을 대표하는 각계 대표 56인으로 ‘창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창간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이사진 후보를 선정·보고하고 회사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주요기구가 된다. 창간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계훈제 고은 김윤수 김승훈 김정환 김지길 김천주 문제인 변형운 서경원 성문 심성보 안평수 이기용 이돈명 이소선 이우정 이효재 조아라 조준희 차범석 천영세 최원식 팽원순 한승헌 한용희 홍성우 황인철(이상 각계 대표) 송건호 임재경 김인한 최장학 강정문 권근술 김명걸 김종철 김태홍 박우정 박화강 배동순 성유보 성한표 신흥범 안정숙 윤활식 이경일 이광우 이병주 이부영 이종욱 이원섭 정상모 정태기 조성숙 하봉룡 홍수원(이상 언론계). 창간위원회는 11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업무추진 현황 및 회사설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했다. 위원회는 송건호, 이돈명 두 사람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실무를 맡을 상임실무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상임실무위원회(14명) : 이 효재, 최 원식, 팽 원순, 한 승헌, 홍 성우, 임 재경, 권 근술,

김 종철, 김 태홍, 신 홍범, 이 병주, 이 원섭, 정 태기, 조 성숙. 인사위원회(5명) : 송 건호, 임 재경, 김 태홍, 성 한표, 이 병주, 조 준희. 재정위원회(4명) : 변 형윤, 황 인철, 김 명걸, 이 경일.

(3) 창간발기인의 의의 및 계층별 분석

새 신문에 범국민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새 신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부여가 필요했으며 창간발기인들은 그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새 신문 창간발기인을 보면 교육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민주사회단체, 의료계, 여성 운동계 등과 함께 전국 각지의 교수, 종교 사회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신문이 단 기간 내에 창간기금을 모금하고 전국종합일간지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창간발기인과 이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한겨레소식지에 실린 창간발기인들을 전문 분야 또는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당시 사회의 주요 단체나 직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별첨 4>. 이들은 새 신문 창간 준비사무국 등 창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조직이나 인사들의 권유 등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 권유 강도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이 민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차등적이었다고 추정이 되지만 최소한의 대표성은 지닌다고 볼수 있을 것 같다.

새 신문이 발표한 창간발기인 3,342명 가운데 한겨레 소식에 그 명단을 실었던 3,317명을 전문 분야와 지역 등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전문 분야>독립운동 원로 3명, 대학교수 485명, 천주교 146명, 기독교 143명, 불교 65명, 문화예술 272명, 민주사회단체 122명, 여성운동 68명, 교육 85명, 출판 광고 78명, 법조 91명, 의약 한의 약학 125명, 시민 232명, 건축 43명, 언론계 203명.

<지역>인천·경기 192명, 강원 27명, 부산·경남 381명, 충북 100명, 충남

74명, 제주 17명, 전북 98명, 전남·광주 192명, 대구·경북 75명,

이상의 창간 발기인은 분류는 당시 창간사무국에서 엄격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대학교수가 486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기인 가운데 대학교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종교인들도 전문 분야와 지역 쪽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해서 전문 분야와 지역별 발기인들을 다시 세분해 보면 당시 전체 사회의 주요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문학, 연극영화, 음악, 무용, 방송, 미술, 서예, 바둑 등의 전문 분야로 세분되고, 민주시민단체에는 민통련, 서울민통련, 카톨릭농민회, YMCA, 홍사단, 가농, 민가협, 노동운동, 청년고학기술자협회, 카톨릭노동사목, 가사연, 민청련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 운동계는 카톨릭 여성농민회,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YWCA,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주부클럽, 소비자운동 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언론계는 해직언론인과 전직언론인 그리고 현직언론인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의 경우 대부분 교수, 종교인, 민주사회단체 법조, 의료인 등이 공통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새 신문 창간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

① 새 신문 창립총회

새 신문은 설립등기 하루전인 12월 14일 창간위원 42명 가운데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국동 창간사무국 근처의 한 식당에서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임원 선임, 정관확정 등 법적인 요식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대표이사 송건호, 이사 편집인 임재경, 이사에 김정환, 이돈명, 이효재, 홍성우, 이병주, 정태기, 그리고 감사에 황인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총회는 또 추후 설립될 노동조합 대표 한 명을 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창립총회는 새 신문의 창간정신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법인 설립이후에도 창간위원회를 존

속시켜 주주를 대표해 이사회 구성이나 한겨레신문 기본 방향 등 주요 사항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한겨레신문 소식 4호, 1987년 12월 29일).

②이사회와 창간사무국의 활동

이사회는 1988년 1월16일 효과적인 창간작업 추진을 위해 등기이사 8명 외에 비등기이사로 김 인한, 신 홍범, 권 근술, 성 유보, 김 태홍 씨 등 5명을 선임했다. 이에따라 송 건호, 임 재경, 이 병주, 정 태기 씨 등 상근 등기이사 4명과 비등기 이사 5명으로 임원회의를 구성, 실무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사회는 이어 2월29일 열린 이사회에서 부서별 정원을 의결하는 등 기구조직을 확정했다. <표4—4>에서와 같이 새 신문 기구 조직표를 보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이어 대표이사, 운영기획실로 이어지고 편집인, 영업이사, 관리이사가 그 아래에 자리잡았다. 임원회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감사실은 대표이사와 운영기획실 사이에 위치했다. 운영기획실은 기획예산부와 전산부라는 자체 기구로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국, 영업부서, 관리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국은 논설위원실과 편집위원장의 기구로 구성되며 두명의 부위원장은 11개 편집국 부서를 관장한다. 기획취재본부는 편집위원장 직속으로 두었다. 영업이사는 판매국, 광고국을, 관리이사는 제작국과 관리국, 주식관리실을 관장한다. 인원 구성은 소수 정예주의를 원칙으로 편집국 135명(편집인,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제외), 판매국, 광고국, 제작국, 관리국 등 비 편집국 195명(부국장급 이상 제외)으로 되어 있다

새 신문은 3월28일 이사회를 열어 신문을 조간으로 발행기로 하고 기존 일간지와는 달리 매일 8면을 발행, 월 2천500원의 구독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기존 일간지들은 4월1일부터 매일 16면을 발행해 3천500원씩의 구독료를 받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은 광고수입의존도를 다른 일간지보다 줄여 권

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창간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구독료를 기존 일간지보다 약간 높게 받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인쇄사정이 호전되면 12면으로 증면키로 하고 창간호는 50만부를 발행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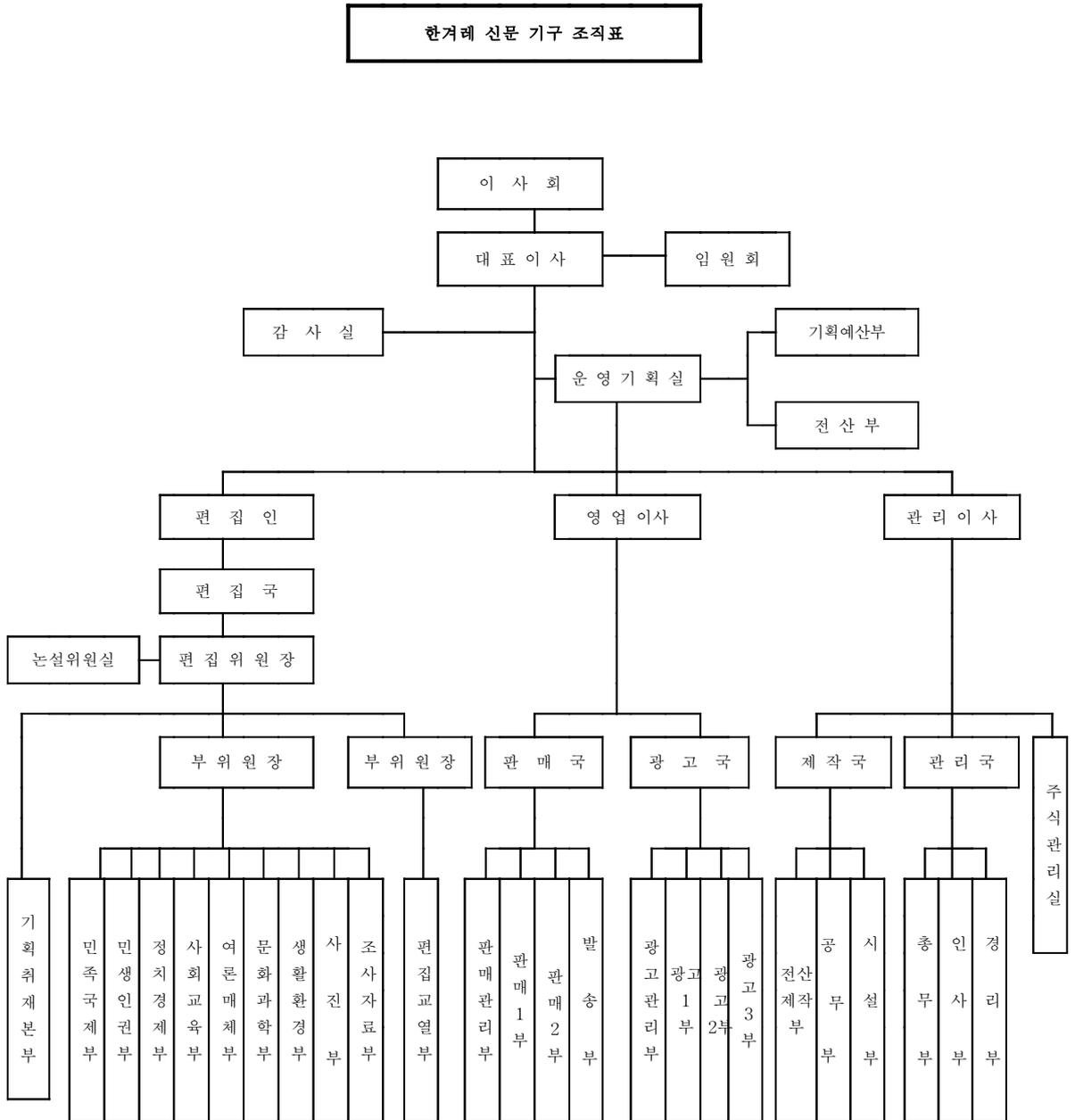
창간사무국은 1988년 1월초부터 새 신문 창간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에 착수, 운전기를 구입하고 편집진용 구성, 사원 공채에 이어 전산제작체제(CTS)도입 등을 발표했다(한겨레신문 소식 5호 1988년 1월22일).

㉠운전기 : 당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간신문 등록에 필수적인 운전기를 구입했다. 한겨레신문 제 1공장에 설치된 읍셋 방식의 운전기 1, 2호는 일제 하마다 EMINET 및 하마다 CORRECTA 형으로 최대 인쇄능력은 대판 8면을 시간당 2만 4천부씩 찍을 수 있다.

㉡CTS : 새 신문은 연판과 납을 쓰지 않는 재래식 인쇄방식 대신 전산제작체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 체제는 PC를 이용하는 전산 사식기(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기사를 입력하고, 32비트 워크 스테이션을 이용해 사진, 도안 입력과 조판 및 편집을 하며, 각종 프린터를 이용해 교정 및 필름 출력 작업을 할 수 있다.

㉢편집진 구성 : 새 신문은 기존언론사와는 달리 편집국을 회의제로 운영키로 하고 편집위원회제를 도입했다. 기존 신문들의 편집국장을 편집위원장으로, 부장, 차장을 편집위원과 편집위원보로 부르고 편집국 운영 시스템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취재, 제작, 보도의 전 과정은 국장이 부장에게, 부장이 차장에게, 차장이 기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부는 소속 기자들끼리, 각 부 담당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협의 토론해 논조와 보도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논의 구조를 통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력 생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12일 편집위원장에 성유보를, 편집·교열·CTS 담당 편집부위원장에 이종욱, 편집위원으로는 민생인권부 홍수원, 정치경제부 성한

<표4-4>한겨레신문 조직 기구표



표, 여론매체부 이기중, 사회교육부 김두식, 문화과학부 이종욱 씨를 각각 선임했다. 편집교열부 이종욱(문화과학부 편집위원과 동명이인), 민족국제부 박우정, 생활환경부 지영선, 조사자료부 임응숙 등의 편집위원급도 뒤이어 선임되었다. 또한 특별기획취재본부의 기획위원에 장윤환, 김명걸, 조성숙 등이 임명되었다.

㉔조사자료 기증 : 새 신문은 소식지 등을 통해 신문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기증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그 결과 많은 자료가 기증되었다(한겨레신문 소식 6호 1988년 2월9일). 변 형운 교수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경제관계통계 자료 일체를 기증했고, 철학관계 서적을 주로 출판하던 서광사(대표 김 신혁)는 80여권의 철학, 종교관계 도서와 철학백과사전 8권1질을 비롯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서적 8백여권을 기증했다. 허웅 한글학회 이사장은 학회간행물들을, 중앙대 김 성훈 교수는 한국 농촌경제에 대한 자료를, 경원문화사 대표 김도원씨는 해방 이후 카프 문학 등을, 남광우(평택거주)씨는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를 기증했다. 이 창옥(인천 거주)씨는 81 ~ 87년까지의 중앙, 동아일보 일부를 보냈고, 박 한광(용산구 동자동 22-19)씨는 중앙일보 65년 창간호부터 88년 초 현재까지 23년치를 기증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③사원모집과 기구 확정

1988년 1월13일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내고 사무직과 기자직, 제작 및 광고, 관리 부문 등의 사원을 공채하자 8천52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들을 분야별로 보면 수습사원은 기자직 1천894명, 업무직 2천665명, 공무원 222명, 그리고 경력사원은 기자직 870명, 일반직 1천145명, 전사사식 오퍼레이터 및 사무보조요원 899명 등이다. 수습사원 지원자 4천7백명에 대한 1차 필기시험은 1988년 1월31일 중앙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1차합격자에 대해서는 2차로 논문, 외국어 및 기사작성 시험이 실시되고 경력사원은 서

류심사와 면접방식이 실시되었다. 1988년 3월2일 경력기자 38명과 수습기자 23 명을 뽑고, 3월7일 업무직 경력사원 44명과 수습 사원 11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기자직 사원은 95명, 여사원 95명, 업무직 사원은 119명이 충원되었다. 4월18일 광주·전남과 전주·전북,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 담당기자 4명을 확정해 편집국 사회교육부로 발령했다.

2)동원화

특정 집단이 사회운동의 집합적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가 집합적 통제가 가능한 자원의 확보다. 사회변동을 위해 긴요한 자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따라 자원의 종류는 다양하다.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용도에 따른 자원을 분류한다면 창간기금과 내부 인적 자원의 충원이 대표적인 것이다.

(1) 주주의 납입 및 직업, 종교별 특성 분석

한겨레신문 창간에 필요한 자원의 하나인 창간기금 50억원의 확보에 동참한 주주들은 6만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관련자료는 매우 희귀하다. 즉 한겨레신문 창간사무실이 1988년 3월29일 공개한 창간기금 주주에 대한 통계자료는 미흡하기는 하나 이 신문이 공개한 유일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전체 주주는 2만7천52명이다. 주주들을 납입금액별로 보면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9천6백44명(35.6%)으로 가장 많고 1백만원 이상 낸 주주는 1천3백68명(5.1%)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4.6%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26.4%로 2·30대가 전체의 61%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2천2백12명으로 8.2%였다. 주주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만5천1백97명(56.2%), 경기가 9.6%, 경남이 5.4%, 부산 4.7%, 광주 3.8%, 전북 3.7%, 전북 2.9%, 인천 2.8%, 경북과 대구가 각각 2.6%, 충남이 2.5%, 강원 1.4%, 충북 1.3%, 제주 0.5%였다(한겨레신문 소식 9호 1988년4월19일).

한편 한겨레신문이 창간기금 모금 이후 추가로 자본금을 증액한 이후 주주 6만1천616명(2002년 2월 현재)에 대한 통계자료 가운데 연령별 비율을 보면 <표4—5>와 같이 창간기금 주주들의 분포와는 달리 30 ~ 50대까지의 분포가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간기금에 분포빈도가 가장 높았던 20대는 4.3%에 불과했고 20세 미만도 4.9%로 창간기금 주주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주주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65%인 4만 68명, 여자가 34.6%인 2만1천322명, 성별이 분간되지 않는 인원이 0.4%인 226명이다.

<표4—5> 주주 6만여명에 대한 통계

연령	남자		여자		기타(신원불명)		합계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01-10세	38	0.06	19	0.03	0	0.00	57(0.09)
11-20세	1,698	2.76	1,268	2.06	0	0.00	2,966(4.81)
21-30세	1,623	2.63	1,020	1.66	0	0.00	2,643(4.29)
31-40세	10,444	16.95	6,668	10.82	0	0.00	17,112(27.77)
41-50세	16,921	27.46	5,783	9.39	0	0.00	22,704(36.84)
51-60세	5,983	9.71	1,601	2.60	0	0.00	7,584(12.31)
61-70세	2,513	4.08	641	1.04	0	0.00	3,154(5.11)
71세~	768	1.25	4,287	6.96	0	0.00	5,055(8.20)
기타(신원 불명)	80	0.13	35	0.06	226	0.37	341(0.55)
총합계 (비율%)	40,068(65%)	100.00	21,322(34.6%)	100.00	226(0.4%)	100.00	61,616(100%)

<자료 출처 : 한겨레신문사, 2002년2월 >

설립기금을 보내온 사람들의 분포는 매우 다양해 적게는 1만원(2주)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납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직업별 분포는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온 인사는 물론 의사, 약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증 전문 직종 종사자나 회사원, 공무원 등이 포함되고 대학생, 노동자,

농민 등 매우 광범위했다. 총학생회,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인당 1주 또는 2주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금한 뒤 대표자 명의로 설립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문사가 설립된 뒤 발행되는 주식은 그들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한겨레신문 소식지 1호, 1987년 11월 18일).

창간 사무국은 10월 30일 발기인선언대회를 마치고 11월 2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립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방식은 국민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송금되거나 창간사무국에 직접 납입하는 방식이었다. 창간 사무국은 1988년 1월중순부터 국민은행에만 한정되었던 접수창구를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우체국을 이용한 온라인 송금 방식도 대체구좌에 의한 방법으로 바꿨다. 설립 기금의 내역을 보면 새 신문 창간 발의한 해직, 전직, 현직 기자 2백여명이 1인당 50만원이상씩 낸 창간준비기금 1억여원, 한겨레신문 발기인으로 참여한 각계인사 3천2백여명과 일반주주가 납부 또는 청약한 설립기금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새 신문 창간기금의 공개 모금이 시작된 후 1개월 여가 지난 12월10일 창간사무국이 직장, 종교계, 대학가, 노동조합, 지방 등의 범주로 나눠 분류한 모금 상황은 아래와 같다(한겨레소식 3호, 1987년 12월12일). 소식지에서 기업체나 공사 또는 학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당시 새 신문 창간에 동참한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설립모금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셀러리맨들의 집단참여 현상이었다. D주식회사의 경우 60여명의 직원들이 설립회원으로 참여해 11월 급여에서 기금을 떼어내기도 하고 연말보너스에서 내기로 약정서를 쓰기도 했다. 이밖에 D산업, P식품, W출판, J서적 등에서도 직원들이 스스로 후원회를 만들어 설립기금을 냈고 국영기업체인 H공사, S공사, N공사 등의 직

원들이 참여했다.

천주교의 경우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용희)가 새 신문 창간 지원 성명을 내는 등 서울과 지방의 여러 성당에서 신부들이 앞장서 신도들의 모금에 나서는 등 카톨릭의 후원활동이 활발했다. 11월 29일 발표된 이 협의회 성명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언론의 정도를 걷는 신문다운 신문, 방송다운 방송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KBS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인 바 있는데 성명서와 각계 원로들의지지 성명, 천주교 단체 및 신부들의 메시지를 담은 홍보전단 10만부를 만들어 서울대교구 소속 전 성당을 통해 후보와 함께 배포했다. 인천교구는 12월 6일 후보와 함께 이 전단 4만 부를 배포했고 원주교구도 1만5천부를 배포했다.

한편 신도들의 모금도 활발해 서울의 경우 홍제동, 혜화동, 용산, 청담동, 천호동, 신월동 성당 등에서 신부들이 앞장서 설립기금을 모았고 지방에서도 삼량진 천주교회를 비롯해 여러 성당에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중·고교 교사들은 학교별로 집단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서울 Y여고의 경우 교사 50여명이 180만원을 모아 창간 사무국에 전달했고 K여고도 주임교사 등 4명을 포함한 23명의 교사들이 각자 2주씩 사기로 합의, 23만원을 모아 창간 사무국을 찾았다. B여중고는 47명, D고교에서는 60명의 교사가 설립회원으로 참여했다.

대학가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울대, 이화여대, 인하대, 인천대, 성심여대 등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새 신문 설립기금 모금에 적극적이었다. 이화여대는 총학생회의 결의로 ‘이화 가족 한겨레신문 설립기금 모금운동’이 11월30일부터 시작되었다. 서울대는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새 신문 창간 후원 활동을 벌였다. 대학원생들의 연합체인 전국대학원생연합회(회장 조정관)와 대학신문 기자들의 연합체인 전

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장 차재훈)에서도 새 신문 창간작업을 적극 후원
키로 하고 학교별 모금활동을 벌였다.

동창회 모임의 경우 중·고교나 대학교 동창모임에서 새 신문 설립기금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K고교, 서울의 Y고교 동창회 등에서 모금을 했고,
민주서강동우회, 연세민주치과의사회 등에서도 활발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노동조합의 경우, 증권, 금융, 보험, 단자, 리스회사 노동조합 연합체인 한
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회(회장 최재호·한국산업리스)는 조합원들을 상대
로 설립기금 모금 활동을 펴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한국리스에서는 조합
원 140명 대부분이 설립회원으로 참여해 294만원의 설립기금을 냈다. A보
험, T보험, E조합중앙연합회, H보험, Y투자금융 등에도 노조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였다. 한국자동차보험노동조합(위원장 권세현)은 1천8백만원
의 기금을 1988년 1월27일 창간사무국에 접수시켰고, 동양화재해상보험노
동조합(위원장 황원래)과 해동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은 4백50만원, 2백만원
의 기금을 납입했다.

불교계의 경우,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스님)의 스님 20
여명이 1천50만원을 설립기금으로 내놓았다.

(2) 창간기금 모금을 위한 동기부여

창간기금을 모으는 것은 시민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 자원해서 동참하도
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시 시대상황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요구 등으로 창간기금이라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성숙되었다 해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금을 내도록 하기 위
한 동기부여는 창간주체 세력의 몫이었다. 따라서 창간기금에 관한 정보를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 동원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은 새 신문
소식지 발행, 발의자를 통한 홍보, 외부 창간추진 세력의 지원, 지역별 주
주들의 모금 캠페인, 일간지를 통한 광고 등이었다.

① 새 신문 소식지 발행

새 신문 창간준비사무국은 창간 준비 과정을 알리기 위해 1987년 10월 최초로 '새 신문 소식지'를 만든 데 이어 '한겨레신문 소식'을 발해 배포해 창간 기금 모금 상황과 유명인사의 지지 선언, 시민 사회단체의 동조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발의자와 창간위원, 사무국 요원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종교, 여성단체 교수 등 외부지원 세력들의 지원활동이 벌어졌다.

새 신문 소식의 경우 1987년 10월 10일 새 신문 창간 발의자들에게 창간작업 진척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소식지 1호인 '새 신문 소식'을 11월 10일까지 3회에 걸쳐 발간해 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A4용지 크기의 2 ~ 3장으로 만들어졌다. 발행인은 정태기, 편집인은 이원섭이었다.

한겨레신문 소식지 발행을 보면, 사무국은 11월 18일부터 '창간 사업에 동참할 사람'을 대상으로 1988년 4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한겨레신문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보통 신문지 크기의 이 소식지 2~4면으로 만들어졌으며 발행회수를 거듭하면서 점차 그 발행 부수를 늘려 수천 부 또는 수만 부를 발행해 새 신문의 창간 준비 작업을 외부에 알리는 주요 매체의 역할을 했다. 당시 기존의 신문 방송이 새 신문 창간 작업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창간 준비과정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소식지가 담당했다. 소식지는 한겨레신문 창간을 궁금해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무국요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시내 중심가 또는 지하철역 등에 나가 소식지를 나눠주었고, 모금 팀은 교회·대학·노조 등을 대상으로 노력했다. 소식지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된 내용에는 당시 사회운동으로 추진된 민주화 촉진과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에 필요한 운전기 구입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운동의 형식으로 한겨레신문이 사회적인 호응을 받았다는 점과 효율적인 사회운동의 성공적인

조건의 하나가 신문사 자본금인 자원의 확보라는 것이 강조되었고 사회적 공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신문광고 문안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뽑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 한겨레신문에 출자하십시오. 내일의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한겨레신문이 나오면 대통령 노릇 힘들어진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허탈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한겨레신문 창간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87년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4대 일간지에 실린 광고)

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한겨레신문 광고 면에 연달아 게재된 것들은 아래와 같다(신문연구 49호, 1990, .48)

“해 지면 호주머니에 소주 한잔 값이 없는 가난한 한겨레 기자들. 해 뜨면 독재정권 총칼부리도 무섭지 않은 용감한 한겨레 기자들. 월급 많아 좋은 직장, 신문사 다 팽개치고 박봉도 좋다 껄껄 웃으며 제발로 모여든 한겨레 기자들. 술고픈 것도 좋고, 안식구 시린 눈치도 참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운전기 명색이 워낙 못나 신문 발행이 늦습니다. 속보성이 생명인 신문인쇄가 늦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 운전기를 사 주십시오.”

“그 민주화를 다지던 시대, 아빠, 엄마는 무얼 하셨나요? 뒷날 우리 자식이 묻습니다”

② 발의자를 통한 홍보

기존신문은 새 신문에 대한 기사를 10, 11면에 1단 기사로 보도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취급하고, TV에서도 완전히 묵살되자 창간준비 사무국은 대책을 마련했다. 즉 10월 24일자로 발간된 ‘한겨레신문 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국민주주 모집 캠페인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발의자가 발벗

고 나서자고 촉구한 것이다. 사무국은 “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꾸려가는 살림이라서 신문이나 방송의 대형광고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자 연고가 있는 모든 매체(신문, 방송, 주간지, 월간지, 무크지, 전문지, 대학신문 등)에 최대한 협조를 당부해 기사화시키자”고 촉구했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별로 발행되는 동문회자도 홍보효과가 적지 않으니 이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새 신문 창간위원, 사무국 요원들의 가두 캠페인 : 새 신문 창간위원들과 사무국 요원들은 11월 중순부터 교회와 성당,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설립기금 납입안내전단을 배포하는 등 가두 캠페인을 시작했다. 11월 15일에는 사무국 요원 20여명이 조를 나누어 명동성당, 영락교회 등 서울시내 7개 성당과 교회를 돌며 ‘한겨레신문의 주인이 됩시다’라는 안내 유인물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설립회원이 될 것을 권유했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송권호 위원장 등 창간위원과 사무국 요원 30여명은 매일 아침 7시반부터 9시까지 서울 시청앞과 종로 2가, 서울역 등 중심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민들에게 한겨레신문 소식지 5만여부를 배포했다. 21일에는 오후 1시반부터 서울역 구내에 들어가 승객들에게 안내전단을 나눠주었다.

③외부창간 추진 세력의 지원

김수환 추기경등 각계 원로 24명이 새 신문 발의를 환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지지 성명을 10월 12일 발표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 관석, 김 수환, 김옥길, 김 정한, 김 지길, 문 익환, 박 경리, 박 두진, 박 형규, 박 화성, 변 형운, 송 월주, 이 돈명, 이 우정, 이 태영, 이 효재, 이 희승, 윤 공희, 성 내운, 조 기준, 지 학순, 함 석헌, 홍 남순, 황 순원. 이들은 새 신문 창간지지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새 신문창간지지 성명, 1987년 10월12일)

해직 언론인들과 현직 기자들이 뜻을 모아 새 신문을 창간하고자 발의했다 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권력의 방패 노릇을 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모습을 너무도 자주 보아온 우리는 70년대 중반부터 80년 초에 이르기까지 언론계의 일선에서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다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새신문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못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펴내기로 한 새 신문은 기존의 신문과는 달리 돈 많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권력의 간섭에서도 벗어나려고 국민여러분이 땀이 묻은 돈으로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찍이 언론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기존의 신문들이 있는 일을 없는 듯이 덮어버리고 없는 일을 있는 듯이 만들어 국민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민주화는 정말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들은 갈라진 겨레가 다시 하나되게 하는 데에 소홀하고 더러운 반목하고 다투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일까지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신문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걸음을 내딛는 새 신문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고 비판해야 할 것을 제대로 비판해서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풀어줄 것으로 확신하며 이들의 이 역사적인 작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계의 대표들과 시민 여러분이 새 신문에 적극 참여하시고 이 신문을 아끼고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성명은 사회 각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20여 일만에 출자 청약서에 10만원을 써낸 발기인 숫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은 10월 20일 경 한겨레신문 창간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 새 신문이 한국언론의 새 지평을 열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새 신문 설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교수들이 동문과 제자들에게 한겨레신문 창간기금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다. 편지보내기 캠페

인에 참가한 교수는 변 형운, 김 진균 교수(서울대), 팽원순, 이 강수, 정 대철 교수(이상 한양대), 이효재, 박 순경 교수(이화여대) 등이다(한겨레신문 소식4호).

한국출판운동협의회(회장 이우회)와 한국여성민우회, KNCC(회장 김 성수) 등은 한겨레소식지 7호(1988년 3월10일)에 광고를 내고 정부는 한겨레신문 등록증 교부를 신속히 교부하라, 한겨레신문은 국민이 주인인 신문다운 신문이 되어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서 투철한 전사가 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새 신문이 또 하나의 제도언론으로 안주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민중에 대한 배반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④지역 주주조직들의 모금운동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청주, 이리, 순천, 원주, 부산, 목포, 여수, 순천,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울산, 포항, 안동, 상주, 점촌, 구미, 선산, 부여, 공주, 대천, 보령, 청주, 충주, 제천, 춘천, 강릉, 성남, 가평, 구리, 제주, 서귀포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새 신문의 창간 발기를 축하하고 범시민적으로 설립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조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지역 후원회를 이끄는 인사들은 대부분 해당지역에서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일반시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어 새 신문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이들은 새 신문 등록필증이 교부되지 않자 한겨레신문 소식지에 광고를 내고 정부에 그 발급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지역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냈다.

인천과 부천 지역 발기인인 강영진, 김상욱, 김영준, 박귀현 씨등을 중심으로 지역단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1987년 11월 22일 인천 도화동 성당에서 개최한 인천시민 창간후원대회에서 송건호 한겨레신문 창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강연과 정태기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및 김병상 신부의 축사 등

이 있었다. 10월 30일 명동 YWCA에서 열린 창간발기인대회에서 공연되었던 민중문화운동연합의 제도언론 풍자마당극도 열렸다.

광주지역 창간발기인 강신석, 강연균, 고재기, 김경천씨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시민후원대회가 11월 27일 광주 YWCA강당에서 열렸고 기금 모금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부산과 경남지역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범조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한겨레신문 부산·경남지역후원회(공동대표 김 정한, 최 성묵, 박 재우)를 결성하고 11월 20일 사무실을 부산시청 앞 부산데파트 4층 504호에 열었다.

한겨레신문 대구·경북지역 후원회(회장 김 윤수)는 12월15일 대구 동성로 3가의 한 건물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지창(경북대), 이수인(영남대) 교수 등이 이 지역발기인들을 중심으로 60여명이 참석한 시민모임에서 대표로 선임된 김윤수교수(영남대)는 한겨레신문 창간을 돕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송건호 공동대표 등 창간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지의 후원회를 순회방문 하면서 한겨레신문의 창간취지와 국민주주 참여의 당위성 등을 전달했다. 송 대표는 80년대의 독재치하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극소수 원로 언론인의 한 사람이었고, 특히 말지를 발행해 공식언론이 보도지침 등으로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할 당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진실을 알리는 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송 대표가 직접 각지를 방문해 창간기금 모금에 앞장섬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새 신문창간에 대해 신뢰하고 주주가 되었다. 국민주주들은 새 신문 창간과정에 직접 돈을 내 주식을 사는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고 특히 '국민이 주인인 신문'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즉 자신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한겨레신문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지니게 되고 향후 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신문 창간이후 주주들을 경영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주주대표들과 신문사가 경영권 참여를 놓고 심한 갈등관계에 빠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사회운동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인 물질 토대 즉 경제적 수단의 형성과정에서 참여한 다수의 당사자들이 자원 지배권 행사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⑤ 기존일간지를 통한 창립기금 모금 광고

새 신문창간사무국은 창립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존 신문에 광고를 수차례 냈으며 이는 새 신문 창간 소식을 널리 알리면서 창간기금 모금을 촉진했다. 즉 조선일보에 1987년 11월8일 첫 번째 기금 모금 광고를 낸후 1988년 2월25일 동아일보에 모금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광고등을 포함해 모두 13번의 기금 모금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광고 크기는 전면, 7단, 5단 등의 크기였는데 기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존 일간지들이 새 신문 창간 과정에 대해 인색한 보도를했기 때문에 이들 광고는 새 신문 창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당시 일자별 광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87년 11월8일 조선일보 8면의 모금관련 전면광고 : 3천여 창간발기인 명단과 함께 “온국민이 만드는 새 신문 - 한겨레신문의 주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8면 전면 광고는 이 조간신문 독자와 함께 많은 시민들에게 새 신문의 창간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국민주주를 모집하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 광고를 싣는데 창간사무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모아준 돈인데 조선일보에 그렇게 큰 광고를 싣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한겨레소식 9호 1988년4월19일).

1987년 11월17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5단 광고는 “온 국민이 주인인 새

신문 - 한겨레신문은 39억3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헤드라인의 이 광고는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선거전에 관심을 빼앗긴 국민들에게 직접 출자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한국일보에도 실린 이 광고는 하루 1천5백만원대에 이르던 모금액을 3천만원대로 끌어올렸다.

1987년 11월24일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 광고의 경우 “대통령 뽑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 “한겨레신문에 출자하십시오. 내일의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대통령 선거전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던 상황에서 집행된 이 5단 광고는 하루 2천만원대의 입금액을 3천만원 대로 끌어올렸다.

1987년 12월23일 ~ 26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의 7단 광고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후보가 낙선하고 군인정치인이 당선되고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한데 대한 국민적 허탈과 분노가 높았던 시점에서 “민주화는 한 판 승부가 아닙니다. 허탈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한겨레 신문 창간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7단 광고가 4개 일간지에 연속 게재되었다. 이 광고가 나간 뒤 모금액은 급격히 상승해 12월 26일에는 4천7백만원, 12월 28일에는 6천4백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12·16선거를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무효화 투쟁에 나서던 일부 운동권에서는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이 담긴 ‘허탈과 좌절’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내용에 대해 새 신문 쪽에 항의하기도 했다.

1988년 1월13일자 동아일보, 1월14일자 조선일보 7단 광고의 경우, 창간기금 모금 겸 사원모집을 알리는 7단 광고는 한겨레신문이 윤전기를 확보하고 사원을 공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머지 설립기금 25억원을 하루 속히 모금할 수있도록 조금만 더 출자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조금만 더 출자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광고 뒤 1월15일 모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뛰

어 올랐다.

1988년 1월27일자 조선, 동아일보 7단 광고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등록신청을 끝냈습니다"라는 내용이 실렸고 그 다음날 입금액이 1억6천만원으로 모금 캠페인 이래 최고액수를 기록했다. 이후 하루 1억원 내외의 입금액이 들어왔다. 2월20일 이후 입금액이 50억원에 육박하자 4개 은행과 우체국에 마련된 창간기금 모금 창구를 폐쇄했다.

1988년 2월25일 동아일보 4면에 “ 창간기금 50억원이 다 모였습니다”라는 5단 광고가 나갔다.

한편 1987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창간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뒤 목표가 달성된 1988년 2월 하순까지 한겨레신문 소식지가 공개한 모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11월 14일에는 5천1백여명의 설립회원을 확보하고 10억7천만원 모금

11월 21일에는 5천8백여명의 회원에 12억3천만원 모금

12월 10일에는 7천5백여명 회원에 16억 모금

12월 28일에는 9천5백여명 회원에 19억원 모금

1988년 1월20일 1만2천여명 회원에 26억6천만원 모금

1988년 2월7일 1만7천여명 회원에 35억8천만원 모금(1988년 1월 28일 하루 입금액은 캠페인 시작이래 최고액수인 1억6천만원이 접수되는 등 1월 하순경 매일 1억원대의 설립기금이 접수되었다).

1988년 2월1일 40억원 돌파

1988년 2월24일 50억원 돌파

새 신문은 88년 2월 창간기금 50억원 모금을 완료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발전기금(목표 1백억원) 국민모금에 나서 이듬해인 89년 5월15일 창간 1주년 기념일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1백15억 원이 모였다. 한겨레신문은 지령 1백호를 넘기면서 88년 9월20일부터 발전기금 국민모금에 들어갔다. 목

표액은 1백억 원 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시리즈 광고를 통해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국내에서 가장 못난 신문, 세계 언론사상 가장 놀라운 신문 - 국민여러분이 힘을 합쳐 새 윤전기 한 대를 사주십시오”로 캠페인을 시작, 창간 1주년 기념일인 89년 5월15일 목표액을 15억 초과달성 하면서 발전기금 모금은 완료됐다. 이 발전기금 모금은 한동안 실적이 저조해 한겨레 임직원들의 애를 태웠으나 ‘공안정국’에 접어들면서 이영희 논설고문이 구속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폭포처럼 기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북한이라는 자원을 놓고 벌인 취재노력에 대해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국민주주들이 발전기금이라는 자원을 제공한 것이다.

⑥ 창간기금 모금과 편집권 독립의 보호장치

창간준비 사무국은 창간준비 사무국은 새 신문이 정치권력과 특정 자본으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면서 새 신문의 편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출자 상한액이 창립자본금의 1%를 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겨레신문이 주주 한 사람의 출자상한액을 창립자본금 50억 원의 1% 이내로 제한키로 한 것은 언론의 소유구조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키 위한 것이었다. 언론의 성격은 소유구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자본가가 대주주인 경우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개인 소유의 신문은 그 개인의 입장을 반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겨레신문의 구조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한국의 다른 언론사들이 지니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정탁, 1990, 84-108). 이 같은 한겨레신문의 소유 구조적 특징은 분명 다른 언론의 그것과 구별된다. 1989년 국회 문공위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경우 재단법인 인촌 기념회가 23.8%, 김상만 씨가 15.3%, 김씨의 아들 김병건 씨가 6.09% 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는 방우영씨가 45.0%, 방씨의 형인 방일영씨

가 4.22%, 방일영씨의 아들 방상훈씨와 방영훈씨가 각각30.0%와 10.6%씩을 소유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이건희씨가 21.5%, 이씨의 아버지 고이병철 씨가 5.3%, 제일제당이 22.0%, 제일모직이 11.0%, 삼성물산이 5.1%, 전주제지가 4.2%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일보의 경우는 장강재 씨가 57.5%, 장씨의 동생 4명이 각각 10.0% 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 소유 형태는 거의 예외 없이 소수의 손에 맡겨져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가족이나 기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언론사의 최대 관심사는 소유주의 이해관계였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구조적 특징은 이 신문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고 보다 독립적인 언론의 기능을 할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주주 자본금 형태에 대해 김정탁은 주주들이 신문제작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김정탁, 1990, 90) ...한겨레신문의 이 같은 구성형태는 주주의 이견이 신문의 메시지 제작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는 주주들의 의견이 한겨레신문의 보도태도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겨레신문은 주주가 다수라는 사실이 오히려 제한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즉 양적으로는 주주의 숫자가 너무 많기에 한겨레의 보도태도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기 힘들고, 질적으로는 주주가 서로 이질적이기에 의견수렴 자체가 손쉽게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정탁은 이어 한겨레신문의 주주들이 신문의 보도태도에 관한 사항을 경영인에게 위임했을 경우 편집권이 경영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편집과 경영이 서로 분리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김정탁의 우려는 1991년 한겨레신문의

내부문제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구체적인 현실로 확인된다.

3)제도화

한겨레신문은 창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사회운동 단계에서 제도화로 진입하기 위해 시도하면서 제도권 언론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도했다.

(1)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설립 등기

창간사무국은 12월 14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 법적인 실체를 갖춘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수권자본금 50억원의 한겨레신문주식회사는 7천여명의 국민들이 낸 설립기금 12억 5천여만원을 우선 발행자본금으로 하고 많은 주주를 대표해 창간위원회를 법정발기인으로 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새 신문 창간사무국은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도 창간기금을 계속 모금에 단계별로 증자를 해 나간다. 새 신문 법인설립 등기가 끝남에 따라 설립기금을 낸 회원들은 정식 주주자격을 갖게 되었고, 주권교부가 다음해인 1988년 1월9일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은 주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창간사무국은 밝혔다.

(2)새 신문사업자 등록증 신청

한겨레신문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 석 달 만인 1988년3월12일 종로세무서에서 발급되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당국의 인가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신청 1주일만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새 신문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발급이 지연되었다. 새 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대구의 경북일보, 광주의 전남일보 등 다른 신청자들은 그 발급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새 신문에 대해서는 문공부 등록증 사본과 주주들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

라고 요구하면서 발급을 늦춰왔다. 세무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홍보용 TV 광고방송 불허조치와 함께 새 신문 창간준비에 대한 음성적인 방해라는 인상을 주었다. 새 신문 창간사무국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운전기 등 각종 기자재의 구매 계약, 지사와 지국 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한겨레소식 8호 1988년3월23일).

(3)일간신문 등록 신청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1월23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기 등 법정시설 요건을 갖추고 문공부에 일간신문 등록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약 3개월 후인 4월25일 등록증이 교부되기 까지 송건호 한겨레신문 발행인은 기자 회견 2번, 문화공보부 장관을 3차례 방문했고 한겨레신문 기자, 사원은 2차례에 걸친 시위를 벌여야 했다. 새 신문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는 접수 번호 제 1131번으로 접수되었는데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7조3항은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공부 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새 신문 송건호 발행인은 1988년 1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등록신청 사실을 공개했으며 당시 문공부 장관 이용희는 1월28일 국회문광위에서의 답변을 통해 “오는 2월20일까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한겨레신문의 등록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김정남 의원(민정당)은 한겨레신문의 광고와 소식지 배포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자 문공부측은 “현행법상 그런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소식 6호 1988년 2월 9일).

그러나 등록필증 교부가 지연되면서 지사 보급소 계약을 하지 못하고 판매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연 새 신문의 창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송건호 대표이사는 2월 19일 이용희 당시 문공부장관을 방문해 항의

하자 이 장관은 정기간행물 등록법 시행령 제정이 법제처의 업무과다 및 정권인수인계에 따른 업무처리 때문에 늦어졌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한겨레소식 7호 1988년 3월10일). 이 장관은 차기정부가 정기간행물 등록법 시행령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송 대표이사는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한겨레신문의 일간신문등록 신청에 대해 그 법적 시한인 2월22일까지 등록절차를 끝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송건호 대표는 3월11일 정한모 문화공보부장관을 방문해 새 신문 등록필증을 법에 따라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시설기준등을 확인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등록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겨레소식 8호 1988년3월23일). 송 대표는 4월18일 정한모 문공부장관을 방문해 새 신문사가 창간호를 1988년5월15일 잡았다고 밝히고 정부당국이 일간지 등록증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4월19일까지 다른 신청사들의 시설확인을 매듭짓고 총선전이라도 빨리 등록증을 내주도록 지시했다, 특수신문들과 한겨레신문을 구분해 종합일간지를 먼저 등록절차를 종결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새 신문은 창간일정을 5월15일로 정했으며 정부가 등록증 발급을 더 늦춘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소식지 9호를 4월19일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1면 머릿기사로 편집진용 등 준비가 매듭지어졌고 당국이 시설확인을 끝냈는데도 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었다. 국회는 1987년 12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그 법의 시행령을 1988년 3월10일에 만들고 한 달여 후인 4월15일 현장시설 확인 반이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해 조판, 재판 및 운전시설을 확인하고 이들 시설이 한겨레신문 소유인지 확인했다.

당시 문광부 당국자는 4월25일까지 이미 등록신청을 한 21개 신문사에 대한 확인을 모두 끝낸 뒤 종합평가를 해 일괄적으로 등록증 교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에 대해 소식지는 당시 4월 중순 실시될 예정인 총선과 관련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기자평의회는 1988년 4월19일 정부 당국에 신속한 등록증교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4월22일과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입구와 명동성당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틀간의 시위에 편집국 기자 1백여명과 일반 사원 30여명, 대부분의 편집위원들도 참가했다. 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입구 계단에서 벌어진 1차 침묵연좌시위에서 한겨레신문 기자, 사원들은 "한겨레신문의 등록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의 등록필증 교부 지연은 국민들의 언론자유를 안중에 두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소산"이라고 비판하고 등록필증 교부를 계속 늦출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버스 5대를 농성대열 앞에 갖다 대고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한 뒤 전경 2개 중대 3백여명을 투입해 새 신문 기자와 사원들 모두를 강제로 버스 3대에 태워 경기도 구리시 입구, 공항 부근, 경기도 백제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놓았다. 기자 평의회는 이에 대해 경찰의 불법적인 강제연행을 규탄하고 치안책임자의 의법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사원들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명동성당 입구에서 2차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기자 평의회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등록필증 교부를 지체할 경우 언론자유 쟁취와 민주주의 회복이란 역사적 대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공보부는 4월25일 한겨레신문 등록필증을 교부했다.

제 5장 한겨레신문 창간 운동의 결과

제 1절 한겨레신문의 정체성

집단의 동질성에 기초한 네트워크는 더욱 강한 연대성과 도덕적 실천력을 갖추게 해 집합적 유인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한겨레신문 창간이라는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연대와 도덕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인 집합적 유인(collective incentives)이 매우 중요했다.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지지자들도 창간 과정에의 참여가 자기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과정을 거치거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 또는 감정의 맥락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동원화라는 과제를 달성키 위해서는 다중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집합적 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했다. 그 가운데 창간운동의 이념적 지향이 가장 중요한 유인책의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이 신문의 이념적 지향 분석은 이 신문의 창간사, 윤리강령 및 편집 전략과 편집국, 신문 체제 구성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창간사, 윤리강령 분석

(1) 창간사

대중적 정론지임을 표방하고 나선 한겨레신문의 창간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라는 자원을 어떻게 정당하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다. 그것은 종래의 언론들의 정보 자원 전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 창간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겨레신문 1988년5월15일).

“우리는 떨리는 감격으로 오늘 이 창간호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모금에 의한 신문창간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수십 명의 외신기자들이 찾아왔고, 우리 역시 억누를 수 없는 감격으로 전혀 새로운 신문의 제작에 창조적 긴장과 흥분으로 이 날을 맞이하였다. 한겨레신문의 모든 주주들은 결코 돈이 남아돌아 투자한 것이 아니요, 신문다운 신문, 진실로 국민대중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참된 신문을 갈망한 나머지 호주머니 돈을 털어 투자한 어려운 시민층 이므로 이 신문은 개인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재래의 모든 신문과는 달리 오로지 국민대중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그런 뜻에서 참된 국민신문임을 자임한다. … 한겨레신문은 결코 어느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장차 정치·경제·문화·사회 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다. … 한겨레신문이 정치세력 앞에 공정할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신문사의 자본구성이 국민대중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신문은 절대로 특정사상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시종일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분투 노력할 것이다. …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은 따라서 권력의 방종과 부패를 막고 국민의 민권을 신장하여 사회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운동이랄 것이다 … 한겨레신문의 등장은 틀림없이 타성과 안일속에 젖어있는 기성 언론계에 크나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켜 한국언론에 하나의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겨레는 기성언론과는 달리 집권층이 아닌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어서가 아니라 밑에서 볼 것이다. 기성언론과는 시각을 달리할 것이다.”

창간사에는 한겨레신문의 물적 토대인 자본금 형성과 신문의 보도 형식 등에 대한 새로운 자원 동원 또는 공정한 전달을 통한 적정 배분 방식,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언론운동의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전체의 자원, 즉 민주주의, 정보전달, 국민주권 확립 등의 자원의 동원과 배분 등에 대한 정의로운 원칙 수립과 그 실천운동의 의지가 담겨있다.

한편 창간호에 실린 국민들의 격려광고 가운데는 “한겨레신문아! 너는 국민이 땀흘려 낳은 옥동자, 우리는 너의 올바른 성장을 지켜보마”, “한겨레신문이 갈 길은 ‘예’ 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말 좀 하고 삼시다” 등의 것들이 있다. 이는 당시 기존언론들에게서 여러 가지 불만을 느끼던 독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기존 언론의 보도로 인한 독자들의 불만은 정보라는 자원의 전달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윤리강령

한겨레신문사의 모든 임직원은 창간을 앞둔 1988년 4월25일 한겨레신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확정했다<별첨 6>. 새 신문은 언론이 그 시대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진실보도와 비판적 기능이라는 언론 본연의 구실을 수행하는 한편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제정, 채택한다고 밝혔다.

언론자유 수호, 사실과 진실의 보도책임, 언론인의 품위 등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윤리강령은 “한겨레신문의 임직원은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배격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아래 서만 신문을 만든다. 수사 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을 허용치 않고 보도나 논평과 관련한 불법적 연행을 거부한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중대사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을 밝히며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철저하게 파헤친다. 어떤 형태의 금품을 받는 것도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해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신문사 임직원은 이 강령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호는 한겨레신문사 전 사원의 의무임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겨레신문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윤리실천요강을 마련했는데, 이 실천요강은 언론자유와 수호와 진실보도를 위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지 않으며 편집권 독립과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한겨레신문이 특정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회사의 지배적인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 언론활동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연행당했을 때 그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 대처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실천요강은 이어 “금품이 제공될 때에는 윤리강령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정중히 사절하며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돌려보내며, 보도활동 범위안에 있거나 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취재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선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취재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 무료출장이나 유람여행에 응하지 않으며, 취재1편의를 위해 선의로 관람표가 제공된 경우가 아니고는 스포츠 경기나 음악회 영화, 연극 등의 공연에 무료로 입장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한겨레신문은 창간호에 윤리강령을 게재했다(한겨레신문 1988년5월15일). 이날 자 신문은 “언론의 사회적 채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언론자유와 수호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문을 만들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도 배격한다. 한겨레신문이 특정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다”고 선언하면서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해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독자의 반론권 보장, 오보의 정정, 취재원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등을

다짐한다. 정당 및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과 언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판매 및 광고활동에 대해서도 상도의에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으며 사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상과 같은 윤리강령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신문사 내부의 경영, 사원의 급여방식 등에서의 새로운 원칙 수립이 필요했다. 이는 신문사 밖에서 정착된 다른 신문사 경영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신문사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자원의 동원 방식 등을 부정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사회운동의 선언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창간 당시 추진된 대표적인 경영철학은 단일호봉제였다.

즉 윤리강령에 의한 금품 수수 거부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내 모든 직종의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회사 밖의 현실은 직종에 따라 수급이 다르고 그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차이가 있었으나 한겨레신문은 그것을 인정치 않고 사장의 노동과 운전자의 노동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단순한 봉급지급방식인 단일 호봉제를 채택했다. 이런 방식은 봉급체계의 큰 뿌리로 남아 존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한계는 적지 않았고 그것은 기형적인 급여지급으로 나타났다. 즉 직책에 따라 업무수행비용이 차등이 나는 현실을 받아드리게 되면서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급여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직책수당이 많은 부서로 서로 가고자하는 경쟁이 생기게되어 윤리강령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이는 결국 신문사 밖의 현실을 무시하고 한겨레 적인 윤리와 그를 준수하기 위한 원칙의 수립과 실천으로 나타나 유무형의 자원을 주고받는 형식에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다른 언론사는 물론 전체 사회에서 그 유례가 없는 형식이어서 한겨레 공동체의 논리라고 불렀고 초반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예를 들어 스포츠 취재를 갈 때 입장권을 사가지고 간다는 식의 원칙은 곧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되었고, 광고 부문에서의 갖가지 어려움은 광고와 기사와의 연결이 시도되는 쪽으로 쉽게 옮겨갔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광고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급박한 현실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심각한 내부 문제제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윤리강령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변질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쪽으로 변했으며 외부기구의 경비지원으로 이뤄지는 해외연수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끝으로 촌지 수수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사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형국이 되었다. 촌지의 경우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촌지를 거부하자는 취지에 동참하지 않음에 따라 한겨레 기자 등은 불가피하게 촌지가 지급될 경우 이를 반납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촌지 거부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자들이 창간이후 십수 년이 된 후에도 촌지를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 편집 전략과 편집국, 신문 체제 구성

(1) 기본적인 편집전략

한겨레신문 창간이라는 언론민주화운동이 시민사회에 그 존재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는데는 편집전략이 기존 언론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새 신문 창간운동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새 신문의 창간정신을 구체화시킬 기본적인 편집방향과 편집국 구성, 지면 배정, 신문체제 등에 대해 한겨레신문 소식 등을 통해 수차례 걸쳐 공개 되었다. 그 가운데 새 신문편집기획팀이 밝힌 편집시안이 가장 대표적이다(한겨레신문 소식 3호, 1987년 12월12일).

새 신문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보도지침과 같은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해 사실과 진실만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뉴스와 보도 가치를 정하는 원칙도 민주적, 민족적 관점에서 정립해야 한다. 기존 언론의 오랫동안 길들여진 상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새 신문은 법률적 요건을 갖춘 합법매체가 될 것이지만, 합법의 한계를 제도언론처럼 스스로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신문의 독자적 노선개척 문제의 경우 새 신문이 해직기자와 재야 인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운동권을 대변하는 신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새 신문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인 만큼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기업으로서의 경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하나의 제도언론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양쪽에서 공격받는 곤경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새 신문이 정치신문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나 이는 적절치 못한 것이며 정치적 센세이셔널리즘이야말로 한겨레신문이 피해가야 할 가장 큰 함정일지 모른다. 새 신문은 프로파간다(선전지)가 되어서는 안되고 보도의 객관성과 정론성을 지켜야 한다. 새 신문 창간정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해 촛지거부 선언 등을 포함할 것을 검토한다.

새 신문의 독자는 우리 사회의 양식 있고 땀흘리며 일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설정해 대중적 정론지를 지향해야 한다. 새 신문은 외국의 고급지가 겨냥하는 지식인 중심의 독자층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 신문들은 상업지에 가까울 뿐 취재방향도 대동소이하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겹쳐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두드러진다. 새 신문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란 불특정 다수라기 보다 이 사회의 건강한 일반 시민, 생산 주체는 물론 민주사회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생활과 현실, 의사를 반영하면서 이들과 더불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선정주의다. 선정주의 신문은 대중을 비정치화 시키고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세계관은 현상을 고정적인 것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보거나 변화를 원치 않는다. 선정주의는 또한 중요한 정치 사회문제에 침묵하고 주로 정치 가십을 많이 신는 특성을 나타낸다. 선정주의 신문은 체제상으로 정론지와 구별되는데 예를 들어 제목을 크게 뽑고 정보성이 없는 사진을 많이 사용하며 기사보다 광고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 새 신문은 정보 전달에 역점을 두어 가능한 제목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 기사를 충실히 신도록 노력한다. 또한 메시지 없는 사진을 가능한 줄이고 대신 만화나 판화 등 민주화 운동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표현수단의 활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기사 취재와 보도에 있어, 새 신문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온전하게 새로운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언론의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사의 가치 척도, 취재원, 지면구성 등 모든 것에 대한 발상이 새로워져야 한다. 즉 새 신문은 기존신문과 같이 정부를 포함한 관변 기사를 해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기존 신문이 관변 기사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관'을 '민'보다 중시하는 풍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권력의 통제나 간섭이라는 외부적 요인 외에 이들 신문이 지닌 보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성향 때문이다. 편집국 조직이 정부 구성을 편집국내에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는 점도 문제다. 고정된 출입 처와 사람을 만나는 식의 기자들의 출입처 제도 때문에 기사 성격이 미리 관 주도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새 신문은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굴해 쟁점을 만들어 가면서 여론을 형

성하고 정책을 선도한다는 취재의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취재원, 취재대상을 폭넓게 개발해 다변화 시켜 나갈 것이다.

TV프로, 스포츠 경기 기록은 신지 않으며 사진사용도 엄격히 한다.

편집국 구성은 기존 신문이 축적해온 경험가운데 필요한 것은 새 신문에서 채용한다. 그러나 편집국 내부의 민주화가 매우 필요하다. 새 신문은 기존 신문처럼 정치, 경제, 국제정치, 여성, 가정, 생활경제, 문화와 같은 뉴스를 다루는 부서와 함께 독자부를 따로 두어 여론을 수렴하고 별도의 심층 취재 부서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문제의 경우 국내 문제이면서 국제정치 문제 만큼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편집국 체제가 필요하다. 농민문제도 사회문제이면서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각 조각 나눠 보도하는 기존언론과 달리 새 신문에서는 취재와 논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편집국 체제가 필요하다. 즉 통일문제와 국제뉴스를 같은 부서에서 취급하고, 민중의 생존권 문제와 인권문제도 하나의 부서에서 다뤄야 한다. 노총, 노동자, 농민단체와 각종 인권단체들이 주요 출입처가 되고 종래 문화부에서 다루던 여성문제도 성차별을 비롯한 인권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대중의 생존권, 인권, 공해와 환경,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주요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심층 보도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한 쟁점이 발생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심층보도 부서에서 팀을 구성해 집중 취재하는 방식이다. 각 부서는 분야별 팀을 두어 그 팀의 수석이나 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논설을 담당한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여론매체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할 상설부서가 필요하다. 독자의 반론 권만이 아니라 그 의사까지 지면에 보장할 독자부의 기능도 강화되고 외부 필진도 이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발의자, 발기인, 설립회원들은 다른 신문에 없는 귀한 자산으로 각 분야의

필진과 적극적인 독자, 모니터가 이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할 매체와 독자부를 여론·매체부로 하고, 제도권 정치와 함께 재야 정치세력의 동향과 여론도 포함시킨 정치에다 경제를 합친다면 취재인원도 줄일 수 있다. 보사, 교통, 체신, 체육부 등 민중생활과 관계깊은 부서는 생활분야로 분류하고, 환경청은 환경의 범주로 분류해 공해반대운동, 소비자운동단체, 병원과 의료관계기관을 합쳐 생활·환경부로 출입처로 삼는다. 사건 기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과 학원문제를 다룰 사회·교육부를 만든다. 새 신문은 독자적인 지방뉴스 체제와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언론이 지방관청 주변에 기자를 배치하는 대신 공업단지와 같은 주요기사 공급지대 중심으로 배치하고, 이들 상주 기자외에 여러 부문의 활동가,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 분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일정기간의 본사 교육을 거쳐 우수한 취재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새 신문은 12면에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삼았다.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가로쓰기는 반드시 실시한다. 가로쓰기는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물의 대부분에 채택되어 있고, 읽기 쉽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기존 신문만이 유독 세로쓰기를 고집하는데 20 - 30대 젊은 층에게는 가로쓰기가 훨씬 익숙하고 편할 것이다.

기사 양식(스타일)과 표제의 경우, 보도할 가치가 있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각 분야별 기사의 취재지침 확립이 중요하다.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는 식으로 우연적인 사건, 역설에 집착하는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서 탈피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도시철거민의 고난, 인권문제와 같은 가치 있는 현실의 보도에 노력과 지면을 제공해야 한다. 새 신문은 정치 기사의 경우 정치의 주요 동향을 가늠하는데 계기가 될만한 사건이나 현상을 진지

하게 다뤄야 하고 대신 정치를 한낱 애깃거리로 다루는 정치가십 기사란을 아예 처음부터 두지 않는다. 외신, 국제뉴스도 강대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실려 있을 시각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안해 국제정치, 제3세계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기사들을 재구성한다. 새 신문 자체의 해외취재망을 확보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해직기자나 학자, 지식인 중에서 최소의 취재 활동 비용으로 동참할 사람을 구한다. 신문의 면 배정은 새 신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최소한 1면과 논설면에 광고를 신지 않도록 하고 주목도가 높은 12면도 기존신문이 광고를 위해 희생시켰지만 새 신문은 좀도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본다.

(2) 편집국 체제 구성

신문사의 편집국 체제는 정보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언론사와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주 신문으로써의 편집국은 당연히 당시 기존 언론과 다른 정보가공 체계를 갖춰야 했다. 즉 당시 기존 언론이 잘 다루지 않거나 다루다 해도 매우 미흡하게 보도하는 분야를 주로 부각시켜 보도한다는 원칙 등이 수립됐다. 그것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창간된 신문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당시 민주화를 촉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야 할 국민주주 신문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대중지의 방향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다는 점, 특히 광고업계의 기호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신문 제작 과정에서 내부적 조율이 불가피했다. 신문 제작에는 민주화 또는 사회 운동의 기사를 충분히 다루되 운동권이 아닌 일반 독자도 이 신문의 고객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신문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동시다발적인 많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고, 특히 어려운 일은 편집국 구성원간의 의식 및 인식차이였다. 편집국 구성원들은 여러 부문, 예를 들어

언론운동 현장의 매체나 당시 정부 기관지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이 신문의 창간과 함께 같이 모여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방식이나 판단 원칙이 매우 달랐다. 그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신문을 만들면서 결국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인을 주요 독자로 하고, 일반 광고주를 광고 고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는 편집국 구성원들이 기존 언론에서 통용된 시각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강조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독자와 광고주를 만족시킬 기사의 발굴과 보도는 결국 장기적으로 이 신문의 생존여부와 직결된다는 쪽으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문이 다른 일간지와 차별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겨레신문은 창간을 앞두고 창간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물론이고 기자들도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각 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신문연구 49호, 1990, 60-63). TV프로그램을 실을 것인지 여부, 주식시세표 게재 여부, 프로스포츠를 다룰 것인지 여부, 연재소설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기존 신문이 당연시하고 있는 지면 구성의 요건을 꼭 따라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많았지만 결국은 일반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에서 결론이 지어졌다. 즉 대중이 요구하는 것을 억지로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수용됐다.

그러나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다른 신문들이 수 년 내에 뒤따라 온 것은 한겨레신문이 선도한 대표적 신문제작 방식의 하나였다. 우선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는 일제 강압으로부터 벗어난 지 수 십 년이 지난 뒤에도 변치 않았던 일제 잔재의 하나였다. 이는 언론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주요한 증거이기도 했다. 지식 산업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 일제치하의 지면 제작 형식을 전혀 수정치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뿌리깊은 일제 잔재의 온존현

상을 대표하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이 한글만을 사용하고 가로쓰기를 시도하자 많은 한겨레신문 독자들이나 그 밖의 시민들은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정보 전달 수단인 문자 사용에서 일간지가 시도한 혁신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그 같은 시도에는 당연히 반발이 뒤따랐다. 즉 신문 지면이 한글만을 사용하는 것은 한자와 병용하는 신문에 비해 기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무게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로쓰기의 경우도 불만이 제기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반대론자들은 세로쓰기가 이조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자 쓰기 형식이라서 새삼스럽게 가로쓰기를 하는 것은 우선 눈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겨레신문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실현했고 그후 다른 일간지들이 이를 뒤따라오게 되었다. 이는 신문 제작 형식면에서 한겨레신문이 달성한 혁명적 변형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창간일자를 5월15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창간 준비에 돌입하면서 편집국 구성 등에 들어갔다. 편집국의 구성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자는 민주 집중제라는 논의 구조를 도입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는 편집권이라는 자원의 집행방식이 기존 언론사의 경우 편집국장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신문사 편집국의 논의 구조는 기사 마감, 신문 제작시간 등의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상 특징이 있어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최고 책임자가 결단을 내리는 식이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그 같은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편집국의 권한을 각 부서의 장인 편집위원과 편집위원가운데 뽑은 편집위원장 등이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3) 신문 지면 구성

새 신문은 한글 가로 짜기 8단으로 편집기로 하는 등 전체 8개 면의 지면 구성 내용이 한겨레소식 10호에 실렸다. 1,2면은 종합면으로 정치, 경제, 민생, 인권, 민족, 국가, 사회, 교육 관련 뉴스중 비중있는 기사를 실는다. 기존 일간지가 주로 정치관계 기사를 1면에 실고 있으나 뉴스 가치에 따라 문화나 과학 관련기사도 1면에 다룬다. 무게 있는 기명 칼럼 '한겨레 논단'이 주 1회 1면에 실리고 보통 두 편이 될 사설은 2면에 실는다. 이와함께 2면에 주로 정치경제부와 민족국제부의 해설 기사를 실는다.

3면에는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나 사건, 현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망하는 해설기사가 실린다. 이같은 일반 해설기와 함께 정기성을 띤 고정란도 2,3개 정도 실린다. 즉 '국제초점'은 세계 도처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문제나 흐름중 한 주일 동안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잡아 파헤치는 심층해설기사로 주 1,2회 실린다. '세계의 맥박'은 흥미위주의 해외토픽을 실지 않는 대신 바깥 세계의 신선한 소재를 골라 4,5매 정도 주 3회 다룬다. 또 '정국기상도'와 '경제프리즘'은 각각 한주일 동안 정치, 경제분야에 나타난 중요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고, '도리깨'는 취재기자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개연성 있는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가십과 같은 고정란이다.

4면은 새 신문의 가장 특색있는 면으로 여론매체부가 꾸민다. 즉 기존신문과 달리 담당 기자의 특권의식과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독자들의 견해나 주장을 가감 없이 반영하며 또한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의 기능을 비판, 감시한다. 이를 위해 매체 비판과 함께 독자의 편지는 '국민기자석'이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받아드리고 한겨레신문의 기사와 논조에 대한 반론권은 '반론...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아래 적극 반영된다. 각 분야의 전문 필진이 시사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 논평하는 칼럼 '이렇게 본다'와 시사만평도 4면에 실린다. 5면은 문화과학면으로 문학, 예술, 학술, 출판,

종교, 과학 등을 다른 기사들이 실린다. 흥미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화에 기여할 기사를 폭넓게 소화해 상업주의 문화, 지배계층의 문화보다는 민족혼의 토양인 민족문화의 보존, 육성에 주력한다. 과학 부문은 '과학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정보제공은 물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한주일동안 분야별로 나타난 특징적인 문화현상을 다룬 문화시평을 주 1회 신고 연재소설과 TV프로그램도 5면에 실는다.

6면은 사회교육부와 민생인권부의 해설기사로 채워진다. 해설기사는 사회적 문제성을 지닌 사건이나 교육, 학원, 노동, 농업, 인권 관련 문제들을 다룬다. 한주일 동안 노동, 인권 부문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 인물을 골라 초점에 맞춰 짧게 인터뷰하는 고정란도 주1회 이 면에 실는다.

7면에는 사건 기사를 중심으로 교육, 학원관계 기사, 지역뉴스, 노동자, 농민, 인권관련 기사가 실린다. 기존 일간지의 사회면에 해당하며 이 면에는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약간의 주관성을 곁들여 쓰는 '동네방네'가 실린다.

8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면이다. 공해 문제는 행복한 삶과 관련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기사도 이 면에서 다뤄진다.

제2절 창간의 정치 사회적 영향

1)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한겨레신문 창간전후의 시대 상황의 변화는 87년 대선과 88년 총선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의 합법적 재등장과 여소야대의 출현과 함께 시민사회운동의 공간확대가 가능한 잠재력이 증대된 결과를 가져왔다(정관용, 1990, 127-137). 87년 대선 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어 군부독재의 합

법적인 재집권이 이루어지자 이들 군부지배계급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창출하고자 했지만 36%의 낮은 지지율과 5공과의 관련성 등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었다. 보수야당은 대선 시기의 분열에 따른 사회적 불신 등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시민사회운동세력은 87년 대선 패배 후 88년 총선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는 보수 야당의 견제 의미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 나타난 여소야대 국회는 군부독재의 단일한 지배를 견제한다는 의미와 함께 여야 협조체제를 통해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었다.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시민사회는 종래의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에서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가시화 되는 변화를 겪었다. 88년 총선 이후 부각된 정치적 쟁점은 5공 청산, 광주학살 책임 규명, 악법개폐, 통일운동 활성화 등이었으나 90년 3당 합당은 이 같은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독점자본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치면서도 88올림픽 등을 통해 경제호황의 이익을 확보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이 3당 합당으로 연결된 것은 독점자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가시킬 안정적 정치구조를 구축한 것을 의미했다. 독점자본은 경제력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북방정책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사회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했다. 6공화국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민간주도 경제운영방식을 통해 기술지원으로 자본축적 메카니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이해조정자(state as umpire)의 역할을 담당해 과거 5공화국이 추구한 기업체적 국가(state as enterprise)와는 다른 국가 성격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공화국은 5공화국의 잔재를 청산치 못한채 출발했고 기존의 지배연합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해 결국 경제민주화정책은 후퇴하고 자본으로부터는 기업확신(business confidence)을 상실해 국가 관리능력이 약화되는 등의 위기를 맞

게된다(김석준, 1992, 552 - 86).

결국 6공화국 하에서는 민주화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시민사회 영역 또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원인은 국가에 의한 분열·이반 정책의 결과로 허약해진 시민사회와 국가의 강경해진 노동 탄압정책으로 시민사회 성장의 주요 부문이었던 노동운동세력의 약화였다(임희섭 1998, 81). 정치적 지배구조의 재편은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기층민중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 국민당의 창당은 지배세력의 정치구조와 통치방식이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적합치 않다고 판단한 독점자본이 능동적으로 정치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민당은 3당 합당으로 형성된 여·야 구도를 3당구도로 전환시켰지만 그것은 결국 지배계급의 분열과 정치적 구조개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종오, 1992, 439).

노태우 정권의 언론과의 관계 새로운 언론관계 법률, 언론민주화운동, 언론기업의 성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김영선, 1995, 175). 언론관계 법률은 전두환 정권의 악법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았으나 여전히 자유언론을 보장하기엔 미흡했고, 그로 인한 언론민주화운동이 그 공백을 메꾸게 된다. 그렇지만 언론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자본통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언론민주화운동을 통제하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겨레신문 창간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계의 변화는 매우 급속하고 컸으며 그것은 새 신문 창간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즉 1987년 8월에는 신문사 주채기자제도가 부분적으로 부활됐고 9월에는 6년 만에 신문이 증면됐다. 신문잡지의 발행이 자율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11월 언기법이 폐지됐다. 당시 언론시장의 특징은 국민주주 신문 창간을 표방한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와 종교계의 각 종파가 일간지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을 창간하거나 방송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도 단위

의 지방신문과 서울지역 구, 동 단위나 지방 군 단위의 지역신문 창간이 늘어났다 또한 경제지, 시사잡지와 여성잡지도 창간러시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신문기업의 경영방식 변화와 대기업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 복지와 편집권 문제를 쟁점으로 87년 10월 29일 한국일보 기자 노조를 출발로 신문사마다 언론노조가 결성되고 언노련도 결성됐다.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정권의 언론정책은 언론기본법을 폐기하고 만들어진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대체입법은 문공부 장관이 정기간행물의 정·폐간을 명할 수 있는 등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할 수 없고 등록 없이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다. 시설기준도 일간신문이면 타블로이드 2배 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 부 이상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등록 취소도 취소의 경우 그 결정을 법원의 심판에 맡기기로 한 것만 달라지고 발행정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화공보부장관이 3개월 내지 6개월 간에 걸쳐 그의 재량으로 정기간행물의 정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정권은 과거 정권의 강권적 직접적인 언론 통제방식 대신, 자본의 직접적인 언론지배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광고주의 지배력 강화를 통한 간접적 통제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주돈황 외, 1997, 218 - 229). 우선 노 정권 하에서는 신문의 창간과 복간이 붐을 이루면서 신문산업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한겨레신문 창간을 전후해 정부의 일간지 발행 자율화 조치에 힘입어 중앙지 특수지 지방지가 다수 창간되었다. <표5-1>과 <표5-2>에서와 같이, 중앙지는 4개지, 특수지는 9개지, 지방지는 19개지가 창간되거나 복간되었다.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창·복간 지는 독점자본에 의한 소유,

경영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종래 국가로부터 행해진 신문산업에 대한 통제가 자본에 의한 통제로 이행했다²³⁾.

<표5—1> 6.29 이후 창간된 중앙지와 특수지

(중앙지)

제 호	창(복)간일	발행인	발행지
한겨레신문	1988. 5. 1	송건호	영등포구 양평동2가 1-2
국민일보	1988. 12. 10	조용우	마포구 신수동 371-16
세계일보	1989. 2. 1	곽정환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민주일보	1989. 11. 21	김영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7

(특수지)

제 호	창(복)간일	발행인	발행지
서울경제신문	1988. 8. 1	권혁승	종로구 중학동 14
중앙경제신문	1988. 8. 9	이종기	중구 순화동 7
일간공업신문	1988. 9. 1	엄자경	중구 명동 2가 1
중학생조선일보	1988. 9. 1	방상훈	중구 태평로1가 61
대한경제일보	1988. 2. 28	은재표	용산구 청파1동 162
조세금융일보	1988. 10. 15	이원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금융증권일보	1988. 11. 15	정육수	마포구 마포동 153
내외경제신문	1989. 6. 1	최서영	중구 회현동3가 1-12
스포츠조선	1990. 3. 27	신동호	중구 태평로1가 61

23) 정용준은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해 창간된 합법적 언론매체인 한겨레신문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점으로 ①언론의 계급적 성격—언론자본의 성격 ②광고주로부터 독립성의 정도 ③주된 독자, 시청자 층의 계급적 집단적 성격 ④기자 및 경영진의 언론관 및 편집 편성 정책 ⑤언론조직의 의식성과 조직성 등을 제시한다 그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가 민족민주운동에 기여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독점자본언론들과의 외로운 이데올로기투쟁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언론에 대해 거는 기대가 존재하고 이들 언론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겨레신문은 87년 민주항쟁의 산물로서 민족민주진영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나왔으나 점차 민족민주 진영의 뜻을 저버리고 빠르게 부르주아지 언론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정용준, 1990, 316).

이는 언론사간의 자율경쟁 강화와 기존 언론독점구조의 온존으로 이어졌다. 언론사간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6월 항쟁이후 활성화된 즉 직접적인 통제보다 독점자본의 언론소유를 장려해 독점자본의 언론통제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매체출현을 장려해 언론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자사이기주의를 통한 언론민주화운동에 제동을 걸고, 광고주로서의 독점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기존 언론자본의 독점적 구조를 온존시키려 한 것이다. 의한 광고주의 지배력 강화를 통한 간접적 방식을 택한 것이다.

<표5—2> 6.29 이후 창간된 지방지

제 호	장(복)간일	발행인	발행지
국제신문	1989. 2. 1	최식립	부산시 동구 범일동 252-127
향도일보	1989. 1. 25	최주식	부산시 동구 대청동2가 7-1
경기일보	1988. 8. 17	윤석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03-2
경인매일신문	1989. 12. 15	이양우	안산시 와동 152-1
기호신문	1988. 7. 20	서강훈	인천시 중구 중앙동1가 1
인천신문	1988. 7. 15	문병하	인천시 중구 향동4가 2
남도일보	1988. 12. 10	이순항	마산시 중앙동3가 3049
경상일보	1989. 5. 15	김상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39-9
신경남일보	1989. 2. 25	심홍치	진주시 상청동 2B-4L
경북일보	1988. 7. 30	김양호	대구시 북구 대현동 229-1
영남일보	1989. 4. 19	박배근	대구시 중구 서문로1가 71
중도일보	1988. 9. 1	이용렬	대전시 중구 대흥2동 501-1
중부매일신문	1990. 1. 20	이상훈	청주시 봉명동 642-1
전북도민신문	1988. 11. 22	송주인	전주시 고사동1가 340-1
전라일보	1988. 12. 20	이치백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
무등일보	1988. 10. 10	박성섭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8-10
전남일보	1989. 1. 7	이훈동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154-1
전남매일신문	1989. 6. 29	안광양	광주시 동구 학3동 901-303
한라일보	1989. 4. 22	강영석	제주시2도 2동 1176-76

주 : 대한경제일보는 1989년 11월 8일부터 휴간중.

조세금융일보는 1989년 7월 31일부터 휴간, 1990년 6월 제일경제신문으로 복간.

남도일보는 경남매일로, 기호신문은 기호일보로, 향도일보는 부산매일로 개제, 민주일보는 1991년 7월 폐간신고 냄.

<자료 출처 : 한국의 언론 I, 1991, 226-227>

노 정권의 언론정책의 근간은 독점 자본의 언론진출 장려를 통해 기존의 언론독과점 구조를 온존시키려는 것이었다. 편집권을 둘러싼 언론계 내부의 언론민주화운동은 자사이기주의의 증대로 약화되었다. 노 정권의 언론자율화 정책은 수많은 신생매체의 등장과 언론산업 자율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3년 만인 1990년 전두환 정권 때와 엇비슷한 과점적 신문시장질서로 재편되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중앙언론사의 카르텔. 지방지의 1도1사 원칙에 의한 독과점적 이익 보장이라는 강압적 언론통제 대신 노태우 정권은 자본의 직접적인 언론지배와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광고주의 지배력 강화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문의 상대적 자율성이 증대되고 신문은 정권 전체에 대한 총체적 충성이 아닌, 특정 정파와 선택적 친화력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등 언론권력의 등장이 구체화되었다. 방송은 서울 방송, 교통방송의 설립, 교육방송의 분리 등을 통한 방송구조 개편이 이뤄졌는데 이는 상업방송의 폐해를 명분으로 공영화했던 방송이 다시 공·민영 이원체제로 환원된 것을 의미했다. 이 같은 방송구조개편은 6월 항쟁이후 활성화된 KBS, MBC 등의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기도 한다(주동황 외, 1997, 220-222).

2) 언론기업의 카르텔 파괴와 경쟁 심화

신문기업은 87년을 전후해 발행의 자유에 편승, 출판물 종류를 다양화하고 언론기업을 기업군화 하거나 그룹화 하면서 대기업화 되고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 신문은 카르텔 파괴와 함께 부분적인 자유경쟁 시대를 맞아 뉴

미디어 도입은 물론 새로운 기술도입에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에 전력했다. 정보량의 증가와 신규 신문의 창간이 늘고 동종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각 신문사는 이에 대응해 제작 기술 개발투자를 늘린 것이다(원우현, 1991, 147 - 176).. 각 신문사는 인쇄와 재판 부분에서 80년대 중반부터 활판제작방식에서 오프셋제작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89년에는 국내 신문사 대부분이 오프셋제작 방식으로 전환했다. 재판 부분에서도 80년대 말부터 컴퓨터에 의한 재판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초보적인 CTS방식이라 할 수 있는 사진 식자기에 의한 출력방식인 페이스트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89년 이후 각 신문사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속에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뉴미디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미 KETEL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은 88년 12월에 온라인 리얼 타임 전자신문 MEET의 대외 서비스를 시작해 증권사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중앙일보도 89년에 뉴미디어 전용의 대형 컴퓨터 설비를 도입하고 '중앙 JOINS'를 가동, 인물정보나 문헌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조선일보는 88년에 독자정보 서비스 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89년에는 데이터의 광 디스크 수록을 검색하는 2단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표5-3>에서와 같이, 80년대 언론인구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신문발행의 자유화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80년 신문 통신 방송사 등 64개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1만 8,703명이던 것이 통폐합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7년에 2만명 가량 됐고 88년 이후에는 창·복간된 일간지 23개사에서 5,978명을 채용했다. 당시 기자들의 임금수준은 우리 나라 대졸이상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측면에서 언론인 아파트 분양, 해외연수, 세금공제, 자녀교육비 부담 등으로 그들의 경제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한국의 언론 I, 1991,

234).

<표5—3> 80년대 언론계 종사자 증가

	1980	198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신문	10,210	8,849	9,881	10,778	10,898	11,008	11,652	17,507
방송	7,065	7,297	8,721	8,117	8,602	9,144	10,210	11,061
통신	1,208	640	653	664	675	683	666	570
합계	18,703	16,786	19,356	19,559	20,175	20,385	22,528	29,138

<자료출처 : 한국의 언론 I, 1991, 233>

3) 새 신문의 기존 언론계 편입과정

한겨레신문의 창간과 때를 같이 해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변화들은 소련과 동구권 변동 등에서 가속화된 동서이념 대결의 종식, 국내 민주화 가속화 등이었다. 신문사의 환경은 신문사 직원들의 성향을 변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신문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환경,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문의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에 사회적 호응이 컸던 것도 창간 당시의 제반 모순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그 해소를 위한 구체적 수단 확보라는 함의가 있었다. 노태우 정권이후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에서 해방이후 금기 시 되었던 사회주의 서적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지면서 일부 좌파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탐구 열풍이 불었다. 그 같은 과정이 한겨레신문에도 영향을 미쳐 6.25전쟁이후 금기 시 되었던 미국에 대한 객관적 비판과 주한미군 조명등이 이뤄졌다. 한겨레신문이라는 언론 자원이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에서 활용된 것이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해소가 가능한 단계로 인식한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 및 대학가에서는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는 일거에 이념적 방향상실 현상을 나타냈다. 이처럼 창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달라져 편집방향의 혼선과 언론운동 조직체로서의 한겨레신문의 목표와 방향설정에서의 혼란 등으로 내부 결속력이 약해져 내부 갈등이 격화된 측면도 있다. 한겨레신문은 창간이후 제도권으로 진입해 환경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제도권 언론의 생존전략 추진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김해식, 1994, 320-321). 우선 국민주주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광고수입과 구독료에 의존한 수입구조에 따라 기존언론구조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 이 신문이 경쟁과 생존을 위해 광고수입을 증대시켜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창간당시의 신문제작 원칙들은 변형되어 중산층을 겨냥한 신문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동황 등은 한겨레신문이 노태우 정권의 신중 언론정책인 '언론시장 개방과 경쟁 격화' 구조 속에서 신문의 성격이 변화돼 갔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의도와 취지와는 무관하게 신문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시장의 운동방식에 적응해야 했다. 신문시장은 판매수익만으로 신문을 유지할 수 없고 광고수입에 수입의 70%이상을 의존해야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구조로 변모해 있었다. 신문사 경영을 위해서는 광고수입을 늘려야 했고, 그 결과 주 독자층을 구매력 있는 중산층으로 삼아야 했으며 그 결과 노동현장에 대한 보도가 줄어들었다. 대신 소시민을 위한 생활정보, 관광명소 안내, 대중문화 비평 등이 들어서고 스포츠 면이 선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주동황 외, 1997, 232-236). 제도권 언론으로서의 한겨레신문은 창간 당시 사회적 기대치로 부여되었던 사회운동조직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존의 언론사의 특성을 닮아간 반면 다른 신문들은 한겨레신문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드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한겨레신문은 다른 언론사와 구별되던 독특한 공동체 결속력으로 제시된 윤리강령의 엄

격성이 점차 허물어져 초창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갔다. 즉 외부기관의 보조를 받아 장기 해외연수를 간다던 지, 기업의 지원으로 돈이 많이 드는 기회기사취재를 가는 등 다른 신문사와 큰 차이가 없는 쪽으로 변해갔다. 한편 다른 신문들은 한겨레신문의 가로쓰기, 한글전용 등을 흉내냈으며 회사에서 정식으로 촌지수수를 금하는 조치 등을 취했다. 이런 과정은 이질적인 조직체들이 갈등을 겪지만 내부 조정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로 수렴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1) 차별성 유지와 공존

한겨레신문은 창간직후 기존언론사들의 공동조직체인 신문협회나 기자협회 등이 신문의 카르텔 존속이나 언론의 담합 등 부정적 관행에 일정부분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의 가두판매 등을 위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등 기존 언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영업 방식을 택했으며 언론사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등의 법률적 혜택도 거부하지 않고 활용했다. 단지 기자실에서 제공하거나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촌지 등은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존언론사 언론인들은 촌지의 수수가 아주 자연스러운 관행이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촌지를 거부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촌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기존언론사 기자들은 촌지를 받지만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근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었고 일선 취재현장에서의 이 같은 관계는 언론사대 언론사의 관계에까지 연장되었다. 새 신문의 윤리강령은 해외취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였으며 해외연수는 초창기에는 엄격하게 금했다. 기사와 광고를 연계시키는 것도 금기사항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신문제작과 관련해 청와대 등의 주요 정보제공기관에서 이

른바 보도협조(외국 원수의 한국 방문이나 한국 원수의 외국 방문 사실을 일정 시점까지 보도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요청하고 언론사가 이를 받아 드리는 관행의 하나) 요구를 해올 경우에도 대부분 편집국에서 공론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다. 한겨레신문과 기존 언론사간의 이 같은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좁어져 갔다. 해외연수도 다른 언론사와 별 차이가 없이 허용되었고, 광고와 연결된 기사가 자주 지면에 실리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언론사와 닮아가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한겨레신문과 다른 신문과의 차이는 가난한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라는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겨레신문은 기존 언론과의 차별성 속에서도 창간초기 매출총액, 매출 총 이익 등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즉 창간 2년 후인 1990회계 년도에 매출액은 164억 원, 1991년 179억 원, 1992년에는 2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의 경우 그 전해보다 9.1% 늘어났고, 1992년에는 그 전해보다 31.8%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 총 이익도 1990년 49억 6천만 원에서 1991년에는 60억 원(전년 대비 21% 증가)으로, 1992년에는 83억 8천만 원(전년 대비 40% 증가)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상과 같은 추세는 여러 각도에서 그 원인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으나, 한겨레신문이 광고시장에서 크게 배척당하지 않고 점차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 기존 신문의 한겨레신문 배척

기존 언론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한겨레신문 기자의 출입처 제한이었다. 창간초기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곳곳의 출입처 기자실에서 '배척'을 받았다(신문연구 49호, 1990, 64-65). 이는 신문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는 자원에 대한 한겨레신문 구성원의 접근을 저지한 것이다. 정보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신문이라는 상품은 다른 경쟁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정상적인 신문

경영이 어렵게 된다. 한겨레신문의 관공서 기자실 출입은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거부에 의해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대분 해당 기자실의 기자들의 전체 의견을 출입처가 대변하는 것이 상례였다. 청와대는 창간한지 2년이 지나서야 한겨레에 대해 기자실 출입을 허용했다. 청와대 쪽의 해명은, 기자실이 비좁아 프레스센터 신축 이전에는 한겨레신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겨레신문은 지령1백호를 낸 다음날인 그해 9월9일 송건호 대표 명의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한편 이 서한을 신문에 게재했다. 서한은 “한겨레신문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공부에 등록돼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일간지 중 유독 본지에 대해서만 청와대 출입자체를 봉쇄해 뉴스 원에 대한 접근권조차 허용치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한겨레신문이 문공부로부터 등록 필증을 받은 뒤 지난 5월9일 청와대 출입·취재 요청 공한과 출입내정기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지난 7월14일자 항의 공한에 대해서도 7월29일 홍성철 비서실장 명의로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짧은 회신만 보내왔었다”고 상기시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자실이나 특별한 편의 시설의 제공이 아니라 뉴스 원에 대한 접근권 자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겨레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을 때 노동쟁의현장의 노동자들과 학원시위현장의 학생들은 한겨레 취재차량이 도착하면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로 맞아주곤 했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한때 한겨레 기자만 취재를 허용했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한겨레 기자만 찾으면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 쟁의속보를 뿌렸다.

한겨레신문의 기자실 출입 저지는 청와대 등 관공서 뿐 아니라 비 관공서 출입 처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이처럼 후발 신문사 기자의

기자실 출입이 저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선발 신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경쟁지가 출현하면 자기가 속한 신문사의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상업주의적인 방어태도는 민주적 언론의 출현과 그 번성을 억제하려는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방향이 같았다. 권언유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권력과 기존 언론조직들의 이해관계 일치는 신생 신문의 출현으로 야기될지 모를 부정적 현상에 대비해 취하는 방어적 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실은 그 운영비가 대부분 언론사가 아닌 기자실을 제공하는 조직에서 부담하고 있어 특정 언론사나 그 언론인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기자실은 언론사들이 출입처를 상대로 무한 취재경쟁을 하는 것을 피하고 출입처에서 공급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자실 출입 제한은 이같은 기회를 제공치 않아 관련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생지에 대한 기자실 출입제한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한겨레가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을 창간호에 게재하고 나서자 기존 언론사 기자들은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신문연구 49, 1990, 64-65). 이는 촌지라는 음성적 자원의 뿌리깊은 수수 전통이 한겨레신문의 촌지거부 선언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대한 저항의 표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기자들은 기자실 출입금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기자실은 어디까지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자단이 출입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기자실을 이용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길어야 6개월 이내에 해결됐다. 기존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겨레에 대한 기자실 출입금지·제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움직임이 일면서 그런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제 3절 창간이 언론문화 등에 미친 영향

1) 한겨레신문의 보도 특성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키 위해 이 신문이 창간된 1988년 5월15일부터 4개월뒤인 같은 해 9월15일까지 발행된 105일치의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1면 머릿 기사를 분석했다. 이는 당시 조선일보가 기존일간지의 대표적 신문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분석기간 동안의 두 신문 1면 머릿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통일, 국제 및 기타 등6개 분야로 나누고 이들 기사를 현상에 대한 단순한 보도기사인지, 아니면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인지로 대별해 그 빈도수를 확인해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표5-4>에서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두 신문의 1면 머릿 기사로 가장 많이 실린 분야는 사회로 그 빈도수는 65회, 그 다음은 정치가 58회, 통일이 49회, 국제가 19회, 경제가 14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 가운데 사회, 정치, 통일, 경제 등 4개 분야의 기사를 현상에 대한 단순보도인지 아니면 개혁과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인지로 나눠 분류했다. 그 결과 사회분야의 단순보도 빈도수는 조선 9, 한겨레신문 1로 나타나고, 개혁개선요구보도의 빈도수는 한겨레신문이 26회, 조선은 거 절반인 13회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정치, 통일, 경제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정치의 경우 현상 단순보도 빈도수 비율은 조선28 : 한겨레신문 14, 개혁, 개선요구보도의 빈도수 비율은 그 반대로 한겨레신문 12 : 조선일보 4로 나타났으며 통일분야도 단순보도 빈도수 비율은 조선 9 : 한겨레신문 1,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는 보도의 빈도수 비율이 한겨레신문 26 : 조선일보 13이다. 이는 결국 한겨레신문이 현상을 단순보도가 아닌 개혁과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를 많이 실는 경향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겨레신문이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함으로써 의제설정의 기능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5—4>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특성 비교

분 야	보 도 성 향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합 계
정 치	현상 단순 보도	28	14	42
	개혁·개선 촉구	4	12	16
사 회	현상 단순 보도	9	1	10
	개혁·개선 촉구(노동쟁의포함)	20	35	55
통 일	현상 단순 보도	9	1	10
	개혁·개선 촉구	13	26	39
경 제	현상 단순 보도	4	1	5
	개혁·개선 촉구	1	8	9
국 제	사건·사고	13	6	19
기 타	올림픽·문화	5	1	5
합 계		105	105	210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기사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종래 정부의 보도지침 등에 의해 권력에 순치된 언론과 다른 시각에서 보도하고 논평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착화된 보도평가 기준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되었다. 즉 기존의 언론들이 외면하거나 왜곡했던 민중 또는 시민 운동 부문에 대한 적극적 보도를 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의도된 무관심과 냉대를 받았던 시민운동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기존언론들의 외면현상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해소되고, 민주·민중·통일 가치의 실현을 지면을 통해 추구할 수 있게되고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가능해졌으며 학생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²⁴⁾.

한겨레신문의 기자들은 창간 당시의 기존언론이 객관적 보도태도에 매달려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는 현실의 타개책으로 가치보도 쪽에 더 비중을 둔 보도태도를 취했다. 단순히 사진을 찍듯이 현상의 표피적인 면만을 드러내는 사실보도 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가치보도를 지향한 것이다. 김정탁도 한겨레신문 창간이후 2년이 지난 뒤 한겨레신문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을 동시에 전달하여 이를 여론화하는 방법은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존 신문의 방식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겨레신문의 성격과 관련지어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진다. 즉 한겨레신문이 '당파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신문들은 '불편 부당지'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편 부당지만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24) 유재천은 한겨레신문이 창간후 3년 동안 기존 언론과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의 실현에 신문제작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즉 민주주의적 모든 가치의 온전한 실현, 민중의 생존권확보와 생활수준의 향상, 분단의식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지향 등 민족·민주·민중언론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왔다. 둘째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기 위해 갖추어야만 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권력·대자본·광고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모금에 의한 자본형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영상의 압박이 주는 유혹을 거부한다는 것은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 편집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편집국장의 권한보호, 기자를 위한 양심조항, 인사권에의 참여, 기자의 권한유지를 위한 편집협의회 설치 등이 그러하다. 이른바 내적 자유와 확보이다. 넷째 창간과 더불어 채택한 '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비롯해 독자의 반론권 보장·오보의 정정·취재원의 보호·사생활의 보호 등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드러냈다. 첫째 시각의 편향성이다. 중요한 관심사일 경우 쌍방의 입장을 공평하게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의 견해나 이익만을 대별하고 옹호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편향성과 연관된 문제로서, 보도기사의 경우 기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필요한 사실만을 선택해 뉴스를 조직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명백하게 규정된 목표를 위해 뉴스를 조작한다면 그것은 선동에 다름아닐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겨레신문 역시 사건 위주의 신문제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연관 사건의 발생과 상관없이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시사저널 1991년 4월18일자, 22).

소외계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언론이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겨레신문의 당파성은 갈등의 제도화를 위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김정탁, 1990, 87).

(1) 소외계층의 커뮤니케이션 소외감 해소

한겨레신문은 기존의 사회 또는 정보 자원의 생성과 분배에 대한 체계 변화를 요구한 6월 항쟁의 민주화 욕구의 구체적 성과물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회 운동론에 입각한 특성을 지닌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신문의 제반 불평등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취해야 할 사회운동 목표의 강조는 자연히 기존 일간지와 차별성을 나타냈다. 즉 이 신문은 민족통일과 정치적 민주화 및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 가치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 구현에 있어 기존의 신문에 비해 매우 민중 지향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월간경향, 1988년 8월호, 284-299). 김정탁은 한겨레신문의 등장을 가능케 했던 사회적 배경으로 우리사회에 서 커뮤니케이션 소외계층이 양산되고 있었으나 그 같은 갈등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어온 사실 등을 지적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차단되면서 그같은 갈등상황을 해소할 새로운 신문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는 것이다(김정탁, 1990, 86). 그의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 언론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우리 언론이 보다 익숙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시각보다는 정치인의 시각이, 경제적으로는 없는 자의 입장보다는 가진가의 입장이, 문화적으로는 체제 지향적인 문화인의 입장이 체제 초월적인 문화인의 입장보다 항상 우선했던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자세는 유신체제를 우리사회에서 어서 빨리 종식시키지 못하게 기여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구조가 보다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하고, 문화적으로는 사람들의 의식을 군사문화로부터 쉽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 했다고 보여 진다. 그 결과 사회 내에 표출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도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결코 여론화하거나 조직화하는 길을 영원히 봉쇄당한 커뮤니케이션 소외계층이 우리사회에 마구 양산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커뮤니케이션 소외계층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표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과 노사현장, 그리고 학원 등지에서 극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즉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에 존재한 하나의 현상이었다.....

한겨레신문은 그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발 당시부터 국민주모금과 같은 획기적인 방식을 취하고 개인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주식소유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의해 신문의 보도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경영으로부터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편집국장을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조치도 취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한겨레신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내부 조직원의 충원도 왜곡된 언론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 74년 동아 조선의 해직언론인과 80년의 해직언론인이 중심이 되어 신문사를 구성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와 조직원 구성으로 한겨레신문은 그 창간 당시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그 같은 구성에 대해 김정택은 독자들에게 꼭 어필해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좋은 독자'라면 모르지만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김정택의 경고는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 창간이후 수년이 경과한 뒤부터 이 신문은 정체성 확립과 독자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끊임 없이 고민해야 했다.

한겨레신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제도화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방식의 기사를 작성하느냐로 귀결되었다. 김정택은 이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을 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사실보도, 객관적 보도는 적절치 않으며 옳고 그름을 기사 속에서 보여주는 방식, 즉 평가적

사실보도라는 형식을 취했다. 당시 언론은 특정 시점에 표면화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원인, 구조적 모순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사분규 현장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므로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살인적인 근무조건과 저임금의 실상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객관적 보도가 갖는 그같은 맹점을 배격하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양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을 스트레이트 기사에 담는 식의 새로운 보도방식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한겨레신문이 창간 초기 신문 제작 과정에서 '노사분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노동쟁의'라는 용어를 고집했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노사분규는 노사가 법률적으로 균등한 입장이 보장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갈등현상으로 한겨레신문은 내부적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노동자보다 사용자의 권익이 차등적으로 우월하게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데 반해 노동자는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법률적인 보호가 박탈된 상태로 규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자에 비해 차등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투쟁하는 상황은 노동쟁의라 이름 붙였다(신문과 방송, 1988년 6월, 73).

(2) 민주·민중·통일 가치의 추구

한겨레신문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완전실현'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생활수준 향상' '분단의식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지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슬로건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고 다른 일간지와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민환(전남대 신방과교수)은 양적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분석법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의 이 신문과 같은 기간의 동아일보 사설, 1면 머릿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월간경향 1988년 8월호, 288). 우선 두 신문의 국내문제에 관한 사설 중 '정치' '경제' '사회'의 사설을 다시 유목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 사이에 정치, 경제 두 범주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정치문제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이 대체로 현안문제-특히 인권, 광주

항쟁문제, 5공 비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동아일보는 국회(정당 포함)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문제 그 자체를 집요하게 추궁하고자한 데 비해 동아일보는 문제의 제도권 수렴에 높은 비중을 둔 데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노사문제에 대한 사설이 한겨레신문이 동아일보보다 3.5배가 많았다.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동아일보가 대학문제와 공해문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학문제에 있어 동아일보는 대체로 대학생의 자체를 당부하면서 교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면 머릿기사의 주제를 비교한 결과 동아일보가 정치문제에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1면에 경제관계 기사를 머릿기사로 올린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 '경제' 관계 머릿기사의 하위 유목별 관심도에 있어서도 두 신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치문제에 있어 사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이 현안문제들에 고른 관심을 보인 반면 동아일보는 국회(정당) 활동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한겨레신문이 노사문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전반적인 기업호황에도 불구하고 분배문제 등에 인색하다는 기사, 재벌의 상호출자 관계기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 반대 기사를 실었다.

신문의 언론행위의 대상, 즉 소구대상(Target)을 김 교수는 크게 '위'와 '아래' 및 '기타' 등 셋으로 나눠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시도했다. 신문은 '위'의 뜻을 '아래'로 전달하는 상의하달의 기능을 하면서 아울러 '아래'의 뜻을 '위'로 올리는 하의상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보다 민주적인 상황에서는 하의상달의 기능이 활성화되며 민중 지향적인 신문일수록 또한 하의상달에 치중하게 된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설정하고 있는 언론행

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사설의 소구대상만을 비교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소구대상을 '위'에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에 동아일보는 일반 기타에 상당수를 분산시키고 있었다. 한편 '위'를 다시 행정부, 사법부, 의회, 정당, 기업, 기타로 세분하여 살펴본 바, 한겨레신문이 소구대상을 행정부에 집중시킨 데 비해 동아일보는 의회와 정당에 상당수를 분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현안문제에 관한 의회 또는 정당의 제도적 수렴을 중시한 반면, 한겨레신문은 힘의 실체를 중시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를 대상으로 한 사설의 경우,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에 비해 '학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3) 정부 비판과 민중 지향적 논조 강화

사설의 논조가 소구대상에 대해 비판적인가, 옹호적인가 아니면 가치중립적인가의 분석에서는 한겨레신문이 상대적으로 보다 비판적이었으며 동아일보는 가치중립 지향적이었다. 소구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이 '위'에 대해 비판적인데 비해 동아일보는 '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치 중립적이며 '아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한겨레신문이 동아일보에 비해 비판적이며 민중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비판의 기준(Standard)이 무엇인가를 알아본 결과, 한겨레신문은 '위'에 대해 인권탄압, 권력남용, 비리, 불평등(주로 경제) 등을 이유로 비판적이었으며 '아래'에 대해서는 능동성, 순수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옹호적이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위'에 대해 주로 비 민주·권위주의, 비리 등을 이유로 비판적이었으며 '아래'에 대해서는 폭력주의, 무분별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비판적이었다. 동아일보는 '위' 가운데 야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공동책임의식의 결여'였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지향하는 가치(Value)는 무엇일까에 대한 분석을 위해 김민남 교수는 두 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가치주체의 분석을

시도했다(월간경향 1988년 8월호, 295). 그 결과 한겨레신문이 '정치적 민주화' '민족통일' '분배정의'에 집중한 반면 동아일보는 '정치적 민주화'와 '타협·공존'에 관심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치 가운데 민족통일, 정치민주화, 분배정의 등이 일종의 목적가치라면, 안정, 타협·공존, 효율성(실용주의) 등은 목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겨레신문이 목적가치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반면에 동아일보는 목적가치 가운데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수단가치로서 안정, 타협과 공존, 효율성(실용주의) 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모든 문제의 제도권 수렴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특히 권위주의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신문에 의하면 '정부 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전향적인 개방논자'(1988년 6월 9일자 사설, 시험대 오른 정치권 역량)가 적지 않지만 '관료들의 내부적 저항'(1988년 5월 15일자 사설, 제5공화국의 법적 청산)도 만만치 않으며,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지나친 요구는 '궁지에 몰린 극우세력에게 유혹의 기회'(1988년 6월 9일자 앞의 사설)를 줄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들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현안문제의 제도권 수렴과 관련, 야당의 역할 역시 중시하고 있다. 이 신문은 야권에 대해 특히 '공동의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현안문제의 제도권 수렴을 강조하는 동아일보의 태도는 학원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교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신문은 '학생들의 분별없는 통일논의'(1988년 6월 5일자 사설, 학원과 통일논의)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를 수렴하는 새롭게 실질적인 통일론을 제시해야하며, 이와 관련, 교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학원가의 통일논의를 주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현안문제의 제도권 수렴을 강조하면서 이 신문은 민중(학생·노동자 등) 세력에 대해서는 일관

되게 자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학생들에게 ‘이데올로기에의 전념, 몰두, 맹신은 끝내 국민, 민중, 서민을 해치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1988년 6월 12일자 사설, 「사회주의와 정의」)에 눈감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민중세력이 자제하지 않을 경우 ‘에비’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 신문의 주장이다. 광주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광주문제를… 이데올로기에 연결시켜 체제 전복적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자칫 피의 악순환을 부를지 모른다. 모처럼 착근되어 가는 민주헌정질서를 또 다시 몇 십년 후퇴시킬지 모른다(1988년5월 19일자 사설, 광주의 그날). 한겨레신문은 수단 가치 보다 목적가치, 즉 민족통일, 정치적 민주화, 분배정의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목적가치의 구현을 위한 방법론에서 한겨레신문의 입장은 동아일보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무엇보다 앞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발상의 전환’(1988년 5월 22일자 사설,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 신문에 의하면 ‘발상’은 이제 민의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민중적 요구’(1988년 5월 17일자 사설, 「일의 앞뒤 사정 가려야」)를 소화하는 일이야말로 평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아니 제도권의 시대적 명제이다. 이를 위해, 이 신문에 의하면, 우선 집권층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문제나 양심수 석방, 비리, 민주화, 통일문제 등에 있어 정부는 ‘고해하는 심정으로’(1988년 5월 21일자 사설, 광주의 산 여론 들어야), ‘진실에 대한 인정과 속죄가 있는 뒤에’(1988년 5월 18일자 사설, 5월 항쟁을 역사의 제자리에)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1988년 5월 19일자 사설, 양심수는 다 나와야 한다)하고 ‘욕된 과거를 단절’(1988년 5월 27일자 사설,대법원은 거듭나야 한다)해야 하며, 결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1988년 5월 28일자 사설, 검찰 수사 앞서 스스로 밝혀야)는 것이다.

(4) 학생과 노동자세력에 비중

한겨레신문은 특히 학생과 노동자 세력에 높은 비중을 두어 이들이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신문은 특히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를 추호라도 왜곡선전 하거나... 근거 없는 피해망상을 유포함으로써 새로운 탄압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시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1988년6월 10일자 사설, 젊은이의 통일열정 이해하길)고 강조하였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이 신문에 의하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철폐하여 조직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노조 정치활동이 새롭게 출발되어야 한다(1988년 6월 1일자 사설, 산업구조를 고치라니), 또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요구표출은 물리적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부당한 압력은 '그들의 폭발적 저항이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988년 6월 3일자 사설, 지나친 우려를 우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민중세력에게 결코 대중적 기반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6·10학생회담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도 충심으로 당부한다. 모든 운동은 가능한 한 많은 대중과 함께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번에 일부 국민이 보인 냉담한 반응을 업신여기지 말고... 꾸준히 함께 생각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1988년 6월 14일자 사설,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이 신문은 아울러 '조급한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극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1988년 6월 10일자 사설, 젊은이의 통일 열정 이해하길)고 지적하면서 '역사에 대한 건강한 낙관'(앞의 사설)을 강조하였다. 김민환은 이상과 같은 분석을 마친 뒤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월간경향, 1988 8월호, 299).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다만 하나, 즉 어느 한 색깔의 주장만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국민 여론의 형성과정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였듯이 언론의 공개시장에서 모든 의견이 자유로이 거래될 때, 보다 오류가 없는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걸 확 인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한겨레신문으로서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에서의 결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한다. 현재의 상태로 한겨레신문은 다른 신문에서 소홀히 취급한 문제에 대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완지 또는 병독지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

김민환의 결론은 한겨레신문이 기존 신문의 하나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 새 신문이 언론문화에 미친 영향

한겨레신문 창간이 언론문화에 미친 영향은 컸다. 즉 언론계 전체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던 데 대한 반성과 함께 민주언론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다. 이는 전국적인 언론노조 결성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어 공정보도를 위한 편집, 편성권 독립주장으로 이어졌으며 언론인 처우개선 실현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사 이기주의와 언론인의 고액 셀러리맨 화라는 부정적 측면도 부각시켰다. 한겨레신문의 등장과 함께 언론과 권력의 역학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80년대 상반기에는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었다면, 87년 이후의 언론은 국가권력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보다 상위의 권력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는 국가권력이 지속적인 민주화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그 폭력성이 약화된 반면 언론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상을 지니기 시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의 특성은 이는 특히 보도지침으로 대변되던 5공의 일방적 언론통제가 6공 들어서는 언론 플레이 전술 즉, 외형적으로는 언론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언론통

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바뀐 데서 잘 나타난다(정용준, 민족민주언론운동론,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1990, 297).

(1) 언론 노조의 활성화

매스 미디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대규모 영리기업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기구로서도 기능한다. 따라서 그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언론노조는 기본적으로 타산업노동조합이 갖는 성격과 임무를 공유하는 동시에 매스미디어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기증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이효성, 1989, 37).

한겨레신문 창간과 각 언론사 노조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결성이후 언론계는 국민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편집권 주장과 언론노동자 권익보호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5공 정권출범 이후 권력과 언론기업주의 언론장악에 대하여 언론인들은 침묵을 지켰고 사회민주화 운동이 85년 이후부터 활성화되면서 방송사 등 언론기업은 민중적 비판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KBS시청료 거부운동은 제도언론, 특히 정권의 시너 역할의 선봉이었던 공영방송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87년 초까지만 해도 기존언론매체는 공신력 상실의 위기에 빠졌지만 언론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전혀 조직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언론노동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을 계기로 조직화와 투쟁 내용 면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윤창빈, 1989, 8-55).. 당시 언론노동운동의 투쟁과제는 편집권독립쟁취로 압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존 기자 중심의 언론운동은 자유언론쟁취 투쟁에서 공무, 보급 부문의 육체노동자들이 결합하여 전면적인 언론노동운동으로 활성화되었다. 당시 언론노동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건이 가장 열악했던 이른바 여권매매와 지방 언론사에서 언론노동운동의 조직화와 투쟁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회사 형태전환 및 관선경영진의 퇴진을 통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요약되는 경향신문사

의 87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친 투쟁, 한국방송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었던 88년 5월의 MBC 파업, 88년 4월의 부산일보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등이 언론노동운동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노조투쟁은 이후 거의 전 언론사에 노조가 결성되는 것과 함께 1988년 11월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언노련)라는 연맹체 차원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언노련은 출범 첫해를 '언론해방 원년'으로 선포(제3차 중앙위원회 결의)하면서 첫째, 자신의 비리로부터 해방, 둘째, 사내민주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속박으로부터 해방, 셋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해방으로 규정하고 언론해방투쟁을 실천목표로 세웠다(김왕석, 1990, 350). 바로 언론해방의 개념을 언론노동운동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언노련은 출범당시 조합원 1만3천여 언론노동자의 전국적 결집체이며, 신문, 방송, 통신사 노동조합이 가맹한 독자적인 산별 노련이자 단위노조의 상급 단체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가맹 노조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88년 11월에는 42개 노조, 그리고 90년 4월 현재 52개 노조가 가입되어 있어 지속적인 조직확대가 이루어졌다. 매체별로는 신문사 27개, 방송사 23개 노조, 통신사 2개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언론사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조직노동자도 전체 언론 노동자의 60%~70%에 이르며 약 1만6천여 명 정도이다(김왕석, 1990, 345-346). 80년 언론운동이 조직운동의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특징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가 연대활동이었으며 동시에 언론노동운동의 사회적 성격을 제한하는 요인의 하나가 낮은 연대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연대는 언노련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성명서, 지원방문, 연합집회 또는 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성명서 발표였다. 88년 11월에서 89년 10월까지 약 43건에 이르는 각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의 활성화와 편집, 편성권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신문과 방송 내용 전반에 걸쳐 왜곡, 편파, 은폐의 보도 내용은 별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언론권 기관지 등에 실린 조합원의 언론자유와 공정보도에 대한 주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거나 동일한 조합원이 자신이 속한 매체에 실리는 글은 민주언론실천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같은 이중구조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별다른 개선은 없었다(김중배, 언론노련을 위한 쓴 소리, 언론노보 39호,1991).

(2) 공정보도 운동

언론사 노조를 중심으로 젊은 언론인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권력과 자본 및 경영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실현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88년 언론계 내부의 편집권 논의는 언론사 노조와 발행인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편집권 귀속과 편집권 독립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두 측면에서 진행되었다(유재천, 언론노조와 편집권, 1988). 편집권은 언론사주의 전반적인 권리일 수 없으며 편집제작진 모두의 권리라는 점과 편집권은 정치권력, 자본, 언론사주 등 특정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책임자의 선출과정을 민주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자협회보, 1988년 6월17일). 그러나 이 같은 편집권 논의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해 의견상 언론기업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정치권력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지배권력과의 투쟁이라는 성격도 있었다(장명국, 언론노조의 특성과 과제, 206-208).

편집권 논쟁 과정에서 타난 특이 사항은 △언론사 내부의 발행인 대 기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립구도가 설정되고 △노동조합이라는 합법 단체가 법적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권 독립 등을 주장하는 것 등이다(박인규, 1988년, 59). 편집권 독립의 과정은 순탄치 않아야는 바, 부산

일보의 경우 일주일간의 파업 끝에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도출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일보는 정부 재단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관선이사 가 경영, 편집을 담당해 80년대 이후 정치권력과 경영층의 파행적 신문경영이 내부적인 반발을 야기했다. 부산일보 사태이후 관선인사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매체인 서울신문, 경향신문, 코리아헤럴드, KBS와 MBC 등에서 편집, 편성권과 공정보도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경향노보 16호, 1988년 7월23일자). 각 신문, 방송사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권이 노사 한 쪽에 귀속될 수 없고 권력과 경영자로부터 침해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편집 최고 책임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동아노보 28호, 1989년1월 19일). 전국 일간지와 방송사들의 편집권 독립관련 합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① 부산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대구매일 등은 편집국장 복수 추천제 ② 한국경제와 경인일보는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 ③서울신문, 코리아헤럴드는 조합원 총의를 편집국장 인사에 반영 ④ MBC는 보도국장이 취임 후 1년 이상을 하되 중간평가제를 실시 ⑤ 광주일보는 해임 건의제 ⑥ 대전일보는 편집국장 탄핵제도 ⑦ 한겨레신문은 편집국장 직선제 등이다.

언론사들은 편집, 편성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기구로 공정보도위원회나 자유언론실천위원회 등을 설치했다(동아일보 노보 28호, 편집권 관련 단체협약 내용, 1989년 1월 19일). 동아, 경향, 중앙, 코리아헤럴드, 경인, 연합통신, 한국경제 등은 공보위 활동보장을 명문화했다. 경향, 서울, KBS, MBC, 대전, 대구매일 등은 편집 책임자, 편집 간부, 평 기자 또는 노사 공동으로 구성하는 편집제작평의회 또는 공정보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언론노조의 활성화와 함께 관선이사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소유매체 등 '여권매체'로 불리는 서울신문, 연합통신, KBS, MBC 등에서는 언론사 소유 구조 변경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자유 운동이 광범위

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관영매체들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조치 후 권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런 과정에서 파행적인 경영이 이뤄져왔다. 이들 매체에서는 관선이사 퇴진운동이 벌어졌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회사형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경향노보 16호, 1988년 7월23일).

그러나 편집·편성권 논의는 언론사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같은 과정에서 다른 경쟁매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주장이 약화되거나 방향이 수정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신문업계의 과당경쟁 현실은 결국 개별신문사 노조가 자사의 대외적 이해관계를 편집권 주장 보다 더욱 중시하거나 때로는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등 자사이기주의에 빠지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즉 일부 언론사 노조는 자사 소유주를 상대로 한 투쟁구도를 우선해야 하는데도 언론사간 경쟁이라는 논리를 최우선시 함으로써 전체 언론계의 노조운동을 약화시켰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88년의 언론노조운동이 언론인 스스로 자성하고 노력해서 이뤄진 것이기 보다 사회전체의 민주화 추세에 편승한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서울 노보 2호, 1989년 1월1일).

공정보도위원회의 경우, 그 초기에는 지면분석, 방송 내용분석 등을 통한 자체 비판과 개선방안 제시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특정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어떤 특정기사의 게재를 요구하는 등 W작과 편집 방향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장명국, 1989, 204).

(3) 언론인 처우 개선

언론노조는 편집권 독립요구와 함께 단체협약 과정에서 언론노동자의 임금현실화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권익쟁취 운동이 활성화되었다(옥선미, 1989, 64-71). 언론사 노조가 결성되어 얻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임금인상과 몇몇 경제적 요구에 관한 사항이다(김왕석, 1990, 351). 조

합측의 교섭목표는 대체로 임금제도의 개선,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인상, 인사고과에 의한 급여차 폐지, 시간외 수당지급, 단일 호봉제 실시 등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성과는 한국일보노조 호봉제, 동아일보사노조 근무수당의 기본급 환원, 중앙일보사노조 단일 호봉제와 임금인상, 경향신문노조 32~45%임금인상. 조선일보사노조 단일 호봉제, 문화방송노조 시간외 수당의 기본급 가산과 연 1000%상여금, 한국방송공사노조 국내방송사 중 최고의 수준 보장 등이다. 임금투쟁의 성과는 언론사 내의 다양한 직종간의 불평등 구조에서 단일 호봉제 실시로 직원간의 일체감을 마련하여 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한편, 언론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노동자와 급여 격차가 더욱 커짐으로써 연대감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과 그동안 언론노동자에 대한 높은 급여가 회유책으로 통제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한겨레신문 창간은 1987년 6월 항쟁 후 제한적인 민주화 공간의 확대 속에서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 시도되어 다음해인 1988년 5월 그 결실을 맺어 대안언론 또는 제도권 언론의 하나가 되었다. 이 신문 창간과 동시에 진행된 정치 경제적 변화 속에서 민주화 진전과 언론사 창·복간 러시와 함께 동구권 붕괴 등의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신문의 창간과정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사회학적 의미를 규명코자 하는데 있다. 이 신문의 창간은 정치적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또는 그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되었고 언론 자체의 민주화, 즉 언론민주화 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민주 신문으로서 창간되어야 했던 당위성, 즉 대안언론 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바, 그것은 기존언론이 지닌 보수적 성향을 개혁·진보적 성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시민운동의 방향성이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론적 논의의 주제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언론의 성격,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언론의 성격, 정치·사회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 사회운동의 동원과정에 대한 것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분석 틀은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과 한겨레신문 창간운동 전개 과정, 그 결과 등으로 3원화 시켰다. 이는 구조적 배경은 한겨레신문 창간의 필요조건이 되었던 일반화된 시대 상황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비해 새 신문 창간운동 전개 과정은 대안매체 성격의 신생매체 결성이라는 단일 사안에 그쳐 그 분석 차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의 창간이후는 사회운동의 단계에서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새 신문 창간의 구조적 배경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언론의 성격, 생존전략과 민주화 운동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80년대 사회운동의 특성은 광주항쟁을 통해 지배권력의 폭력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부각시킨 의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군부세력에 대한 지원의 확인을 통해 반 외세 자주화역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5공화국을 전후해 자행된 언론 탄압을 분류해보면 법률적 통제로는 헌법, 국가보안법,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계엄법, 반공법,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 집시법 등이었고 행정적 통제로는 기자 신분증제 실시, 정부 각 부처 대변인 제 도입 등이 손꼽힌다. 불법적 탄압은 보도지침을 통한 규제,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 임의동행 형식의 언론인 불법 연행조사, 기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이 포함된다. 권위주의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기존 언론은 이윤극대화라는 상업주의를 생존전략으로 채택했으며, 권력은 그같은 언론의 속성을 이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혜로 언론을 권력에 편입시켰다. 당시 정부는 신문 카르텔을 묵인했고 신문사에 감세 혜택을 주었다. 신문사들은 권력의 허용으로 출판업을 확장해 많은 잡지들을 창간했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상업인쇄, 부동산임대, 스포츠 사업, 문화 사업 등의 진출이 가능했다.

군부통치 기간동안 공식 언론이 권력에 의해 차단되고 왜곡되면서 비공식적 매체 즉 각종 유인물과 테이프, 미등록 주/월간지 등이 정보전달 역할을 대행하는 언론운동이 전개되었다. 지배구조가 독점자본 위주로 재편이 이뤄지면서, 사회운동도 변화했다. 즉 과거 반 독재 저항운동에 결집했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대변하던 사회운동 집단들이 87년 이후 급속히 분화, 재 결집했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변화는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에 모아졌던 대중적 지지와 열기가 민주언론이라는 비정치적 슬로건을 내건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정도를 고양

시켜 단기간 내에 창간기금 모금과 창간조직화 성공, 그리고 창간을 가능케 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6공화국에서는 신문사 창간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겨레신문 등을 비롯해 수많은 매체가 전국적으로 등장했다. 정부수립이후 억제되었던 언론사 노조가 결성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신문과 방송사의 파업으로 비화되었다. 언론자본의 무한경쟁이 벌어져 신문업계의 완강하던 카르텔이 깨지면서 증면 경쟁, 중앙과 지역 동시인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6공화국이 시작된 뒤 정치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협조와 조정을 통한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80년대 중반까지 기존언론은 제도언론으로 비하될 만큼 권력의 요구에 순응했다. 그것은 또한 재벌경제구조의 특성을 지닌 일반시장에서 광고주의 이윤창출 논리에 영합하는 상업주의 언론의 특성을 강화시켰고 그 같은 부정적 특성이 한겨레신문 창간의 구조적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80년대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것은 기존언론에 대한 배척과 함께 언론자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그 실천운동이다. 5공화국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시민사회의 언론운동은 KBS시청료 거부 운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젊은 언론인들의 자성운동이 KBS, MBC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새 신문 창간의 전개과정은 집합행동의 기회, 언론민주화 및 대안언론운동, 창간 운동의 조직화, 동원화 과정과 한겨레신문 정체성 확립의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C. Tilly가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approach)에서 제시한 집합행동의 기회 분석 틀은 운동조직과 통제기관도 포함하는 정치과정 전체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분석시각으로 한겨레신문 창간과 그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창간추진 과정에서 억압/축진은 새 신문사 창간을 규제한 언론관련법과 행정당국의 비협조적인 행동

으로 나눠 설명이 가능하다. 당시 국가 또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나 행정 집행 행위는 새 신문 창간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창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은 창간일자가 2개월 정도 연기되어 그 비용이 증대되었다.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에서 집합행동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 권력은 언론민주화운동이 국가와 정부 및 기존 언론으로 형성된 기존의 언론구조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했는 바, 그 창간을 가능케 한 권력의 획득은 사회운동세력의 민주 언론운동에 대한 지지와 시민사회의 호응으로 가능했다. 한겨레신문 창간 취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성명과 창간기금 모금 협력 등으로 형성된 권력이 기존언론구조와의 상호관계에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 새 신문의 창간과정에서 기회/위협은, 한겨레신문 창간주체세력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국가와 정부, 기존언론을 포함한 권언복합체계의 기득권이 약화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겨레신문 창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새 신문 자본의 구조, 신문편집과 제작방식, 조직체의 윤리관 제시 등이다. 기존언론의 소유구조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한 보도경향, 촌지수수의 만연현상 등은 새 신문이 시민사회에 약속한 정체성과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80년대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언론민주화운동과 병행해서 추진되었는데 이는 기존언론이 시민사회의 민주화 추진운동 등의 움직임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운동세력들은 기존언론의 그 같은 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들의 투쟁소식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민중언론매체를 만들어서 선전홍보에 활용했다. 그 같은 활동은 노동자, 농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언론민주화운동세력은 80년대 중반 조직체를 발족시켜 말지라는 대중매체를 만들어 시민사회를 상대로 배포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보도지침'을 폭로해 6월 항쟁의 기폭제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민언협은 1985년 6월 말 지 창간호 제언 '새 언론 창설을 제안한다'를 통해

민언협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주, 민족, 민중언론의 창달에 있음을 밝힌 데 이어 민중언론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언론기관의 창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지 14호는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 행동인 창간발의자 총회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 언론운동 세력이 합법적 매체 창간 운동을 시작한 사실을 확산시켰으며 그후 17, 20, 22호 등은 새 신문 창간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 보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겨레신문 창간 조직화 과정의 단초는 6월 항쟁후 해직기자들이 새 신문 창간움직임을 구체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새 언론 창설연구위'를 구성해 '민중신문(가칭) 창간을 위한 시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문의 형태로 국민적 참여, 편집권 독립, 한글 가로쓰기, 독자의 반론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창간발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송건화)가 1백 96명의 전·현직 기자들에 의해 결성됐고, 1인당 50 ~ 1백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창간 발의기금을 내고 창간발의 동의서에 서명했다. 9월23일 해직언론인과 현직기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새 신문 창간발의자 총회가 열려 전국민적 참여의 주식공모를 통한 새 신문 창간을 다짐하는 발의문과 발의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총회는 새 신문 발의문을 통해 새 신문 창간과 관련해 그 방향성 등과 관련해 민주주의적 모든 가치의 온전한 실천,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 분단의식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지향을 최대 이념으로 삼고 이를 위해 정치권력, 대자본, 광고주로부터의 독립을 확고히 할 제도적 장치와 경영·편집진의 혁신적 구성 방침을 정하며 국민적 자본 참여를 통한 편집권 독립실현, 선정주의 배격, 광고지면의 정보화 지향,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등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는 주주 한사람이 출자액을 창립자본금 50억 원의 1%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 창간발의준비위는 창간 발기추진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이 위원회는 새 신문 창간 작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의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23명으로 구성됐으며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새 신문의 제호를 '한겨레신문'으로 결정했다. 이어 10월30일 3,319명의 창간발기인들에 의해 창간발기인대회가 열려 새 신문의 사업계획의 기본원칙을 민주주의의 실현, 분단의식 극복과 통일 지향 등으로 삼고 주요 사업으로 일간지 및 도서와 잡지 발행과 판매, 교육, 문화, 사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간행물의 편집 원칙은 제도언론의 타성적 편집 태도와 획일주의를 극복, 취재원을 권력기구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이동하고 가로 쓰기, 독자의 반론권 보장에 두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발기인들을 대표하는 각계 대표 56인으로 '창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이사진 후보를 선정·보고하고 회사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주요기구였다. 새 신문 창간발기인을 보면 교육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민주사회단체, 의료계, 여성 운동계 등과 함께 전국 각지의 교수, 종교 사회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 신문이 단 기간 내에 창간기금을 모금하고 전국종합일간지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창간발기인과 이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 컸다. 새 신문에 범국민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새 신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부여가 필요했으며 창간발기인들은 그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창간을 위한 행정절차를 보면, 창간사무국은 12월 14일 서울민사지법에 수권자본금 50억원의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 법적인 실체를 갖춘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한겨레신문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 석 달 만인 1988년3월12일 종로세무서에서 발급되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당국의 인가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신청 1주일만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새 신문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발급이 지연되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1월23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기 등 법정시설 요건을 갖추고 문공부에 일간신문 등록 신청서를 접수시켜 약 3개월 후인 4월25일 등록증이 교부되었다. 등록증 교부 때까지 송건호 한겨레신문 발행인은 기자 회

견 2번, 문화공보부 장관을 3차례 방문했고 한겨레신문 기자, 사원은 2차례에 걸친 시위를 벌여야 했다.

새 신문 창간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과정을 보면, 12월 14일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선임, 정관확정 등 법적인 요식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창간사무국은 1988년 1월초부터 새 신문 창간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에 착수, 운전기를 구입하고 편집진용 구성, 사원 공채에 이어 전산제작체제(CTS)도입 등을 실시했다.

창간준비 사무국은 새 신문 창간에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창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키로 하고 1987년 11월부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식모집에 들어갔다. 새 신문 창립 자본금으로 책정한 50억 원을 마련키 위해 1주당 액면 가격을 5천 원으로 하고, 새 신문의 편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1인당 출자 상한액이 창립자본금의 1%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모금 방식은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송금되거나 창간사무국에 직접 납입하는 방식이었다. 창간준비사무국은 기금 모금 등에 대한 선전홍보 활동과 유명인사의 지지 선언, 시민 사회단체의 동조 등 창간 준비 과정을 알리기 위해 1987년 10월부터 3회에 걸쳐 '새 신문 소식지'를 만든 데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한겨레신문 소식'을 발행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발의자와 창간위원, 사무국 요원, 지역주주 모임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종교, 여성단체 교수 등 외부지원 세력들의 지원활동이 전개되었다. 새 신문창간사무국은 창립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존 신문에 광고를 십여 차례 냈으며 이는 새 신문 창간 소식을 널리 알리면서 창간기금 모금을 촉진했다. 즉 조선일보에 1987년 11월8일 첫 번째 기금 모금 광고를 낸 후 1988년 2월25일 동아일보에 모금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광고등을 포함해 모두 13번의 기금 모금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광고 크기는 전면, 7

단, 5단 등의 크기였는데 기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존 일간지들이 새 신문 창간 과정에 대해 인색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 광고는 새 신문 창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한겨레신문 창간운동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고 새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은 창간사, 윤리강령에 압축되어있으며 이는 이 신문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창간사는 대중적 정론지임을 표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라는 자원을 어떻게 정당하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자 기존 언론들의 정보 자원 전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 한겨레신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이 그 시대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진실보도와 비판적 기능이라는 언론 본연의 구실을 수행하는 한편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의 구성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자는 민주 집중제라는 논의구조를 도입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한겨레신문은 편집국의 권한을 각 부서의 장인 편집위원과 편집위원가운데 뽑은 편집위원장 등이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국의 각부를 이끌어갈 편집위원(부장)들은 해직기자들로 채워졌다.

창간운동의 결과는 이 신문 창간을 전후해 발생한 제반 정치사회현상, 즉 제한적인 형식으로 취해진 정치 및 시민사회 민주화와 언론사 창간과 복간 러시 현상 속에서 분석했다. 6·29선언이후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 규제 조치의 완화로 신문, 방송, 주간지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기간행물은 1986년 2,134개사, 1988년 3,388개사, 1989년 4,402개사 등으로 증가했다. 언론대기업들은 중앙일간지와 경제전문지 또는 잡지, 스포츠지 등에 다투

어 진출해 언론산업의 소유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재벌그룹의 언론사 인수와 종교자본의 언론사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일정 부분 정치권력에서 언론자본 또는 독점자본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신문의 보도특성을 확인키 위해 이 신문이 창간된 1988년 5월15일부터 4개월 뒤인 같은 해 9월15일까지 발행된 105일치의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1면 머릿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한겨레신문이 현상을 단순보도가 아닌 개혁과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를 많이 실는 경향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함으로써 의제설정의 기능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겨레신문은 종래 정부의 보도지침 등에 의해 권력에 순치된 언론과 다른 시각에서 보도하고 논평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착화된 보도평가 기준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언론들이 외면하거나 왜곡했던 민중 또는 시민 운동 부문에 대한 적극적 보도를 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의도된 무관심과 냉대를 받았던 시민운동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기존언론들의 외면현상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해소되고, 민주·민중·통일 가치의 실현을 지면을 통해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가능해졌으며 학생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겨레신문 창간은 언론계에 권언유착 현상에 대한 반성과 민주언론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즉 전국적인 언론노조 결성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공정보도를 위한 편집/편성권 독립주장으로 이어졌으며 언론인 처우개선 실현의 결실을 맺었다.

한겨레신문 창간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대안언론을 지향한 언론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신문이 창간운동 과정에서 시민사회 운동세력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자원의 동원과 조직화 목표를

수개월만에 달성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래 전두환 정권까지 누적된 권력의 탄압과 그 극복운동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획득한 결과였다. 새 신문이 채택, 공개한 편집전략은 기존언론의 체질화된 부정적 측면에 정면 도전한 독창적, 개혁적 성격을 지녔고 그것은 한겨레신문 창간후 수년이 지나면서 기존언론의 체질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 신문은 기존언론이 외면하던 사회운동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 등을 통해 시민사회 운동역량의 증대에 기여했고 언론문화의 개혁에도 기여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고 언론의 창간과 복간이 러시를 이루고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권 붕괴와 동서이념대결 종식이라는 세기적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창간 전후가 판이한 시대 상황에 처한 한겨레신문이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무한경쟁시장에서 창간 과정을 대과 없이 통과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운동 또는 언론민주화 운동 사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제 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한겨레신문이 창간이후 십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신문 창간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겨레신문의 창간 방식, 특히 국민주주 모금 방식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서 창간과정이라는 사회운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이 시도한 분석 틀은 국가와 정치 및 시민사회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언론과 정치권력 및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권언 유착, 상업주의 언론의 특성, 왜곡된 정보를 전달받는 시민사회의 반발 등이 언론민주화 운동, 대안언론운동으로 수렴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같은 분석작업을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만족할 만큼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족한 자료나마 체계적으로 분류해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절감한 것은 한겨레신문에 대한 종래의 연구작업이 전반적으로 희소하고 설령 시도되었다 해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대중 매체적 관점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면서 다른 나라의 대안언론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의 범위를 사회운동의 과정인 창간과정에 국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해도 창간이후 십여 년이 된 현 시점에서 분석기간을 더 연장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연구가 한겨레신문 등 민주언론운동에 뜻을 둔 주체들에게 실증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편집전략과 광고·판매전략의 상관관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실행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 신문이 가능한 오래 그 창간정신을 유지하면서 번창해 우리 언론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6월 항쟁의 열기 속에서 언론운동추진세력이 시민사회에 행했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분석 작업 과정에서 가급적 주관성과 가치관을 배제하고 연구방법론에서의 엄밀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불필요한 요소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언키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수많은 문제점 -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 났거나 또는 감추어져 있거나 간에 - 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운동 속에서 행해진 언론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연구 노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연구·학술서>

강명구, 1993, 한국언론전문직의 사회학, 나남.

강용옥·옥우석 역, 1993, 근대, 주체, 프로그램화 된 사회, 의암 출판사.

고성국, 1985,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과정, 한국 자본주의와 사회구조, 한울.

고승우, 1989, 6공, 5공 언론비판. 춘추원.

——, 1998, 언론유감, 삼인.

고 원, 2001, 언론정책은 악이다, 북스토리.

김경근, 1986, 언론현상과 언론정책, 법문사.

김동규, 1988, 뉴스의 결정양식에 관한 구조적 연구, 『언론문화연구』 제6집,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김민남 등, 1993,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김석준, 1992, 한국산업국가론, 나남,

김성국, 1992,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울.

김승수, 1989, 정치경제학으로 본 변혁기 언론위상, 『저널리즘 가을』 (겨울호), 한국기자협회.

——, 1989년 12월, 자본주의 언론생산의 본질, 『사회비평 제3호』, 나남.

——, 1990, 언론학의 방법론적 기초,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김영선, 1995, 한국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 전예원.
- 김왕석, 1990,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 1990, 언론의 헤게모니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80년대 언론 노동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김정탁, 1990, 신문연구, 한국기자협회.
- 김지운, 1989, 언론인의 권력지향사례에 대한 고찰, 『사상과 정책』 6권, 경향신문사.
- 김태홍, 1997,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80년 5월의 민주언론』, 나남.
- 김해식, 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 김호기, 1994, 그람시적 시민사회론 비판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유팔무·김호기 엮음, 한울.
- 박상섭, 1986, 자본주의 국가론, 한울.
- 박영근, 1984, 노동문화의 실상과 가야할 길, 공동체 문화 2, 공동체.
- 박인규, 1988, 88년도 편집권 논쟁 양상, 『저널리즘』 (1988년 가을호), 한국 기자협회.
- 배동인, 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적 접근,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1986, 자본주의와 한국신문. 서울대.
- 서정우 외, 1978, 언론통제이론, 법문사.
- 송건호, 1976, 역사적으로 본 한국언론, 『저널리즘』 (1976 가을호), 한국 기자협회.
- 신홍범, 1983, 제3세계 언론의 종속성과 신국제 정보 질서운동, 『언론과 사회』, 민중사.
- 오갑환, 1974, 사회의 구조와 변동, 박영사.
- 원우현, 1991, 계간사상 91 가을, 사회과학원.

- 유일상, 1987,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 일월서각.
- , 1988, 매스컴과 현대사회, 지식산업사.
- 유재천, 1988, 언론노조와 편집권, 『신문연구』 (1988 겨울호), 관훈클럽.
- 유팔무, 1993,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분석을 위한 개념들의 모색,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 나남.
- 이강수, 1999, 커뮤니케이션과 정통성, 나남.
- 이상희(편), 1984,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한길사.
- 이시재, 1992, 90년대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의 방향, 『한국의 국가와 시민 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울.
- 이옥경, 1983, 70년대 대중문화의 성격, 『한국사회변동연구 I』, 민중사.
- 이태호, 1984, 제도언론과 민중언론, 『민중과 자유언론』, 아침.
- 이효성, 1988,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선비.
- , 1989, 언론의 정치경제학, 『저널리즘』 (1989년 봄 여름호), 한국기자협회.
- 임근수, 1986, 신문 발달사, 정음사.
- 임동욱, 1990, 광고주의 광고, 대중매체 그리고 광고대행사, 『광고연구』 (1990봄호), 광고협의회.
- 임희섭 외, 1998,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 사회운동, 나남.
- ,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명국, 1989, 언론노조의 특성과 과제, 『경향신문사 사상과 정책』 (1989년 봄호), 경향신문.
- 장윤환, 1989한국언론 80년대 반성과 90년대 전망, 『신문연구 겨울』 (48호), 관훈클럽.
- 정연우, 1990, 1980년대 신문산업의 사회적 성격,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정용준, 1990, 민족민주언론운동론,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정태석 등, 1995,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 쟁점과 전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정태환, 1984, 집합행동이론 비판, 『문리대 논리집』 (제2집), 고려대학교, 문리과 대학.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
- 조희연, 1990,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와 90년대의 발전전망,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 주돈황 외, 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언노련.
- 차배근, 1976,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세영사.
- 최장집, 1985,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한울.
- , 1989,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내부모순과 변화의 동학, 1972-86, 『한국현대정치구조와 변화』, 까치.
- , 1991, 민중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 『사회비평』 (6호), 나남.
- 최준, 1960, 한국신문사, 일조각.
- 80년대 대항언론의 현황과 과제, 1990,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7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성균관대.
- 한배호,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편), 한울.
- 한완상, 1992, 한국에서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편), 한울.

<석사학위논문>

- 강만석, 1985, 한국의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외신뉴스에 관한 비교적 고찰, 성균관대.

김대호, 1986, 한국노동계급문화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 신문학과.

김주득, 1991, 6공화국 언론활성화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
 세대 행정대학원 논문.

서수원, 1978, 찰스 틸리의 혁명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옥선미, 1989, 자본주의 사회의 신문 언론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
 대.

윤창빈, 1989, 한국언론노조운동의 성격에 관한 고찰, 한양대.

정진홍, 1989, 한국의 사회변동과 커뮤니케이션 구조간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한인형, 1985, 그람시 문화이론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

<신문, 성명서, 잡지류>

강태완, 1985,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로서의 민중언론, 경희대 교지.

경향노보 16호, 1988, 부일파업 사태의 배경.

고현희, 1989, 새로 창간된 종합대학신문을 평가한다. 이대학보.

기자협회보, 1988년 6월17일자, 편집권 독립을 논함.

김중배, 1991, 언론노련을 위한 쓴 소리, 언론노보 39호.

노동자신문, 1985년2월25일자.

동아일보 노보 28호, 1989년 1월 19일, 편집권 관련 단체협약 내용.

말 지, 1987년 10~12월호, 1988년 1~4월호.

민주노동 1호, 1984년4월25일자.

박인규, 1989, 한국언론 사주들의 두 얼굴, 월간 경향 1월호

박해전 편저, 1994, 다시 태어나야 할 겨레의 신문1-3권, 울도서적.

새 신문창간 발기인 성명서, 1987년10월30일.

새 신문창간지지 성명, 1987년 10월12일..

서울 노보 2호, 1989년 1월1일, 거둬 타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시사저널, 1991년 4월 18일자.
 신동아, 1991년 6월호.
 월간경향, 1988년 8월호.
 유재천, 1989, 언론노조와 편집권, 경향노보 18호.
 전 대학인의 대항언론으로, 1989, 대학정론지 소식지2호.
 정용준, 1889, 민족민주언론의 현황과 과제, 건대신문.
 정해구, 1986, 한국의 지배연합과 국가기구, 연세23.
 한국잡지협회, 잡지뉴스통권 102호, 1990년 1월.
 한겨레신문 1988년5월15일, 1989년 7월26일, 1990년 2월14일, 1990년 7월13
 일 등 다수.
 한겨레 소식지, 1987년 11월18일 - 1988년 4월28일.
 한은경, 1987, 한국민중언론에 대한 일 고찰, 성대 신문방송확보 5집.

2) 외국문헌

Althusser, L.,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don,
 New Left Books.
 Brown, Roger L., 1970, Approach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ss
 Studies in Jeremy Tunstall, Media Sociology;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Coulson, Margaret & David, Riddle, 1970, Approaching Sociology : A
 Critical Introduction(사회학에의 접근 - 비판적 사회 인식, 박영신
 옮김, 1979, 대영사).
 Curran, J., & Seaton, J., 1985, Power Without Responsibility, London ;

- Methuen.
- Daniel, Lerner, 1961,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
Fernand Terrow and Solal, Legislation for Press and Radio, NY.
- Ewen, S. & Ewen, E., 1983, *The Bribe of Frankenstein* in Mosco V, et
al(eds) *The Critical Communication Review Vol. I*, Norwood, New
Jersey.
- Feierabend, Ivo, & Feierabend, N.R., 1989, *Social Change and Political
Violence: Cross-National Patterns* in H.D. Graham and T.R. Gurr,
eds., *Violence in America :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oss, Daniel A. & Larkin, Ralph, 1986 *Beyond Revolution : A New
Theory of Social Movements*, Bergin & Garvey Publishers, Inc,
Massachusetts(혁명을 넘어서, 임현진 역, 1991, 나남).
- Gamson, W.A., 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1st ed., Homewood,
_____,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Collective Action* in Alde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P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s Haven, CT, Yale Univ., Press.
- Garnham, N., 1986, *The Media and the Public Sphere* in Golding, P., et
al(eds), *Communicating Politics*, Leicester University.
- Gibbins, John & Reimer, bo., 1999, *the Politics of Postmodernity*, SAGE
Publication.
- Golding, P., 1974, *The Mass Media*, Harlow ; Longman.
- Golding, P. & Harris, Phil, 1997, *Beyond Cultural Imperialism*, SAGE
Publication.
- Golding, P. & Mordock, G., 1983, *Ideology and the Mass Media : the*

- Question of Determination(현대자본주의와 매스 미디어, 강상호, 이원락 편, 1986, 미래사).
- Goldstone, Jack A. 1984, Theories of Revolution : Third Generations, World Politics, Vol. 32-3(혁명의 사회이론, 김진균 · 정근식 편역, 1988, 한길사).
- Gurr, T.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_____, 1980, On the Outcomes of Violent Conflict in T.R., Gurr eds Handbook of Political Conflict : Theory and Research, NY, Free Press.
- Habermas, J., 1981, New Social Movements, Telos(정수복 편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1993, , 문학과지성사).
- Hardt, H., 1983, Press Freedom in Western Societies in Martin, L.J.et al.(eds), Comparative Mass Media Systems, NY : Longman.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s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Jenkins, J.C. 1982, The Transformation of a constituency into a Movement, in J. Freeman(ED), The Social Movements of the 1960s and 1970s, N.Y. : Longman.
- Johnson, Charlmers, 1966,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 Brown.
- Jouet, J., 1981, Review of Radical Communication Research : the Conceptual Limits in McAnany, E. G., et a (eds). Communication and Social Structure, NY, Praeger Publisher.
- Klandermans, B. & Tarrow, 1988, S., Mobilization into Social Movements : Synthesing European and American Approaches' in

- B. Klandermans. H. Research, Jal Press, Vol. 1.
- Kriesi, Hansreter, Dyvendak & Gingni eds., 1955, *New Social Movement in Western Europe : A Comparative Perspectiv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riesi, Hanspeter, 1995,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 Its Impact on Their Mobilization*, in J. C. Jenkins and B. Klandermans, eds., *the Politics of Social Products*, Minneapolis, MI, Univ. of Minnestota Press.
- Lee, C.. C., 1980, *Media Imperialism Reconsidered*, Beverly Hills, Sage.
- LittleJohn, S.W., 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5th ed), Wadsworth Publishing co.(커뮤니케이션이론, 김홍규 역, 1996, 나남).
- Mattelart, D., 1979,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Control of Culture*, Atlantic Highland, Newjersy, Humanities Press.
- McCarthy, J. D. & M. N. Zald, 1973,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America :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Morristown : General Learning Press.
- _____,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 A Partial Theory*, A.J.S 82.
- Melucci, P.,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2)(새로운 사회 운동과 참여 민주주의, 정수복 역, 1980, 문학과지성사).
- Meyer D. S. & N. Whittier, 1994, *Social Movements Spillover, Social Problems*.
- Moore, Barrington, 1966, *The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 Boston, Beacon Press.
- Mueller, C. M., 1992, Building Social Movement Theory in Aldon Morris and Carlo McClun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 Press.
- Nedelmann, B. 1984, New Political Movements and Changes in Process of Intermedia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23(6).
- Offe, C., 1985, New Social Movement :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3(1)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이병천, 박형준 편저, 1993, 의암출판사).
- Paige, Jeffrey M., 1975, *Agrarian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Export Agriculture in The Undeveloped Sorld*, NY, The Free Press.
- Petras J F., 1985, New Perspectives on Imperialism and Social Class in the Periphery(주변부 사회구성체론, 정민 편역, 1989, 사계절).
- Pinard, M., 1971, *The Rise of a Third Par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bert, Benford, 1997, An Insider's Critique of the Social Movement Framing Perspective, *Sociological Quarterly*, 67(4).
- Rochon, T. R. & D.A. Mazmanian, 1993, Social Movements and the Policy Proces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Rucht, Dieter, 1992, Themes, Logics and Arenas of Social Movements : Conceptualization and Problems, paper presented as the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Limerick, Ireland.
- Schiller, H L., 1984,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제국주의, 강현두 역, 1988, 현암사).

- Schramm, W., 1957, *Twenty years of Journalism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 Schumaker, P.D., 1975, *Policy Responsiveness to Protest Group Demands*, *Journal of Politics*.
- Schwartz, D. C., 1972, *Political Aliance: The Psychology of Revolution's First Stage* in J. Feierabend, R. Feierabend and T.R. Gurr, eds., *Anger, and Politics*, NJ. Prentice-Hall.
- Scott A., 1990, *Ideology and New Social Movements*, London : Unwin Hyman.
- Steven, Buechler, 1997,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in S.M. Buechler and E. Kurt Cylike, Jr., eds., *Social Movements: Perspectives and Issues*, Mountainview, CA, Mayfield.
- Theda, Skocpol, 1979, *State a d Social Revol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Univ. Press.
- Tarrow, 1996, *States and Opportunities : The Political Structuring of Social Movements*, in D. McAdam, J.D. McCarthy and M.N. Zald(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illy, Charles,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Addison-Wesley.
- _____, 1999, *From Interactions to Outcomes in Social Movements* in M. Giugni, D. McAdam and C.Tilly eds., *How Social Movements Matter*, Mi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Touraine, A., 1988, *Return of the Actor : Social Theory in Postindustrial Society*, Univ. of Minnesots of Minnesota Press..
- _____, 1992, *Critique de la Modernite*, Fayard, Troisieme Partie

Ch. 3(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이병천, 박형준 편저, 1993, 사계절).

Trimberger, Ellen A., 1978, *Revolution from Above: Military Bureaucrats and Modernization in Japan, Turkey, Egypt, and Peru*, Nes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Rivers, William L. & Schramm, Wilber, 1969, *Responsibility in Mass Communication*, NY : Harper & Row Publishers.

Wilson, W. J., 1973, *Power, Racism and Privilege*, N.Y. : Free Press.

Wolf, E., 1969, *Peasant Wars in the Twenties Century*, NY, Harpwr and Row.

<초록>

한겨레신문 창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언론민주화 운동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한겨레신문의 창간과정을 사회운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고찰키 위해 연구과제와 범위를 창간의 구조적 배경, 창간운동이 가능했던 집합행동의 기회, 창간운동의 자원동원화 과정, 창간운동의 결과로 분류해 설명을 시도했음.

이론적 논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언론의 성격, 시장경제하의 언론의 성격, 정치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 사회운동의 동원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연구의 분석 틀은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과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창간결과로 3원화시켰음. 이는 창간운동의 배경으로서의 시대상황은 그 일반화가 가능한 반면, 한겨레신문 창간은 일회적 성격의 한계가 있고, 창간이후는 사회운동과 구별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임.

이상과 같은 분석 틀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창간운동의 배경, 창간운동 과정, 그 결과를 설명코자 했으며 그에 따라 창간운동의 구조적 배경에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언론의 성격, 언론의 생존전략과 시장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창간운동의 과정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및 언론민주화 운동, 창간과정에서의 집합행동의 기회를 설명했음. 이어 창간 조직화 과정은 창간 발기 추진위원회, 창간발기인대회, 창간발기인의 의의 및 계층별 분석, 창간을 위한 행정절차, 새 신문 창간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 등을, 창간운동의 동원화 과정은 주주의 납입 및 직업, 종교별 특성 분석, 창간기금 모금을 위한 동기부여 등을 분석했음. 창간 운동의 결과는, 한겨레신문의 정체성을 창간사, 윤리강령 분석, 편집전략과 편집국, 신문체제 구성의 분석을 통해 설명했으며 이어 창간의 정치 사회적 영향은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언론기업의 카르텔 파괴와 경쟁심화, 새 신문의 기존 언론계 편입과정에 이어 창간이 언론문화 등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키로 했음.

결론은 한겨레신문이 사회운동, 좁게는 언론민주화 운동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 연구의 한계로는 이 신문이 창간이후 십여년이 지난 후 창간 과정에 국한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을 언급했음.